

K E D I

#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2004 11+12월호 Vol. 31. No.6

<http://www.kedi.re.kr>

- 특별기획 1 - 고교교육 정상화 및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고교-대학연계」를 통한 대입 특별전형 연구 : KEDI 연구원
- 특별기획 2 - 학습사회,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 파워인터뷰 - 러셀박사 (Terrence Russell, Exactive Director of AIR)
- 세계의 교육 - 영국 · 일본 · 중국 · 독일

Nov°Dec

## “가난의 대물림”과 “교육복지”

이종재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cjlee@kedi.re.kr



우리 사회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듯이 공부하는 학생의 처지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력(學力) 세습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난의 대물림”이 현실로 부각되기도 한다. 학력의 세습현상이나 가난의 대물림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징표가 된다.

교육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크게 보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자녀의 소질과 재능을 키워나가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둘째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다. 기회의 균등은 “획일적인 교육”을 의미하지도 않고 “동등한 결과”를 보장해야 함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기회균등의 참다운 뜻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 이외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한다. 정부가 할 일은 환경의 제약을 좀더 적게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일이다. 셋째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노력해도 교육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바로 “복지정책”이 된다. 교육에서도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은 소모적으로 비용만을 쓰는 것은 아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을 때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소극적인 측면은,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된다. 이에 더하여 보다 적극적인 복지프로그램은 우리가 치러야 할 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들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된다. 이것이 가능할 때,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생산적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 중에서 “생산적 복지”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과 계층이 있다. 이들을 정책대상 집단(policy target group)이라고 명명할 때, 여기에는 다음의 대상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장애인, (2) 저소득계층, (3) 교육낙후 지역, (4) 초·중등학력 미취득자, (5) 외국인 근로자 자녀, (6) 탈북자 자녀, (7)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학교중퇴자 등이다. 이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다만 9만 5,000명 중 5만 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유아교육의 확대와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과

고교생의 학비지원이 필요하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계층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의 중층구조”를 안고 있다. 소득이 없고,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의 교육기능이 취약하고, 장애를 안고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층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교육부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학업부진학생의 지도와 심리상담, 급식, 보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다 효과적인 도시저소득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방법을 시범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업이다. 교육낙후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역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지역적으로 차등적으로 접근하는 한 예가 된다.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중등학교 학력을 갖지 못한 인구는 800만 명에 이른다. 졸업장이 없는 설움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이들이 쉽게 학력을 취득하여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63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 중 불법체류자는 약 29만 명에 이른다. 합법체류 학생이 840여 명, 불법체류학생이 14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학교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 이탈 국내정착자(탈북자)는 3,500여 명에 이르고, 이 중 20세 이하가 711명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탈북의 과정”에서 심각한 학습결손을 보이고 있어 국내 학교교육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정착과정에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학교에서 “따돌림”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학교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학습결손과 학습장애를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매년 중퇴하는 학생이 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왜 중퇴를 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은 정부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집단과 계층별로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지, 교육의 그늘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의 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돕는 일은 정부만이 할 수는 없다.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의 자녀교육에 나눔과 보살핌을 통하여 작은 정성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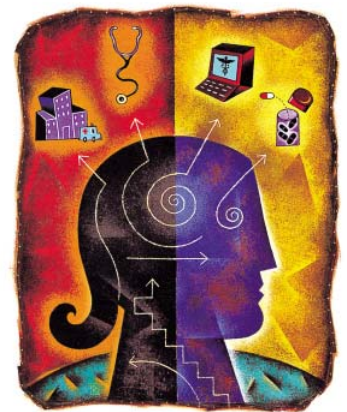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복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종래의 학생·학부모연구실을 확대, 개편하여 학생의 교육복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대상 집단(policy target group) 중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을 연구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 자녀의 교육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초·중등학력 미취득자를 위한 사이버 교육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기초학력미달학생과 학교중퇴자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설정하여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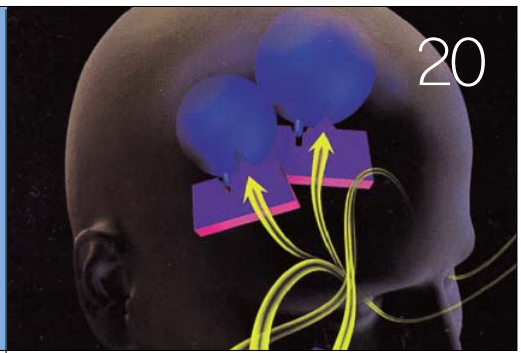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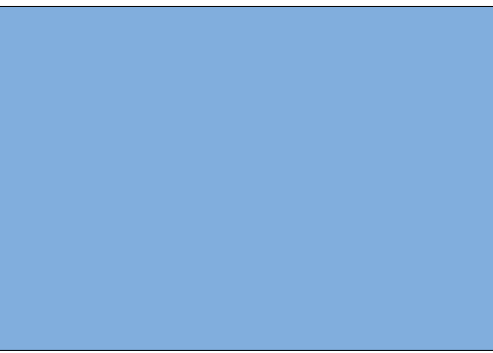
# CONTENTS

Educational Development

2004/Nov°Dec

발행인칼럼 - “가난의 대물림”과 “교육복지” _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cjlee@kedi.re.kr	2
Power Interview	6
“통계시스템의 도움 없이는 어떤 정책 결정도 하기 어려워...” _ 러셀 박사(Terrence Russell, Executive Director of AIR) trussell@mailier.fsu.edu 대담 _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소장, sepa@kedi.re.kr	
Project 특별기획 1 - 고교교육 정상화 및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고교-대학연계」를 통한 대입 특별전형 연구 : KEDI 8년 연구	10
· KEDI 8년 연구 시작, 대입 특별전형 운영 개선을 모색한다 _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kwang@kedi.re.kr	
· 고교교육 다양화, 그 방향은? _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garden@kedi.re.kr	
· 미국 8년 연구 _ 조덕주   건국대학교 교수, chodj@konkuk.ac.kr	
Project 특별기획 2 - 학습사회,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연구	32
· 평생학습시대, 학습국가를 건설하자 _ 이재분   공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전략기획특임팀장, jblee@kedi.re.kr	
·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OECD국가 중 ‘최하위’ _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donmin@kedi.re.kr	
· ‘공부의 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한 곳, 학점은행제 _ 백은순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운영실장, esbaik@kedi.re.kr	





- 평생학습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평생동안 할 수 있는 학습체제다\_ 정영식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실, nurunso@kedi.re.kr
- 평생학습, 중앙아닌 '지역'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_ 김남선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연구소장, namshun@daegu.ac.kr
- 독일의 평생교육\_ 권미연 | 베를린 통신원 miyun65@hanmail.net

### World Education 세계의 교육

71

- 영국 - 영국교육에서 가장 잡음이 심한 곳, '고교내신' \_ 최봉섭 | 런던 통신원, choi@brcu.com
- 일본 - 최근 일본은 대입제도를 다양화 시키고 있다\_ 윤종혁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장, jonghyeok@kedi.re.kr
- 중국 - 중국의 대학입시제도 어떻게 나갈 것인가?\_ 유경희 | 북경희문고등학교 교사, liujingji@hanmail.net
- 독일 - 독일의 교수 임용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_ 김종기 | 베를린 통신원, ki1325@hanmail.net

### 연구물 살펴보기

94

- 학습장애아 교육, 일반 학생과 똑같이 다루려는 미국의 책무성 시스템에 대하여\_ 정택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실장, thchung@kedi.re.kr

<http://www.kedi.re.kr>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이종재  
 홍보출판심의위원회 | 김창환 (위원장) 김왕준, 김정원, 박상철, 박현정, 변종임, 유현숙, 정택희, 최도민  
 홍보출판팀장 | 김왕준  
 홍보출판팀 | 채경은, 김태현, 노근철, 전지영, 최용화, 강민정  
 디자인 | 디자인리서치 02) 704-0492  
 home page | www.kedi.re.kr ISSN-291X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04년 10월 30일 발행 | 격월간 등록번호 | 문화바 02718 등록변경 | 2001년 4월 11일 값 4,500원  
 구독문의 • 02) 3460-0235 keditor@kedi.re.kr

## 러셀 박사(Terrence Russell, Executive Director of AIR)

“통계시스템의 도움 없이는 어떤 정책 결정도 하기 어려워...”

- 미국에서는 대학 단위로도 통계자료를 개발하여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Terrence Russell, PH. D | 고등교육연구협의회 사무총장, [trussell@mailier.fsu.edu](mailto:trussell@mailier.fsu.edu)

장명림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소장, [sepa@kedi.re.kr](mailto:sepa@kedi.re.kr)



Q 고등교육연구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A 고등교육연구(Institutional Research : IR)는 한마디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론과 실천적 연구를 모두 포함합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는 구체적으로 강의 및 연구 활동, 학생 및 교수, 교육과정, 대학 경영 및 대학교육 정책을 비롯해 제반 분야가 다 포함되지요. 미국에서는 고등교육 정책 연구 자체를 IR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IR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미국의 대부분 대학들은 IR 책임자(Director of IR)를 고용해 대학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경향입니다. 참고로, IR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및 실무자들의 연합체인 AIR(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에는 약 1,700여 개의 대학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대학들은 지역별로도 연합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유럽 지역, 호주 지역,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IR 연합체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호주 지역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및 동남아 지역은 최근 들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만 및 일본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재작년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이들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Q AIR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미국의 AIR에서는 매년 통계자료를 활용해 고등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정해 최대 1만 5,000달러까지 지원하고 있고, 학자 및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연간 3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매년 학자, 실무자,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초청해 워싱턴에 소재한 교육통계센터에서 10일 정도 통계활용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해 2개의 학술저널(Research in Higher Education, New Direc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과 1개의 온라인 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분들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샌디에이고에

서 개최할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고로, IR 또는 AIR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airweb.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quality assurance)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체로 네 가지 방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 및 학과의 평가에 관한 평가인증제(creditation)입니다. 미국의 경우 몇 개의 주 단위로 자율적인 지역별 평가인증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전공분야별 평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학과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학내 자체평가(quality assessment)로 대학별로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정부에서 주립대학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평가입니다. 넷째는, 대학교육의 질적 관리(quality management)로 주로 대학이 외부기관을 지정해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Q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평가(quality assessment)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A 대학마다 다양한 자체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대학본부의 평가와는 별도로, 각 학과마다 독특한 평가방법(program review)을 개발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과별 평가는 평가결과가 구체적으로 교수개인의 신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학과 교수들이 모여 앉아 지난 1년 동안 강의, 연구, 봉사활동 등 자신들이 활동한 것을 타 교수들과 함께 자체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수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대학이라는 곳의 속성상 자체평가가 활성화된다면, 다른 어떤 외적인 평가방법보다도 대학교수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듣



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대학의 내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직접 참가하게 하는 등 별도의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대학본부에서 학과의 통폐합이나 재편 등을 위해 별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한국의 경우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정부의 평가가 핵심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대학의 책무성에 관한 평가(accountability)는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를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지난 90년대 초반에는 대학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는 평가결과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소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포괄적으로 도입되는 경향입니다. 참고로, 45개 이상의 주에서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 지원책을 도입했거나 또는 도입했다가 폐지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많은 주에서 평가결과를 예산배정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예산과의 연계성과 더불어 대학의 실행성과 자체를 주의회 및 시민들에게 알려서 소위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성과 보고(performance reporting)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이면에는 신뢰할 만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항상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Q 대학의 설립목적이 각기 다른데, 외부평가에 있어 각기 다른 대학에 대한 평가 지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주된 교육목적(mission)이 무엇이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의 교육목적이 연구에 있다면 연구성과를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교육이 목적이라면, 교육(또는 강의) 성과를 주된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느 한 가지 평가기준을 설정해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이 4년제 대학의 유형을 연구중심대학(2개 유형), 석사학위 수여대학(2개 유형), 및 학사학위 수여대학(2개 유형) 등으로 다양화해 어느 대학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심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위 분류에서 학사학위 수여대학)은 해당 교수들이 사실상 많은 시간 수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지요. 하지만, 연구 부담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수를 채용할 때에도 별도의 연구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보다는 실무경력을 많이 요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지원서를 낸 학생들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연구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은 아니지만 강의의 질이 높은 강의중심대학 두 곳에서 입학통지서를 받는 경우 어느 곳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연구중심대학에서는 학부교육보다는 대학원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우 강의는 강의조교(teaching assistant)들이 담당하지만, 강의중심 대학에서는 강의 경험이 많은 소속 교수가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설립목적에 따라 각기 다르게 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이는 불합리하겠지요.

Q 한국에서도 지난 90년대 이후 대학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매년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오히려 평가 자체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미국



에서는 외부 평가에 대해 어떻게 평가자료를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A 주정부 또는 외부 평가기관에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평가 자료로 활용합니다. 주정부의 경우, 대부분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의 책무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주에서는 학생들의 전학까지도 추적해 학생들의 등록 및 졸업률을 산출하는 등 나름대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및 세금번호(Tax Number) 등을 연결해 학생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연방단위에서 보다 철저하게 학생들의 등록 및 이동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보호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개인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의 등록 및 이동,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등에 관한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정책연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가자료는 통계관리시스템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확보되고, 또 그 자료를 통계적으로 가공해 평가에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 어느 자료보다 높다고 봅니다.

Q 평가에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누가 통계자료를 개발하고 있고, 어떤 통계자료들이 활용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A 연방정부 단위의 통계는 주로 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관리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통계는 주정부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은 단순히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대학단위에서 통계자료를 과학적으로 개발해 관리하는 노력이 선행될 때 연방정부 단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관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연구책임자(Director of IR)를 고용하여 대학 단위로 통계자료를 개발하고 관리하여 이를 대학의 주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하다 보니, 최고 정책결정자들은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학교를 평가해 나름대로 향후의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연방정부의 교육통계센터에는 여러 가지 대학 관련 통계시스템이나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IPEDS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nces.ed.gov](http://nces.ed.go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대학과 관련한 통계의 총체적인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PEDS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지만, 타 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한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이 각종 통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에 관한 통계는 미국의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많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이 없이는 과학적인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어렵게 되고, 그것은 결국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만큼 부정확한 자료에 의해 부실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게 되지요. 결국은 투자한 만큼 얻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처음에는 이러한 데이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통계시스템의 도움 없이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통계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상세히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Project 1

- 특별기획 1: 고교교육 정상화 및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고교-대학연계」를 통한 대입 특별전형 연구: KEDI 8년 연구
  - » KEDI 8년 연구 시작, 대입 특별전형 운영 개선을 모색한다
  - » 고교교육 다양화, 그 방향은?
  - » 미국 8년 연구

K E D I



# KEDI 8년 연구 시작, 대입 특별전형 운영 개선을 모색한다

## - 현행 대입 특별전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장망희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kwang@kedi.re.kr

한국에서 대입제도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한국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은 앞으로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대학입학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 온 것도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고교교육의 대입 종속의 문제와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만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교육이 지금까지 대입을 위한 문제풀이 교육으로 치닫고 있어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등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교육에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점수 위주의 교육, 문제풀이 위주의 학교교육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입학제도의 운영 개선을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KEDI 8년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 연구를 시작했다.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대학은 교육이념과 분야별 특성에 맞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입학전형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무의미한 문제풀이식 공부의 악순환과 무한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여기에서 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원의 일부에 대해서는 수능이나 내신 등 교과별 성적이나 석차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교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것이 그대로 대학입학전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는 현행의 대학입학제도의 틀에서 볼 때 주로 특별전형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현행 대입제도 내에서 특별전형이 갖는 의미와 위치, 그리고 그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 발견되는 현행 특별전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향후 개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 현재 특별전형 모집 비율은 36.6%에 달하고 있다

대학입학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사정기준, 즉 고등학교의 교과성적, 국가가 출제하고 관리하는 시험성적, 대학별 고사, 학생의 특기나 독특한 적성 등 무엇을 합격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1997년 이후의 변화(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별 고사 등을 주 전형자료로 하고,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자료 등을 전형보조자료로 활용)와 2002년도 이후가 주목된다. 특히



2002년 이후는 주로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 다시 말하면 특별전형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 전형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 전형과 특별전형이 확대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1998년 이후, 즉 1999년도부터 특별전형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대입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부터 그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 2005년도 현재 특별전형 모집비율은 36.6%라고 하는 높은 비율에까지 이르고 있다.

〈표 1〉 특별전형 모집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특별전형	9.7	9.5	18.7	21.5	23.4	32.3	32.7	36.6	36.6%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계획주요사항』 1997~2005.

이 같은 특별전형 확대는 1998년 「2002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특별전형의 의미를 부각시킨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선안 발표 당시에 교육부가 배부한 해설서를 보면, '일반 전형방식으로 점수라고 하는 한 가지 척도와 기준으로 석차화하여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경시하고 지나친 입시 경쟁을 불러 일으켰던 과거 학생선발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기, 경력, 품성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중시하는 특별전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교육부: 1998:10). 여기에는 특별전형이 다원화시대, 다품종·소량생산 방식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선발 방법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적 줄 세우기가 만연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 운영에 대해 다양한 준거로 잠재력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른바 「열린 전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특별전형의 확대와 운영 실태

고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학입학전형에서 특별전형이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해당 대학이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인 보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내용상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에서 특별전형이 처음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교육적격자 선발이라는 명분하에 대학별로 입학 정원의 10%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이른바 무시험전형)한 1950년대 후반(1958~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체육, 음악,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정원내 특기자 전형이 생겼고, 1994년부터는 문학, 어학, 수학, 과학 분야의 특기자 전형과 야간학과 설치대학의 산업체 근무자의 특별전형이, 1996년도부터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등이 도입되었다. 고등교육의 수혜기회가 학생자신의 조건이 아닌 사회적 조건에 의해 제한된 학생들에 대한 배려 내지는 보상적 차원의 입학전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 이후 좀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2년도 전공적성을 중시하는 대학입학전형제도가 적용되기 시작되면서부터는 다양성과 함께 그 비율 또한 크게 증대되었다(표 1)참조. 1998년도의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가 대학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특별전형의 모집인원 및 비율을 큰 폭으로 증가시킨 셈이다.

1)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 전형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 전형과 특별전형이 그것이다. 고등교육법 제 34조에 규정하는 있는 바에 따르면, 일반전형이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특별전형이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해당 대학이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인 보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현재 특별전형 모집 비율은 36.6%라고 하는 높은 비율에까지 이르고 있다.

최근 대학들의 학생 선발을 보면, 정시모집에서는 주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일반 전형을, 수시모집에서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등 다양화한 전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이 중 특별전형의 내용을 보면, 특기자, 각종 대회입상자, 발명가, 어학우수자, 선·효행자, 학교장 혹은 교사 추천자, 학생회 임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대학별 독자적 기준 유형만 보더라도 2000학년도에 약 12종류였던 것이 2004학년도에는 약 27종, 2005학년도에는 38종류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0, 2004, 2005). 2005년도 전형 유형별 및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비율은 <표2>와 같다.

2005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비율을 살펴보면,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모집비율 26.1%를 비롯하여 특별전형에 의한 모집비율이 36.6%에 달한다. 그 중 자기추천, 학교장 추천, 교사 추천 등 추천 입학자의 비율은 10.4%로, 2000년 3.8%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천 입학에서 추천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교장, 과목담당교사, 담임교사, 동창회장, 인간문화재, 학교운영위원장, 공익단체장, 지역단체장, 특별활동 지도교사, 종교인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도 그 특징 중의 하나이다(<표3> 참조).

교육부 고시에 제시된 특별전형의 유형을 보면, 특기자 전형, 취업자 전형, 실업계 고교 등 특별전형, 정원의 특별전형(농어촌학생특별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학의 독자적인 기준, 산업

<표2> 2005학년도 전형유형별 및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단위:%)

전형유형	수시1 모집인원	수시2 모집인원	정시 모집인원	전체 모집인원	비율
일반전형	4,935	49,284	195,736	249,955	63.4
특별전형					
취업자	472	2,003	1,266	3,741	0.9
특기자 전형*	137	7,755	554	8,446	2.1
대학독자적 기준**	13,393	80,498	8,692	102,583	26.1
정원의외***	3,201	13,301	13,152	29,654	7.5
전체	17,203	103,557	23,664	144,424	36.6
전체	22,138 (5.6)	152,841 (38.8)	219,400 (55.6)	394,379	100

\*특기자 전형의 세부유형으로는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체육, 컴퓨터 등이 있음

\*\*대학별 독자적 기준 전형의 세부유형으로는 각종 대회 입상자, 어학우수자, 추천자, 내신성적 우수자, 수능우수자 등이 있음

\*\*\*정원의 외 전형의 세부유형으로는 농어촌 학생, 실업계고교 출신자 등이 있음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4),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표 3〉 전국대학 추천입학 비율 추이

연도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모집인원	14,078	19,197	34,670	38,133	35,525	41,206
비율	3.8	5.2	9.3	9.9	9.0	10.4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계획주요사항』, 2000~2005.

대 특별전형 등이 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1) 차등적 보상 기준의 특별전형: 사회기여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 외 3%, 특수교육대상자전형-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실업계 고교 출신자 등), 2) 특기형 특별전형(학생들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한 전형) : 특기자, 특수기능, 자격보유자 등, 3)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추천형 특별전형(학교장 추천, 대안학교출신자 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 유형 구분은 그 성격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단순히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고등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해당 대학의 독자적 기준', '차등적인 교육적인 보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근 수년간 특별전형은 매우 높은 비율로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다양화되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별전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조건과 내용을 정원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보면 〈표4〉와 같다.

### 현행 대입 특별전형 운영의 문제점

최근 대입제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특별전형의 다양화 경향이며, 그 비율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특별전형을 통한 대입 전형의 다양화는 1) 대학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입학전형 방법을 개발·시행하는 것, 2) 중등학교 학생들이 학력 위주의 입시 준비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충분히 신장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

한다는 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교육부, 1998), 고교의 성적, 수능점수 등 성적과 석차가 주된 요소가 되고 있는 일반전형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특별전형은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선발 등 다양한 전형 유형이라고 하는 관점과 함께, 대학에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전형 실재를 보면 그 의도한 바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몇 가지 점이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소질과 적성 개발에 따른 다양한 능력 평가라고 하는 특별전형의 의도와는 다른 두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특별전형을 '무시험전형'으로 오해하여 고교에서의 기본적인 지식교육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특기·적성의 강조가 모든 학생이 모든 부분을 모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만능학생에 대한 요구로 학습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일련의 개선 없이는 대학의 대중화 시대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일류 명문대 선호 현상과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누구라도 원한다면 대학에 진학 가능한 상황)가 병존하는 한, 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 사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둘째, 대입 특별전형의 백화점식 나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철학과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는 잡동사니 오류(omnibus fallacy)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특별전형에서 제시되고 있는 특기 유형만 보더라도 41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들 특기 종류들이 교과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과연 이것들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정상화에 어떤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특기의 '내용' 면에서 그 종류를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요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시대의 특정



〈표 4〉 2005학년도 특별전형의 유형

정원별	전형유형	세부유형	대학수	모집인원
정원 내	특기자(41종)	문학 외 41개 중	505	8,446
		취업자 전형	74	3,741
	대학별 독자적 기준 (38종)	국가유공자 및 자손	136	2,368
		사회봉사자 및 자녀	49	904
		선·효행자	51	722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자녀	89	988
		학교장, 교사 추천자*	192	37,822
		기타 추천자(학교장, 교사 이외)*	87	3,364
		기능 우수자	97	4,049
		각종대회 입상자*	23	379
		수상자*	4	129
		기관장 표창자*	2	60
		교과성적(내신) 우수자*	63	13,760
		특정전공우수자*	2	128
		수능성적우수자*	23	2,893
		어학 우수자*	40	1,406
		조기졸업자*	1	60
		특성화고 출신자	83	10,675
		특수목적고 출신자*	6	66
		해외유학생	5	55
		만학자, 전업주부	86	1,636
		선교사 자녀	1	40
		지역할당	72	6,192
		종교인 자녀	27	445
		공무원, 교직원 자녀	32	1,123
	대안학교	19	4,268	
	학생회임원, 리더십	23	1,096	
검정고시 출신자	2	20		
기타(생략)				
정원 외	특별전형 (5종)	농어촌 학생	255	10,520
		실업계고교 출신자	224	9,654
		재외국민과 외국인	182	6,416
		특수교육대상자	64	1,342
		산업대학위탁생	13	1,722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6~7쪽

\*는 성적과 상당부분, 혹은 일부만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형 유형을 표시한 것임

사회가 특정 분야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제도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교 졸업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입의 다양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입 특별전형이 고교교육 프로그램 이해와 관심과는 크게 상관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 되고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특별전형에서 강조하는 개개인의 특기, 적성, 흥미는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할 요소임에는 틀림 없지만, 학교교육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켜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특히 특기자 전형과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학생 개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특기자가 대입 특별전형에 지원한다기보다는 대입을 위한 특기자, 소위 '대입용 특기자' 만들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의 남발과 상장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경시대회 참가는 그 부작용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최근 일부에서 행해지는 면접, 구술시험 대비 집중 과외는 대입 특별전형이 낳은 새로운 사교육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특별전형의 운영을 보면 객관적으로 점수화가 가능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특별전형은 개개인의 다양한 특기 계발을 통해 성적제일주의 교육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전형방법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특별전형의 유형 중 가장 많은 학생 선발 형태인 학교장·교사 추천입학의 경우(2005학년도 192개 학교 적용, 37,822명을 선발), 대부분이 성적을 중심으로 추천되고 있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sup>9)</sup> 이는 추천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자 성적 중심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는 고교가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각 학교별로 추천 학생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각

학생에 대한 추천도 오직 내신 성적 우수자가 주로 되고 있으며, 여기에 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각 대학에 지원하는 문제까지 겹쳐 학교장 추천입학제는 명목상의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sup>9)</sup>

결과적으로 추천입학은 고교에게는 추천서 작성으로 인한 새로운 부담을, 대학에게는 각종 추천서 신뢰성을 두고 그 판단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 셈만 되고 있다. 이 밖에도 특별전형 유형 중에는 교과 성적(내신)우수자(63개 대학, 13,760)을 비롯하여, 어학우수자(40개 대학, 1,406명), 특정전공우수자(2개 대학, 128명), 수능성적우수자(23개 대학, 2,893명), 조기졸업자(1개 대학, 60명), 기타 기관장표창자, 대학 과정수료졸업자 등 성적을 요건으로 하거나 성적과 관련있는 전형 유형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별전형을 통해 대입제도가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는 표면적인 사실과는 달리, 실제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성적이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대입 특별전형 운영의 개선 방향 - KEDI 8년 연구의 관점에서

이상에서 대입 전형의 다양화, 특별전형의 다양화는 본래 의도했던 바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2년도 이후 대입 특별전형 확대에서 의도했던 새학교 문화가 창조되었다거나, 고교교육이 정상화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렵다. 대입준비를 위해 교육 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여전하며 아이들은 0교시 수업, 자율이라는 이름의 반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수업대입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식 공부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에 없던 면접, 구술시험을 위한 집중 과외까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서 대입 전형의 다양화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키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더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교육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 경비를 쏟아 붓고 있지만 국제비교조사 결과를 보면 정작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협동적 학습능력 등의 부분에서는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sup>2)</sup>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교육부문의 과잉투자 저효율적인 결과는 대입에 종속된 지금의 학교교육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최근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입 특별전형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육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대입에 종속되지 않은 고교교육, 성적 줄 세우기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기, 적성, 흥미를 중시하고 그것을 대입에 반영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부터 수행하기 시작한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특별전형 연구: KEDI 8년 연구’는 바로 이 문제를 중심적인 연구 과제로 한 중장기 연구이다. 이 연구는 비록 연구 범위를 대입 특별전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단순한 대입 특별전형 연구를 넘는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교가 대입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이 교육이념과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입제도 운영 개선을 위하여 고교와 대학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이 문제의식들은 앞에서 지적한 대입 특별전형의 문제점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이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 특별전형’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특별전형 운영상에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서도 성적과 석차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특기와 적성, 흥미를 중시하는 고교교육, 이른바 고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 특별전형’이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1) 대학 입학 정원의 일부를 내신과 수능 점수에 의존하지 않고 고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학생의 성취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2) 고교로 하여금 학교가 지향하는 바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대학은 고교의 교육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 그 성과를 함께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대학 입학제도로 막혀 있던 고교와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양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해 나가는 고교-대학의 윈윈 전략으로서, 고교-대학의 상호 개선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이 지금까지의 대입 특별전형과 크게 다른 점은, 하나는 학생의 개별 성취만이 아닌, 고교교육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학생

2) 양승실(2003) 연구에 따르면, ‘추천입학대상자 추천에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문항에 고교생 응답자의 83.1%, 교사의 78.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1998년도 고교추천기준 분석 결과를 보면 교과성적 및 모의고사 성적 20~80%, 출결상황 5~20%, 특별활동 10~20%, 봉사활동 5~20%, 경시대회 수상실적 1~30%를 반영하여 추천학생을 선발하였다.

3) 서울대의 2004학년도 입학전형의 특징 중 하나는 정시모집에서 추천서를 폐지한 것이다.

4) OECD PISA2000자료 분석에 의하면 읽기/수학 흥미도는 20개국 중 19위, 읽기/수학 자아개념도와 협동적 학습능력은 모두 20개국 중 20위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제3회 국제 수학·과학교육조사 제2단계조사(TIMSS-R) 국제조사결과보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수학, 과학의 성적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수학 26개국 중 2위, 과학 38개국 중 5위), 수학 선호도는 38개국 중 34위, 과학 선호도 역시 24개국 중 23위로 하위에 머물고 있다.

의 성취를 대입의 전형요소로 삼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고교와 대학이 정보교류와 상호대화의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행되는 KEDI 8년 연구를 통해 제시되겠지만, 우선 앞에서 지적한 대입 특별전형의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대입 특별전형은 개개인의 특기, 적성, 흥미가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 어떻게 연관되어 계발, 발전된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즉, 고교의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그에 참여한 학생의 성취를 입학 전형 요소로 반영하여 전공 분야에 맞는 대학에 추천 전형 방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sup>5)</sup>

둘째, 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려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는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성적과 석차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우수학생’이란 무엇 인지를 명확히 하는 등 대학과 전공 분야가 요구하는 명확한 인재상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그저 선발 대상의 특기 분야나 조건을 나열해 놓는 것은 백화점식 나열 문제를 가중시킬 뿐이며, 소위 ‘대입용 특기자’와 같이 변형된 인재 양산을 대학이 나서서 부추기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입에 관련된 주요 교육개념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학력’, ‘참여 학업성취’와 같은 개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대입 특별전형은 현재와 같이 고교와 대학이 단절된 상태에서 제공되는 점수화된 개개인의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교와 대학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협의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

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고사의 점수, 내신 점수가 고교와 대학 간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관계요소라고 한다면, 특별전형에서 고교-대학 간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나 그에 대한 개인의 활동과 성취 기록 등이 될 수 있다. 시험이나 고교 성적 이외의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고교에 대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정보, 교육 내용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되며, 동시에 그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평가와 결과 등에 대한 대학 측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고교 진학지도 및 대학별 학생선발 자료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는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떤 대입 개선안이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교-대학 양자간의 상호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가 제안하고 있는 고교-대학 협의체 구성은 이런 의미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넷째, 대입 특별전형 중 특히 추천입학과 같은 경우, 추천서는 학생의 생활과 성취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점수와 같은 객관화된 숫자 대신 추천서를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는 구체적인 학생의 정보, 즉 학교생활과 성취 내용·결과는 물론,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대학 선발의 전문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 대학·모집단위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모형 개발을 유도하여 대학의 교육목표(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기술교육중심 등) 및 모집계열에 따른 전형개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입전형의 전문화 체제를 강화

5) 예를 들어 천문학 전공의 경우, 고교 재학시 고교의 특성있는 천문학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특별활동으로 우주관측에 참여한 활동 등 고교시절에 작업한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고 과학교사의 추천서를 가지고 서류전형으로만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기 위한 대학별 노력도 요구된다. 학생선발을 위한 인적·행정적 체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들이 학생부를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학 입학자의 선발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한국의 교육상황이 미국과는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한국형 사정관제 구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다양한 방향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학생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부분의 상대적 결여 또한 수용하는 것임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소지한 능력과 결여된 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에 대해 어떤 교육적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과 방법을 입학 정보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얼핏 보기에 이 제안은 대입제도 운영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제시한 다양한 능력들이 대학이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향후 어떻게 심화·발전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 제시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입학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서로 다른 능력이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능에 대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방법은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여기서 대학의 독자성도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이 특별전형을 다양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고민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상에 제시된 내용들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다. 이런 점에서 대입특별전형의 개선 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교와 대학 교육을 연계관점에서 보려는 KEDI 8년 연구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목적고, 특성화고교, 일반 고교

등 고교 유형별로 각각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 평가 방식은 어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교교육의 결과는 어떻게 대입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향후 이 연구를 계기로 고교교육은 왜 존재하는지를 재속고하면서, 고교교육과 그에 따른 대입전형의 모델 개발이 고교 관계자, 대학관계자, 교육전문가, 교육정책입안가 등 관계자들의 협력적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67]

참고자료

연도	대입제도
1945~1953	대학별 단독시험기
1954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 대학별고사 병행기
1955~1961	대학별 시험 또는 무시험과 내신제 병행기
1962~1963	대학입학 자격 국가고사기
1964~1968	대학별 단독 시험기
1969~1980	대학입학예비고사, 대학별 고사 병행기
1981	대학입학예비고사, 고교내신 병행기
1982~1985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병행기
1986~1987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병행기
1988~1993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 병행기
1994~1996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대학별고사 병행기
1997~2001	대학별 제한적 자율결정기 <sup>9)</sup>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병행기
2002~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및 구술고사 병행기

## 고교교육 '다양화', 그 방향은?

김정원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garden@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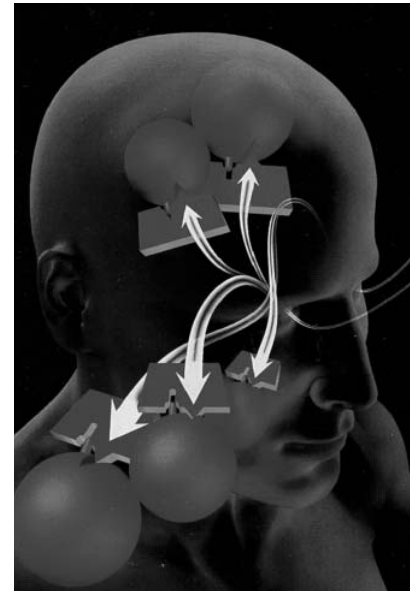
다분히 이 시대 국가교육정책의 화두는 '다양화', '특성화'이다. 고교평준화 논쟁에서도 획일성이 아닌 다양화가 그 핵심 쟁점이며, 대학의 서열화 관련 문제에서도 다양화, 특성화는 그 주요한 해결방향의 하나로 제시되곤 한다. 최근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의 핵심어도 고교교육의 '다양화'이다.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고교교육의 다양화'란 용어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고교교육의 다양화는 어떠한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가?

### 다양화 논의의 두 차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등급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화는 강조된다. 고교평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의 학력 차는 엄연히 존재하며, 그러한 학력 차("학교 간의 다양성")를 부정하고 대학의 학생선발에서 모든 고교 출신 학생들을 같은("획일적") 조건에서 선발해야 하는 상황의 부당성이 강조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고교 간 다양성은 한 시점에서 "학력"이라고 규정되는 기준의 위계적 스펙트럼 상에서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의 고교교육의 다양화란 학교 간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제도적 형식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학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수학, 영어 등의 특정 교과 성적만 포함될 수도 있고 음악, 미술, 체육, 봉사활동 등의 예체능교과나 비교과 교육활동에서의 성취 수준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이 때의 "학력"이 시험점수로서의 학력이 아닌, 작금에 회자되는 소위 "지식기반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어에서의 학력은 사지 혹은 오지 선다형 시험에서의 점수가 아닌, 특정 주제와 관련한 글쓰기 실력일 수도 있고, 말하기 능력 등의 의사표현 능력일 수도 있다. 어떠한 방향과 요소로 학력을 규정하든 여기에서의 '다양성'은 '내용상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 수준에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양화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사용된다. 이는, 특정 교과 혹은 모든 교과 영역에서의 성적이나 능력의 총합을 학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는 학력이 같은 수준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다양화이다. 여기서는 '우수'와 '열등'을 구분하는 일반화된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가치의 다양화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주지교과 이외의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학생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의 교육에 대한 강조는 역으로 말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부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여전히 이 사회의 학교교육을 지배하는 관점은 전자이다. 여기에서는 위계화된 사회와 그 위계상의 상부를 차지하기 위한 학교교육을 통한 경쟁을 인정하고 그 “경쟁력”에서의 학교 간, 학생 간 다양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다양화를 주장한다. 사실 한국의 대입정책들은 이러한 경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경쟁을 활용하여 각종 학교교육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봉사활동점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첨가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지향하고자 한 것이 그것이며, 현 시점에서 독서 기록을 중요한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사지 선다형이나 오지 선다형 문제 풀이 연습 중심의 학교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표방되고 있다(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참조).

사실 치열한 경쟁구도가 한국 학생들의 성취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게 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경쟁구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듯도 하다. 설사 봉사점수를 얻기 위한 목적의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 교실 안 교과학습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갖게 한다면,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봉사점수를 대입에 반영하는 의의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쓰는 능력이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풀이보다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면 에세이 쓰기를 입시에 반영하여 글 쓰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각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경쟁을, 한국의 학교교육을 둘러싼 ‘현재와 같은’ 종류의 경쟁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필요악으로 규정하고 각종 개혁정책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 밖의 교육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한 기반하에서 공적 기구인 학교는 사적 기구로서의 학원이나 다른 사교육에 비해 필연적으로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만 한다. 문제풀이보다 에세이 쓰기를 강조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보다 독서기록

을 입시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학원이나 과외에 비해 “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다. 사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는 공적 기관인 학교가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적 기관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없는 그 자체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세이 쓰거나 독서 이력을 대입에 반영한다면 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대입에서 학교보다는 학원이, 과외가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 차이에 의해 학교 수준이,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이 차이는 현상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 수준의 차이만큼은 어느 학교에서 어느 대학에 얼마나 진학하였는가, 어느 학교에서 의대나 법대에 얼마나 진학하였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수준 차이일 것 또한 분명하다. 대학에서 역시 대학의 “경쟁력”이 없다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면, 이공계 대학 진학 후에도 의대 진학을 위한 휴학이나 자퇴 비율이 높다면, 대학 강의실은 비어 있고 고시촌은 문전성시라니 하는 문제는 여전히 교육과 관련한 사회 문제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을 것이다.

### 다양한 선택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

7차 교육과정 적용 이후 일선 고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선택교육과정 운영이다. 일반계 고교 2, 3학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양화 된 고교교육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선택교육과정이 학교 내에서 그야말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리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선택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흔히 비교대상이 되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학생수 1,621명의 서울의 한 고등학교 2003학년도 입학생의 경

우, 10학년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제외한 11, 12학년 과정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 수는 44개이다. 학생들은 사회과정, 인문과정, 미술과정, 자연물리과정, 자연화학과정 등 5개의 과정(인문, 자연 2개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보다 다양화 되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각 과정별 학생들은 24~25개 과목을 2년동안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과정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이 거의 결정된다. 이를테면 인문과정에 소속된 학생은 모두 세계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이 그것이다(경기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단위배당표, <http://www.kgg.hs.kr>). 이에 비해 미국 Wisconsin 주 Madison의 학생수 2,151명(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므로 학년별 학생수는 비슷하다고 보아야 함)의 한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2002/2003학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은 자연자원과 농학 영역 10개, 미술 영역 10개, 비즈니스 교육 8개, 컴퓨터 과학 4개, 영어 28개, 가족 소비 9개, 외국어 21개, 마케팅 8개, 수학 14개, 음악 17개, 체육 15개, 과학 15개, 사회 22개, 특수교육 26개, 기술 16개, 학문적 능력 함양 1개 등과 함께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각 영역의 강좌 15개, 그 밖의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학점을 얻을 수 있는 영역 8개(도서관이나 교실에서의 교사 도우미, 도서관에서의 학생 활동 도우미, 등등) 등이다.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22학점이며, 이 중 영어 4학점, 사회과학 3학점, 수학 2학점, 자연과학 2학점, 체육 1.5학점, 보건 0.5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도 교과목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교과 영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영역에 개설된 수준별로 종류별로 서로 다른 교과목들 중에서 개인별로 선택하게 된다(West High School, Program of Studies 2002~2003).

두 학교의 물리적 조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위에 제시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수는 96명(행정, 기능직 제외)인데 비해

(<http://www.kgg.hs.kr/>), 미국 Wisconsin주 Madison의 한 고등학교 2004/2005학년도 교직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합하여 모두 188명이다(<http://www.madison.k12.wi.us/west/teacher.htm>). 한정된 물리적 조건속에서 학급별 체제로 운영되는 한국의 고등학교는 선택 범위의 확대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선택은 학교의 선택이며, 학생의 선택은 이수 강좌의 선택이 아닌 과정의 선택이 된다.

학교가 학생의 수요를 조사하여 교과목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말 그대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반영한 것이기 보다 대입에의 유·불리에 기초한 수요이기 쉽다. 수직적 위계 사회에서 선택은 다양화가 아닌 획일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교 학생들의 미래 희망을 물어 보면 단 몇 가지에 한정된다는 한 교사의 말은 그러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특수한 영역의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이른바 “우수아”들이 모이는 “명문고”로 그 사회적 인식이 변질되어 온 과정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다.

대학 취업 스터디 튜터를 맡고 있는 한 외국인에게 비친 취업준비를 위해 학과를 불문하고 같은 공부를 하는 한국 대학생의 모습은 위계화된 사회가 만들어 내는 획일성이 단지 고교교육의 문제만은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한국 학생들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자연스러운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학생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공부만 한다면 대학에 다양한 학과가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중앙일보, 2004. 9. 30).

#### 다양화의 또 다른 차원인 비교과 교육의 가치와 한계

일반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교들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비교과 교육(‘교과외 교육’이라 명명되기도 한다.)이다. 비교과교육에는 동아리 활동, 축제, 각종 체험학습, 인성교육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다양한 교육과정 을 운영한다는 것의 의미는 교과교육과정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밖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이들 다양한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학교들의 비교과 교육활동들은 현행 국가교육과정 체계 내에서 교과로 규정된 영역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교과교육은 "지식교육"의 장으로, 비교과 교육은 "인성교육, 자율성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장으로 구분되곤 한다.

교과교육 영역과 비교과 교육 영역이 구분되고 양자의 역할이 상호 구분되어 있는 형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교과교육과 비교과 교육 사이의 갈등이다. 한편에서는 축제나 각종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학습을 통해 키우기 어려운 "자율성, 협동심, 문제해결력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논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행사가 연속된다는 것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잡기 어렵게 한다."고 반응한다. 또한 "학력 신장은 금방 드러나는 것임에 비해 인성교육의 효과는 그렇지 않다", "교과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임으로 해서 교과 교육 담당 교사들은 '내 일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등의 갈등이 존재한다.

비교과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학교들에서는 한결같이 비교과 교육활동에서의 학생들의 성취가 대입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 점에 대한 회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전국 단위 시험이 그래도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별하게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업을 일정하게 정형화하는데 한 몫을 한다. 이를테면 그것은, 사회과 수업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토론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식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고 문제풀이 연습까지 함께 해야 교사로서 하여금 교사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게끔 한다. 이에 글쓰기 활동 같은 것은 '교과 밖'의 영

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교과수업을 통한 자율성 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고민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교과교육과 비교과 교육 사이의 괴리가 좁혀질 가능성은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된다.

### 고교교육의 다양화, 그 방향은?

공적 기구로서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다양화'는 그야말로 가치의 수평적 다양화 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고 그 가치 구현에 학생들이 참여하려는 의지를 끌어내는 역할, 그것이 공적 기구로서의 학교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것이 학교교육으로 하여금 '다양화' 되는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고 동시에 그러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학교교육은, 현재의 개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가치의 상징인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선호와 같은)이 아니라, 그 사회의 공적 필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거창고등학교가 강조하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등의 "직업선택의 심계"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일이 갖는 가치를 키워나가려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다. 이러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 '인재'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인재'란 영어, 수학 성적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봉사활동 성적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선별된 학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논술 시험이나 독서 이력 등의 보다 "고차원적 능력"을 판별하는 도구로 선별된 학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인재'를 판별하는 기준은, 능력이 발휘되는 대상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능력 그 자체(예를 들어 글쓰기, 토론하기 등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등)가 아니라, 특정 영역의 세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열정과 관련된 능력이어야 한다.<sup>9)</sup>

이 때의 열정은, 학생들로 하여금(교사도 마찬가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들을 애써 이해하려 하고 그 질문을 스스로 해 보며, 자신이 또 다시 질문을 제기해 보고자 하는 특정 대상(영역)에 대한 열정을 말한다. “고차원적 능력”도 그러한 열정을 발휘하는 대상과 관련될 때 의미를 지닌다. 열정은 특정 대상과 관련하여 그것을 자신과 관계된 세계로 ‘느낀’ 때 온다. 그 느낌에서부터 알려고 하고 판단하려 하고 행위하려 한다. 교과(혹은 특정 주제 관련) 수업이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소위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이는 대상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curiosity)을 고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수업이 아니다. 그것은, 학습자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세계에서 해당 영역과 관련하여 공적 선(communal virtue)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는 수업이며, 그러한 인식이 지적 엄격성을 요구하는 호된 훈련을 인내하게끔 하는 학습자의 열정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수업이다. 그러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식교육인 동시에 인성교육이다.

고교교육의 다양화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계 맺고 싶은 영역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택교과가 얼마나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가, 독서교육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갖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양한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 개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정된 범위에서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세상과 만나는 경험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관찰한 영어 원어민 회화 수업시간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 이 수업에서 교사는, 미국 록 음악 변천사를 주제로 리듬의 변화, 사용하는 악기의 변화 등과 함께 음악이 어떻게 사회상을 반영하며, 또한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있었다. 비록 가사의 의미나 리듬과 관련한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학생들은 소수였지만 교사가 들려주는 음악들과 그에 대한 설명에 학생들이 깊이 빠져 있음을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고교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교교육의 다양화’가 가치의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도시형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의 시도가 주는 시사는 크다. 이 학교는, 입시준비교육이기를 애써 거부하면서 교과교육과 비교과 그리고 학교운영체제 전반에 걸쳐 “삶과 삶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아직 개교 2년차인 이우학교에 대해 학교교육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그 가치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학력” 수준이 그야말로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머리만 큰 아이로 키우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아이들”을 길러 내고자 하는 이우학교의 지향점은 보통교육으로서의 일반 고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우학교와 같이 입시준비교육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공교육의 한 모델을 만들어가려는 사례들을 실험학교로 하여 장기적인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 연구는, 진보주의 교육을 실험하려 했던 미국 8년 연구처럼 학교교육과정, 학생평가, 학교운영체제 개발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교

6) 이하 삶과 교육에 대한 논의는 P. J. Palmer(1995)에서 얻은 사고임





교육 단계에서의 학생 성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졸업 후 성취까지 추적해 나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졸업 후의 성취로서는, 대학에서의 성취를 포함하여 진출 경로에 따른 사회적 성취, 삶의 질 등이 함께 추적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시작한 KEDI 8년 연구가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연구를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자세히 기술하여 공개함으로써 관심 있는 고교와 대학, 그리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 조기에 특정 영역에 관심을 집중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된 학교들이 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위 “명문학교”로 그 위상이 부각되어 있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그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학교의 교육이념을 해당 영역에 대한 탐구가 갖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열정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서부터 표방해 나가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생들이 어느 대학을 진학하느냐가 아닌, 어느 분야로 진출하느냐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 이념의 결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향을 갖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문예창작학교, 실용음악학교, 연극학교 등의 형태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그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고교교육, 나아가 학교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국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EBS 강좌나 다른 여러 인터넷 강좌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공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좌를 평가한다는 말은 단위 차시의 수업을 평가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위 강좌와 관련한 전체 수업 계획, 사용되는 교재, 학습자료, 실제 수업, 학생 성취 내용 등을 포괄하는 의미의 평가를 말한다. 이는 개별 강사에 대한 평가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지향점에 대한 공론화 토대 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함께 전국 수준에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 밖 사교육 시장의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 및 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교교육의 다양화를 내세우며 고교 관련 교육정책, 혹은 대학입학제도 관련 정책만 개선하고자 해서는 곤란하다. 대학의 각 학과 역시 그 영역에서 진정으로 삶을 바쳐 일할 사람을 선발하고 길러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이 고교교육에서 기대해야 할 것은 특정 영역에서의 수월성이기보다 그 영역에 대한 관심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이 진정한 자기 관심을 발견하게 될 때 입학 당시 그 분야에서의 능력이 지극히 미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과정을 이수하면서 그 문제를 충분히 극복해 나간다는 한동대 교무처장의 말(김영섭, 2004. 10. 7)은 우리로 하여금 소위 ‘수월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하여 변별하는데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의 학생선발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각종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디에서 일하든 한 사람의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함께 조성하려는 노력이 교육정책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공적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힘,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무”(M. Green)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sup>[10]</sup>

## 미국 8년 연구

조덕주 | 건국대학교 교수, chodj@konkuk.ac.kr

1930년 4월, 워싱턴에서는 진보주의교육협회(the Progressive Education Association, PEA) 연차 학술회의를 계기로 약 200명의 인사가 모였다. 그들은 초등교육에서는 진보주의 교육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해 중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청소년을 위한 개선된 중등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중등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안들이 제기되었으나, 개선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대학에서 중등교육에 요구하는 과목과 단위 이수문제로 명료화되었다. 당시 고등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대학입학이었으며, 어느 고등학교도 대학입학을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과목과 단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차 학술회의가 끝나가려 할 때, 중등학교와 대학 간의 관계위원회를 결성하지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 안은 중등학교에서의 학습과 대학에서의 학습을 보다 잘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중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한 자유를 확보하지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져 그 해 10월 학교-대학 협력위원회(Commission on the Relation of School and College)가 구성되었고, Wilford M. Aikin이 위원회의장이 되었으며, 우선 1년간 중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기로 했다.

1년 후, 연구된 중등교육의 문제점은, 중등교육에는 명확하고 핵심적인 목적이 없으며,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 및 지적인 교육도 시키지 못했으며, 학생파악도 안 되었고, 효과적인 학습에 필요한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성이 개발되지도 못했고, 그들의 실제 관심사와 거리가 먼 교육과 현존 교육과정조차 일종의 통일성을 갖지 못한 채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격적으로 8년 연구를 통해 달성할 두 가지 기본 목표를 세웠다. 첫째, 중등학교 재구조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학과 중등학교의 관계를 정립한다. 둘째, 실험과 탐구를 통하여 미국의 중등학교가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 미국은 중등교육이 취약하다

#### 1) 대학의 참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회는 8년 연구에 참여할 대학들의 동의 얻기에 주력했다. 1932년에 이르러 300개 이상의 대학이 중등학교와 연합하여 중등교육과 대학 입시 문제 해결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 취지에 따라 1932년 5월 '대학과 학교 간의 협력 개선 방안' (A Proposal for





Better Co-ordination of School and College Work)라는 협약안이 발표되었다. 이 안에 의하면 협약 대학이라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모두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실험기간 동안(1936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학년을 시작으로 5년 동안) 협약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① 현재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코스 및 이수 단위에 상관없이, ②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생들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또 이 기간 동안은 새로운 요건 하에 입학 지원자들과 비교하여 차별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

## 2) 중등학교의 참여

기획위원회는 전국 각지의 학교나 대학에 중요한 지위에 있는 관리들에게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중등교육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고, 약 200개의 학교들이 추천되었다. 위원회는 공·사립과 학교규모, 계층 등을 고려하면서 현재의 학교 운영에 불만족하고 대학에 의한 자유보장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나 변화들을 열망하는 즉, 교육과정 개혁 의지가 있는 학교로서 지역에 개혁 파급 효과가 있는 학교 28개를 선정했고, 후에 2개의 캘리포니아주의 학교를 추가했다. 실험에 참여한 학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중상류층 사립학교로서 이 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진보주의적 교육을 받고 중등학교에 와서 대학 입학 요건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불만이 많은 학생들에게 승통을 트여 주기를 고민하던 학교들이었다.

또 다른 부류는 가난한 대규모 공립학교들로 학생들의 진로가 대부분 대학입시와는 동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학교로서도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었다. 각 학교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교육과정, 조직, 절차상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면서 1933년 가을 새학기, 새로운 과업을 시작했다.

## 8년 연구가 시작되다

### 1) 기대감과 불안감

1933년, 연구 참여 학교들이 선정된 이후, 학교관계자들과 기획위원회는 8년 연구에 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모두 대단한 모험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데에 강한 동질감을 느끼는 한편 불안감도 갖고 있었다. 한 교장은 “나는 우리를 구속했던 것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다른 학교의 생각과 경험을 서로 활용하기를 원했으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경험해 나갔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원칙은 두 가지였다. 첫째, 학교의 전반적인 생활이나 수업 방법이 인간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방식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 둘째,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재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30개 학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육의 확실한 방향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다.

### 2) 확실한 방향감

30개 학교가 과업에 착수했을 때, 교육목표는 다양했으나, 여러 가지 목표들을 관련짓는 핵심목표가 없었다. 다양한 목표 내에서 그들은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가, 또 그 경험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다. 193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분명한 방향성이 연구 학교들의 철학에서 나타났다. 사실 1935년까지도 학교의 많은 대표자들 측에서는 교육의 근본 원리를 고려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꺼려했고, “교육의 핵심목표를 결정

하는 작업은 흥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철학을 논의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말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교육과정 개정작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년 후 다시 확실한 방향감, 즉 타당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었고, 이들은 확실한 방향을 국민의 생활방식인 민주적인 이상 속에서 찾게 되었다. 10개의 중학교와 5개의 고등학교가 참여하게 된 덴버 보고서에는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실험이 4년간 진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연구 목표들간의 보다 분명한 관계와 필요한 교육과정이 분명해 졌다.……덴버 학교들은 개인이 최대한 발전하는데 가장 적절한 사회는 민주 사회라고 믿는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생활방식이다.

8년 연구에 참여한 학교의 일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진전은 바로 이러한 민주적인 생활과 교육에 대한 개념이 생성되면서부터였다. 이는 학교 행정의 변화 및 가정-학교 관계의 변화, 학교-교사 역할의 변화, 그리고 학교-사회 생활에 있어서 학생 역할의 변화를 즉 교육관련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보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민주적인 관계 형성을 주요 지향점으로 삼게 된 것이다.

### 3) 교육과정의 변화

8년 연구의 과정에서 학교행정, 가정, 학교, 교사, 학생과 관련된 전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 전통적 교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학교 외부 사람이 학교를 방문하여 다른 고등학교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통찰력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과학, 외국어, 수학, 역사 그리고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코스들은 전통적인 내용과는 다

른 특징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과학 시간에는 과학 영역에서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스페인어 시간에는 삶에 미치는 지리적 영향이나 남미 사람들의 특성들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 코스에는 기존의 가치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가 명확한 수업 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수업을 재검토하고, 학생들에게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하고 가치도 없는 것들 대신 새로운 교과 내용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같은 교과목명이 명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롭게 해석되었다.

#### · 교과목 간의 경계 허물기

교사와 교사를 분리시키고 교과와 교과를 분리시키던 인위적인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교과와 교과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수학과 과학의 통합이 추진되다가 실제적·이론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되었고, 이어서 영어와 사회과학의 통합이 많이 추진되었다. 덴버의 경우, 중핵 교육과정이 시도되었는데 덴버의 경우 ‘삶의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즉 개인적 삶, 개인-사회 관계, 시민-사회 관계, 경제적 관계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고, 이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시도하던 교육과정의 형태였다.

### 8년 연구 동안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기록의 중요성 깨달았다

8년 연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은 연구가 시작되던 초기부터 인식되었다. 학교-대학 협력 위원회나 연구 참여 학교들은 오랜 기간 함께 노력한 것이 주관적인 인상이나 부분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평가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즉 중등학교 학생들의 목표 달성이 더 촉진되어야 하고, 대학에 가서도 잘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희망 속에, 학생의 성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기록되고 고되어 학생 스스로와 교사, 학부모, 대학들은 학생의 능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었다. 이에 위원회와 학교는 학생 능력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 1) 목표에 근거한 평가 연구의 시작과 진행

8년 연구가 시작되던 당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목적들에 대한 평가 도구가 없었다. 학교가 사용하던 대부분의 검사들은 주로 지식과 특정한 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30개 학교에서는 검사의 목표를 이 두 가지에만 제한시킬 수는 없었다. 이들 학교는 이 두 가지 이외에 다양한 목표들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평가가 목표와 관련했을 때만이 유의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이들은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성취시키고자 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진술하려 노력했고 다양한 목표를 실제로 평가하려고 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학교들에게 1983년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검사들은 주로 전통적인 교과 내용에 근거했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학교가 새롭게 수립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따라 새롭고 보다 광범위한 평가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가연구가 1984년에 시작되었다.

평가진의 과업은 학생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고 30개 학교와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연구를 진행했다. 각 학교의 교사들은 검사를 계획하거나 구안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평가진은 학교의 목표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학교들은 각기 차이는 있었으나 다음의 10가지 목표를 중요하게 간주했다.

- 효과적인 사고 방법 개발하기
- 유용한 학습 습관과 학습 기술 습득하기
- 사회적 태도 기르기

- 다양한 범위의 관심사 획득하기
- 음악, 예술, 문학, 다른 심미적 경험에 대한 감상의 능력개발하기
- 사회적 감수성 개발하기
- 개인적-사회적 적응 능력 개발하기
- 중요한 정보 수집하기
- 신체적 건강 관리하기
- 일관된 생활 철학 개발하기

이러한 목표에 근거하여 평가진들은 학교 교사들과 함께 7년 동안 약 200개의 검사들을 고안하여 실제로 적용하고 검토하고 재적용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다양한 검사도구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다: 자료해석, 일반과학원리의 적용, 사회문제, 원리의 적용, 특정한 논리의 원리 적용, 증명의 특성, 신뢰로운 정보원에의 친숙성, 도서 및 도서관의 활용, 규범적도, 자발적 독서에 관한 질문지, 7개의 현대미술작품, 그림 짝짓기, 흥미검사, 자유독서의 기록, 흥미와 활동.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백 명의 교사들에게 검사 도구를 구안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학습 단원의 효과는 그 상황에 맞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검사 도구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사들은 평가 본부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에 참여하여 검사 구성 기법, 평가도구 활용, 결과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했다.

### 2) 고등학교의 기록

고등학교에서 기록하는 내용은 학생, 학부모, 대학입학위원회 등이 알고 싶어하는 관심사로 구성된다. 8년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록과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 입학 지원자에 관한 적절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책무는 처음부터 대학과 협의된 것이었다. 학교는 대학 입학 지원자

가 대학에서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를 대학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학습 교과나 이수 단위에 대한 기록보다는 더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했다. 즉, 그들의 바람은 각 지원자가 아주 완벽하게 묘사되어 대학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근거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획위원회는 1983년 연구 참여 학교들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기록과 보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록 및 보고 위원회(Committee on Evaluation and Recording)를 구성했다. 기록 및 보고 위원회는 학교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학생들을 잘 선발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대학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 그 정보는 어떻게 가장 잘 수집될 수 있는가
-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 기록되어 대학에 제시되어야 하는가

기획위원회의 원래 목표는 30개 학교가 대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었으나 곧 대학의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 전 영역을 돕도록 요청받았다. 그리하여 추가 임무를 확실히 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Tyler를 책임자로 하는 평가진이 새로이 조직되었다. 기록 및 보고 위원회는 학교가 학생의 진보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을 맡았다.

종래 학교에서 사용되던 형식들은 불과 몇 가지 측면의 능력만을 이해시켜 줄 뿐이었다. 이 위원회는 학생들의 능력 개발을 보다 종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형식을 고안하여 제공하려고 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명시된 주제나 제목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 추가 자료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기록 공간을 마련했다. 개발된 기록 형식 안에는 행동진술, 학부

모에게 보내는 서신, 대학에 알림, 교과발달사항이 있다. 행동진술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책임감·의존성, 창의성과 상상력, 영향력, 탐구심, 개방성, 분석능력 및 습관, 사회적 관심, 정서적 감수성, 진지한 목표의식, 사회적 적응력, 학습습관이라는 영역을 추출했으며, 각 영역에 대해서도 사려 깊은 평가과정을 거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학에 보내게 되는 자료는 학교장의 추천서와 자세하게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이다.

#### 대학에서의 연구

30개 학교에서 수행한 혁신들 중 많은 부분은 전통적인 대입 준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30개 학교 출신의 수백 명의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를 학습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했다. 전통적인 교과를 이수하게 한 학교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만 학습하게 했다.

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이 계획의 첫 번째 대상 학생들은 1986년 9월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30개 학교의 졸업생들이 대학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들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책임은 Tyler가 맡았으며 대학 교직원 중에서 대학생들과 협조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공정한 교직원들이 선발되어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들 연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은 “대학에서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대학 생활의 중요한 측면은 무엇인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기록할 것인가?” 등이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지적 능력
- 교양 함양, 여가시간의 활용, 감상적 측면과 창의적 측면
- 실제적 능력, 상식과 판단, 평범한 수공 기술, 환경 적응력
- 생활 철학



- 인성 특성
- 정서적 안정
- 사회적 적합성
- 사회문제에 대한 민감성
- 신체적 건강

대학 연구진들이 설명하듯이 이 준거들은 각각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하위 영역들로 분류되며, 각 준거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했다. 1996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연구의 대상이 된 1,475쌍의 학생들은 모두 4년간 연구되었다. 1997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3년 동안, 1998년은 2년 동안, 1999년은 1년 동안 연구되었다. 연구진들은 여러 해에 걸쳐 여름방학마다 그리고 1991년 대부분의 시간을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데 할애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30개 학교의 졸업생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나은 성취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실험적인 학교의 졸업생들이 통제집단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이 차이는 전체 30개 학교와 통제 집단 간의 차이보다 훨씬 더 컸다. 이와는 반대로 최소한의 모험을 했던, 즉 전통적 교육을 많이 시켰던 학교의 졸업생들과 통제집단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대학 추후 연구진들은 대학들은 전통적인 학교에서보다는 가장 실험적인 학교에서 타당하고 효과적인 대입자료들을 더 많이 받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주력하는 전통적인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대학 경험을 가장 잘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학교-대학 협력 위원회와 학교가 얻은 것들

8년 연구의 과정에서 학교-대학 협의회와 학교는 많은 사항을 깨

닫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보다 뚜렷한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30개 학교의 졸업생들은 대학에서 학습하는데 어떤 결함도 갖지 않았다.

둘째, 대학에서 규정한 교과나 단위 수에서 자유롭다고 하여 대학에서의 학습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셋째, 가장 급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했던 연구 참여 학교의 학생들이 그들과 비교된 똑같은 능력의 학생들보다 대학에서 보다 높은 성취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게 되었다.

첫째, 대학 공부를 위한 준비는 중등학교에서 특정한 교과를 특정한 단위로 공부하는데 달려 있다는 가정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특정교과와 특정단위의 벽을 허물고 비교적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습한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높은 성취를 나타낸 위의 가정에 대한 강한 이의제기의 토대가 되었다.

둘째, 대학과 학교 간의 관계가 정당한 관계로 대체되어야 함이 시사되었다. 연구 결과로 보면 대학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철저하게 실제로 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근거하여 대입 준비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는 대학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이 정말로 어떤 지식이나 기술, 습관, 태도들이 대학에서 만족스러운 성취에 기여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들도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K&D]



## «Project 2

### ■ 특별기획 2: 학습사회,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 » 평생학습시대, 학습국가를 건설하자 »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OECD 국가 중 '최하위'
- » '공부의 때' 를 놓친 성인들을 위한 곳, 학점은행제 » 평생학습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평생동안 할 수 있는 학습체제다
- » 평생학습, 중앙 아닌 '지역'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독일의 평생교육

K E D |





## 평생학습시대, 학습국가를 건설하자

이재분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전략기획특임팀장, jblee@kedi.re.kr

###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평생학습

인류문명은 농업사회, 산업사회 등을 거쳐 이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었다. 정보화사회, 탈산업화, 다문화사회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지식, 정보, 데이터 등의 무형의 자원이 핵심자원을 이룬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은 물질적 자산보다는 무형자원의 개발력과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통찰력, 정보 등의 지식기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즉,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확충과 창출된 지식을 상업화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의 양성이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이 점에서 교육체제는 개인 수준이든, 국가 수준이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정당화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그리고 교육경쟁력

경제나 산업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의 의미는 '실제 소득' 과 관련되어 정의되거나, 혹은 '국내적·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환경제공 능력' 과 관련하여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국가경쟁력은 '세계 시장의 요구에 맞춰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 으로 정의되며(U.S. Competitiveness 2001), OECD의 경우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 아래서, 한 국가가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가능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자국민의 실질 소득을 유지하고 확대해 가는 수준' 으로 정의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은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게 국내적,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환경을 제고해 주는 국가의 능력' 을 의미한다(IMD, 2004). 그리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 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세트' 를 의미한다(산업정책연구원·국제경쟁력연구원, 2003).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소득' 과 관련되어 정의되든, 혹은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환경제공 능력' 과 관련되어 정의되든 간에, 앞에서 언급된 종합경쟁력평가전문기관에서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평가내용(지표)은 대략 '물적요소' 와 '인적요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인적요소에 관한 평가결과는 각국의 교육방향과 과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M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25위에서 30위 사이에 머무르다가, IMF 외환위기 때 41위까지 추락했으며, 2000년에 29위로 회복되었다가 2003년 37위, 그리고 2004년 35



위로 다시 추락하여 경쟁력 하락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장경쟁력(Growth Competitiveness)은 2003년 세계 102개 국가 중 18위로 평가되었으나, 2004년에는 전년보다 11단계나 떨어진 29등에 불과하였고 IPS의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전체 68개국 중 25위였다.(자료 : IMD(2004),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WEF(2003),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3-2004, IPS(2003), IPS국가경쟁력보고서, 산업정책연구원)

세계적인 전문평가기관의 결과에 있어,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서로 상이한 것은 각 기관의 평가내용(혹은 지표)이나 평가방법, 대상 국가 수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평가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인 인적개발 측면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IMD 평가 결과의 경우, 우리나라는 교육관련 인프라 투자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이상 졸업한 학력수준(5위)은 최우수급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유용성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낮으며(59위), 자격이 있는 엔지니어를 국내시장에서 찾기가 어렵다(52위)고 기업인들은 평가한다. 글로벌리제이션과 복잡한 경제활동에 대응하는 재무관련 교육(51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52위)고 평가한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관련 정부투자가 GDP대비 3.6%(세계 52위)로 세계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다. 모든 교육 부담이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비로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2.1명(세계 56위, 세계 평균 19.66명), 중·고등학교에서는 20.1명(세계 49위, 세계평균 16.42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IMD 세계경쟁력 연구 한국파트너, 2004).

세계경제포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경쟁력을 세계 102개 국가 중 18위로 평가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경영 부문의 제지표, 교육투자의 효율성, 여성인력 활용, 산·학·연 협동, 기술개발 성과, 노사관계 등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했다(하병기·전수봉, 2004). 또한 IPS평가결과에서도 교육과 관련하여 앞의 두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지식을 상업화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의 양성과 인적자원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조성에 대한 노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산업정책연구원·국제경쟁력연구원, 2003).



### 평생학습정책, 선진국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에 관한 무역연구소 조사결과(2003)에 의하면, 각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들의 공통점 및 전반적인 경향은 인력자원의 개발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기초과학 및 첨단 기술 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교육, 복지사회에 따른 근로의욕의 약화 방지 등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핵심 목표로 과학기술 발전, 지역간 균형 발전, 경영환경 개선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혁신환경 조성, 지식경제기반 구축, 인프라 투자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선진 몇 개국이 택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영국의 경우, 1998년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학습시대 : 신 영국 건설을 위한 르네상스(The Learning Age: a renaissance for a new Britain)」를 발표하고 추진함으로써 평생학습이 국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공 열쇠이며, 최선의 경제 정책임을 표방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2000). 그리고 실제 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영국 정부는 3년 간 집중 투자하여, 2002년까지 50만 명의 성인에게 추가로 단기대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김신일 등, 2003).

○ 미국의 경우는 지식 경제를 이끌어갈 지식 근로자 양성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 중에서도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의 접근 기회 및 교육의 질(質) 강화를 목표로 인종·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유무에 따른 학생인구의 대학 입학 및 졸업 격차 감소, 고등교육 기관의 책무성 강화, 고등교육의 효과적인 재정지원(funding) 메커니즘 구축, 소수민족 대학 지원, 성인의 문해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1991, 1995, 1999).

○ 핀란드의 경우, 지속적인 학습이 누구에게나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의 학습능력, 사회활동, 그리고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Finland Ministry of Education, 1997),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2004)에서는 모든 청소년의 고등학교 교육 이수와 함께 성인인구의 대학교육 확대를 위해서 획기적인 학비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김신일 외, 2003).

○ 유럽의 변방에서 유럽의 중심 국가로 이동하는데 성공한 아일랜드의 경우, 평생학습 국가 프로젝트인 “Employment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perational Programme”, National Development Plan 2000~2006)을 추진함으로써 평생학습에 기초한 지식국가, 학습국가 건설이 진요함을 보여주었다. 즉 아일랜드 경제 성공의 신화창조와 삶의 질 향상은 평생학습을 통한 노동력 기술 발전의 결과로 ① 학교 중도 탈락 예방, ② 성인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③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④ 연구,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RTDI)에 투자되는 자금 상황 개선, ⑤ 평생 학습 전략을 지지하는 국가 자격 구조의 확립, ⑥ 노동 시장의 요구사항 지원 중점 추진을 기초로 하고 있다(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 Employment, 1999).

○ 2004년 2월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위는 今後の生涯學習の振興方策について(앞으로의 생애학습 진흥방안)을 통해 생애 학습의 과제로, ① 생애학습에서의 새로운 공공(公共)시점 중시, ② 국민 전체의 「인간력」 향상, ③ 생애단계별 정책 중점화를 들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교교육단계에서부터 근로관과 직업관의 육성을 꾀하고 사회교육시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을 충실히 하며, ② 가정교육 지원을 위해 부모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타인을 통해 배

울 수 있는 학습지원을 검토하며, ③ 학교, 가정, 지역이 상호연계하여 다른 연령, 다른 세대의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주성, 창조성,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해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는 지역교육력 향상을 도모하고, ④ 고령자 학습의 다양화와 학습성과의 활용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⑤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다양한 정책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애학습 추진을 통한 사회 활성화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2004년 1월 「지역 만들기 지원실」을 설치하고 타 관계 부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2004년~2006년)」을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학습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간 700억원(70억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지역에 아이들의 활동거점을 설치하고 지역주민, 퇴직교원, PTA 등 지역인재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여 아동들의 체험활동과 지역주민 교류활동의 실시를 통해 건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건설을 도모한다는 것이다(文部科學省資料, 2004).

이처럼 선진국들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수준에서 학습국가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관심은 아주 낮은 편이다

####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 미약

선진국들이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택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평생학습은 개인의 과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름을 각기 달리하는 '복지', '문화', '노동', '행정', '여성', '훈련' 등 관련 부처마다 고유의 부처 산하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활동을 산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교육 개혁과 교육정책은 아동기의 학교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비록 18세 대학입학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실제 선진국에 비해 40세 이상 총 대학진학률은 낮으며, 성인학습 참여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2~23세에 마지막 공부를 한 사람과 40~50세에 마지막

---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전략의 최우선을 '인력개발'에 두고 있다

---



공부를 한 사람 중 누가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였는가를 따진다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평생학습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내실화 필요

한국사회는 이미 제조업 중심을 지나 정보기술시대에 들어섰으므로 취업 가능한 직업기술은 적어도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교육이 현재가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볼 때, 현재 우리가 세워야 할 정책목표는 전 국민을 적어도 전문대 수준의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지식강국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는 우리의 현행 고등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박수 외(2003)는 ①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중 1만 불 시점의 대학진학률은 최고이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최저로, 향후 대학진학률은 낮추는 대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되며, ② 대학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직업교육으로 전환하고 산학협동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③ 국민의 개방적 사고의 확산과 해외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제안했다.

####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적 노력 필요

학습자의 배우고자 하는 학습동기를 촉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이 공급자에 의한 수동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학습은 수요자가 필요에 의해 배우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평생교육' 보다는 '평생학습' 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성인학습 참여율은 매우 낮으며, 특히 교육 소외계층의 경우 학습동기가 낮아,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자가 그렇지 못한 자보다도 평생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는 '풍요의 선순환, 빈곤의 악순환' 현상을 보인다(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평생학습 참여율: 4.5%, 대학교 졸업자의 참여율 39.6%(통계청, 2001)). 학습의 개념이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어, 국가적 개입과 추진이 이에 어긋나 보일지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요구된다. 산업정책연구원·국제경쟁력연구원(2003)에서는 IPS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선진화(교육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노사갈등, 계층간 격차 등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적 접근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갈등 해소가 노사 상호간의 이해를 전제로 하며, 저소득층 혹은 소외계층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적 접근 즉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와 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직업능력개발에 치중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적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포용, 민주시민교육과 직업교육이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지역균형발전에의 평생학습 동참은 필수

최근 정부는 범 국가차원에서 국민소득 2만 불 달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제안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육성산업을 정하고, 핵심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살게 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 핵심산업은 대부분이 전문학교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미래형 지식산업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존하는 지역인의 역량과 산업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간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것인가가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 열쇠

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학습기회의 확충과 준비된 체계적인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자립과 상생, 창조와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개개인이 가정과 지역 그리고 일터에서 보람을 얻고, 참여와 창조를 실감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국가 수준의 평생학습정책, 즉 학습하는 국민, 학습하는 사회, 학습국가 건설이 요구된다.

#### 학습시대 : 학습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와 공동으로 2001년 평생학습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평생학습 비전을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추진전략을 세워,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 매트릭스로 더 이상 추가될 요소는 없어 보인다. 다만 종합계획이다 보니, 시대적 요구와 현안 문제를 고려해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어떤 주제와 내용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는 간단하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국민의 생애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근거로서 유용하다고 본다. 예컨대 유아의 출생률 감소 현상으로부터 노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의 단계별 문제는 국가 수준에서 여러 형태로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갖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정부 해당 부처별로 동일한 정책이 중복 운영되는 문제, 대상별 관계법의 혼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에 따른 손실 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지를 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

요가 있는 사항들도 선택과 집중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소득 2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사 받을 수 있는 사항들, 즉 학교와 바깥 세상의 벽을 허물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실용주의 교육정책, 여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여성 기술을 향상시키고, 재취업 교육을 하는 등의 정책은 중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검토를 기초로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비전: 학습국가 건설(Learning Korea)

- 1) 학습국가의 개념 : 학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국가경쟁력의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 2) 목적 : 자립과 상생의 노력을 통한 '균형', 창조와 개혁을 통한 '발전'을 양대 축으로 하여, 개인의 고용가능성 증진 및 자아실현, 지역 학습역량 제고 및 사회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추구

#### 정책 추진

- 1) 목표 : 전 국민의 기본 역량 강화
  -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능력 또는 기술을, 학습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전 국민의 기본 역량 강화

#### 실행목표

- 학습참여율 제고, 학습의 질적 내실화
  -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17%)을 OECD선진국 수준(평균 35% 이상)으로 제고
  - 교육내용의 실용화, 고품질화 및 학습과정의 질적 내실화 유지
- 2) 전략



**사람(국민)중심**

- 학습국가 건설의 핵심은 사람(국민)인.
- 사람(국민)중심의 학습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생애 단계에 적합한 학습 제공
- 사람(국민)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고, 잠재능력개발 및 학습에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며, 구체적으로 학습을 위한 안내와 지원, 다양한 학습내용 및 방법 제공, 학습결과의 인정 등 수행.

**혁신과 통합의 조화· 변화 관리 역량 제고**

- 국가발전은 우리 사회의 '혁신' 역량과 '통합' 역량의 조화 속에서 가능함.
- 새로운 기술· 지식· 경영 자산을 활용하여, 모든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사회 성원간의 갈등과 긴장이 생성, 표출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수준으로부터 국가수준에 이르는 변화관리 역량 제고

**파트너십 구축**

- 평생학습의 대상과 영역, 참여기관은 다양함
- 정부 관련부처뿐 아니라 관련 기관, 산업체 내 평생교육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들 간의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준별, 분야별 효율적 파트너십 체제 구축· 운영.
- 모든 학습자가 주체가 되고, 관련부처, 기관이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하며, 학습의 과정, 결과가 보장되는 실천위주의 방법 채택

**국가균형발전**

- 학습국가건설을 위한 평생학습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극대화
- 학습국가건설 정책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내실화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성인학습 참여율 제고를 통한 학습자간 (계층, 성, 연령별 등) 학습격차 감소, 전 국민의 기초능력 제고
  - 학습도시/마을, 학습문화, 학습사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3) 핵심 과제

**생애학습지원**

- 지식기반 사회의 학습은 평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개인적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
- 국가는 개인의 학습이 생을 통해 다양한 국면과 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 개인이 생을 통해 필요한 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 '학습지도' 작성
  - 학교교육 이후 성인의 개인학습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
  - 사이버 혹은 원격교육 등 시공을 초월한 학습지원 등

**지역활성화 정책 추진**

- 다원화, 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사회에서 파트너십과 참여를 바탕으로 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주도 대응전략 필요
- 초, 중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내재적 혁신시스템 구축 역량은 지역발전의 성패 좌우

- 지역 혁신산업 개발,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과 병행하여, 지역 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클러스터링 조성

**계층간·지역간 연계 역량 강화**

- 정보화, 세계화, 지식화가 심화될수록 개인의 정보격차 및 학습 격차 현상 심화
- 평생학습을 통해 지식유산자와 지식무산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임
- 계층별 성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소외계층 지원강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격차해소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사회적 신뢰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공성(公共性) 제고
- 민주시민 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 시민교육의 사회적 연대 체제 구축

**4) 실행방법**

학습국가 건설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요구되며,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즉 학습국가로 가기 위해, 제1단계-현행법제도의 소폭 개정에 근거한 평생학습 기반구축, 제2단계-광의의 평생교육패러다임에 기초한 학습참여 확대, 제3단계-학습조직간 네트워크 강화에 근거한 지역학습역량 강화, 제4단계-학습국가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4단계 전략 추진과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제도, 각종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평생학습문화, 평생학습 재정지원 등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핵심과제 별로는 다음과 같은 추진이 요청된다.

- 생애학습지원: 학습기회 확대/ 성인학습자 우선지원/ 학습결과 의 사회적 인정보장

-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사람중심' 지역개발 패러다임 수립/ 학습도시·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발전
- 계층간·지역간 연계역량 강화: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강화/ 공공성 제고를 위한 학습 조직간 연계 강화

이 외에 전체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임을 밝힌다.

**전망**

이러한 학습국가 건설을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고, 전 국민의 기초능력 및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식사회, 지식경제 시대 도래에 적합한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층별·성별 학력격차 및 지역별 학습기회 격차가 해소될 것을 전망한다. [20]





#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OECD 국가 중 '최하위'

## -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국제 비교

최도민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운영실장, donmin@kedi.re.kr

서구 산업화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산업화는 전통과 공동체를 한순간에 해체하였다. 서로를 돕고 같이 사는 공동체는 개인보다는 '우리'로, 나의 집보다는 '우리 집'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이었다. 우리의 문화는 서구문화의 물결에 묻혀 박물관의 수장고 깊은 곳에 저장되었다. 사고 양식과 행동 양식은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편리성과 편안함을 쫓는 추세로 바뀌었다. 한복에서 양복으로 외양이 바뀌고 옷 속의 마음도 변모되었다. 전통문화는 한낱 치장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공동체는 같은 의식에서 출발하여 행동으로 완결된다. 서로의 마음을 읽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가짐이 그 출발점이고, 공동선을 위해 합심하여 실천할 때 사회 공동체는 복원될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는 전통 농경사회에 비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욱 많아졌고, 이 문제는 각자의 노력이 하나의 지향점을 향할 때, 그 효력이 더욱 발휘된다. 이제 박물관 수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의식'을 석방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질병을 치유할 때이다. 전통사회를 자정(自淨)했던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공동체는 이제 사회적 자원(social capital)이라는 외투를 걸치고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를 등에 지고 인적 자원(human capital)과 손잡고 다시 일어섰다. 인간 자원은 교육·훈련과 경험을 통해 길러진 지식, 기술과 태도를 일컫는 용어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부각하였다. 덜 친숙한 개념인 사회적 자원은 사회·경제적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회 관계, 행동 양식과 상호 신뢰를 의미하며,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를 자양분으로 성장한다.

학습사회는 공동체 형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식과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적자본을 구비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조직 차원에서는 학습을 통한 연대의식을 고양하여 생산성의 향

상을 가져온다. 1996년 OECD에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을 공동 목표로 선정된 이후 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학습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포괄하는 종합적 의미에서 평생학습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각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평생학습 정책을 분석하고, OECD, UNESCO,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평생학습의 발전 양상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지표 개발로 추출한 결과를 우리의 지표와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OECD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의 평생학습 정책이 견지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선진민주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학습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평생학습 참여도를 비교·분석하고, 학습 참여가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탐색한다. 또한 평생학습 결과로 나타나는 문해력 수준을 비교해 보고 평생학습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후, 분석 결과를 기초로 우리의 평생교육 발전을 과제를 추출·제시하고자 한다.

### 특히 한국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 높다

평생교육의 현주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OECD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인학습 참여율을 비교·분석한 후 학습 참여율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제시한다.

### 1. 평생학습 참여율의 국제 비교

성인의 평생학습 참가율은 기본적으로 가구 조사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관한 통계는 많지 않다.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된 통계는 OECD조사가 대표적이다. OECD 조사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설문지를 개발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한 국제성인문해조사(IALS: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에 근거한 것으로 2001년도 OECD 교육통계집에서 그 결과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성인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일수 및 평생교육 자원, 평생교육 참여 비율 등을 주로 조사했으며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경제 발전, 문해 수준 등 다양한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의 IALS사업에 참가하지 않아서 성인의 평생학습 참가율을 비교할 통계가 없다. 다만 통계청에서 4년 단위로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에서 교육항목 관련 평생교육 참여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 약 3만여 가구 중 만 15세 이상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라디오 시청, 기타로 나누어 참여하는 교육의 종류와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도를 국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OECD와 같은 기준과 측정방식에 의해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서 2000년도 조사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17.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20세 이상 성인으로 보정하면 17.25%를 보인다. OECD의 국제 성인교육 문해 조사와 비교해 보면, 조사 대상국 중 덴마크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핀란드(55%), 스웨덴(54%), 미국(51%) 등의 순서로 참여율이 높다. 우리나라보다 참여율이 낮은 국가는 폴란드(14%), 포르투갈(13%) 등 2개국뿐이다. 우리의 학습 참여율은 OECD 회원국에서 평생교육·훈련에 참여한 평균비율인 35.56%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에의 참여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중졸 이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5%로 대졸 이상의 성인 참여비율인 39.6%의 1/5 수준에 해당되어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의 불평등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 2. 평생교육 참여율의 경제 성장과의 관계

평생교육 참여와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GDP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지식산업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대체로 성인의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참여와의 관련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생교육참여율의 증가에 따른 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평생학습 참여율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664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평생학습참여가 1% 증가할 때 일인당 국민소득이 332달러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 회귀분석에서는 국민소득 증가에 관련되는 다른 예측변인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긴 하지만, 평생교육 참여의 증가가 국민소득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ext{회귀식: } Y(\text{인당 GDP}) = 8834.761 + 332 X(\text{평생교육 참여율})$$

### 대졸 이상의 문해점수, IALS참여국 중 최하위 기록

세계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사회조직의 발달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문해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성인문해조사(IALS)는 국가별로 평생학습과 사회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 IALS에서의 '문해'는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학력수준과 견주어 볼 때 중등교육 졸업 수준의 학력을 지닌 것을 나타낸다. 문해는 일반적으로 산문문해(prose literacy), 문서문해(document literacy), 수량문해(quantitative literacy)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문해력을 0~500점으로 점



수화하여 수준에 따라 5단계로 평정된다. 여기서 3단계 이상이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해력은 성인의 능력(competency)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적 자원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IALS 조사 결과 20개국 중 14개국의 성인 중 22% 이상의 성인이 5단계에서 1단계인 최저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적당하고 필요한 기술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각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의 평균 문서 문해 최저 수준인 1단계 성인의 비율이 22%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국에서는 문해 능력 1단계인 성인이 15%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높은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스웨덴에 서조차도 6.2%의 성인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문해 능력의 부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문서 문해 1단계 비율이 38%로 하위 5등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낮은 문해 능력은 일부 소외계층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즉 경제 선진국가에서조차 많은 성인들이 낮은 문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별로 전체 성인인구의 1/4에서 3/4에 해당되는 성인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3단계 문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IALS 자료는 문해력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갖는 데에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소득의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자료이다.

학력에 따른 문서 문해 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집단에서는 스웨덴이 28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독일(276.1), 덴마크(266.9), 네덜란드(262.6), 핀란드(257.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14.6점으로 중하위권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경우에는 스웨덴이 30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 체코 순이며 한국은 239.9점으로 최하위인 칠레(239.0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집단에서는 역시 스웨덴이 33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258.9점으로 칠레의 266.2점보다 낮아 조사된 전체 국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학력수준에 비하여 성취하는 문해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대졸자의 경우 문해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과 문해능력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소득에 있어서의 문해력의 영향은 부분적으로는 학력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문해력은 임금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소득이 상위 60% 이상인 성인의 문해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국가 평균으로는 1단계 24.2%, 2단계 40.4%, 3단계 52.4%, 4단계 66.0%로 소득과 문해 수준과는 비례함을 나타내었다. 바꾸어 표현하면 소득격차에 따른 문해의 격차 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폴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등의 국가가 문해에 따른 소득격차가 적은 반면, 캐나다, 미국, 벨기에, 체코, 헝가리 등의 국가가 문해에 따른 소득격차가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해에 따른 소득 격차가 대체로 적으나, 4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문서 문해 수준에는 소득 상위 60% 이상의 성인비율이 70.8%를 차지하고 있어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등한시한 성인교육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금까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평생교육 수준은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 평생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평생교육 수준은

OECD의 경쟁국기에 비하여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투입 요인인 학습 참여율이 낮고, 이에 따라 성인의 학습결과 성적표인 문해력 수준도 낮다. 학습 참여율과 문해력이 낮은 근저에는 국가의 평생 학습 지원 예산비중이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의 평생학습 수준을 투입과 과정, 결과의 모든 측면에서 이처럼 낮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첫째, 우리의 교육이 학교위주로 발전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도 학교교육에 매달려 있어서 성인들의 교육에는 등한시한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학령기의 학생 수용을 위한 교육시설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떠난 성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학생수가 늘어나고,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도시에서는 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를 지으면서 농어촌 학교는 폐교해야 되는 유동기 시대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지닌다.

지식과 기술이 4년 주기로 반감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성인의 계속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나 북구의 시민대학(High Folk School)과 같이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직장에서 학교로 돌아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이른바 Work to Schoo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성인교육기관의 육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둘째, 학습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교육 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요즘 중학교까지 마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교육대책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다. 성인들도 원하기만 한다면, 10대들이 다니는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듯이, 성인들도 저학력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발달 특성에 알맞은 교재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인기초교육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떠나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유·무급휴가제나 학습비의 세금 공제, 더욱 적극적으로는 개인학습계좌 등에 의한 학습비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수혜자 대부분이 중상층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재직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결과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기업이윤과 직결되므로, 기업체도 국가 및 개인과 함께 평생학습 참여 제고의 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특히, 기업에서 일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된 바 있으므로,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체는 직업능력개발 담당자의 체계적 육성 및 연수, 정보교류를 지원하여 기업의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민주사회 육성의 근간이므로, 학습사회를 이끌어 가는 한 축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사회의 안정성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고취는 지속적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 성인의 시민교육은 사회적 간접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이나 NGO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의 참여율 제고는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특단의 행·재정적 지원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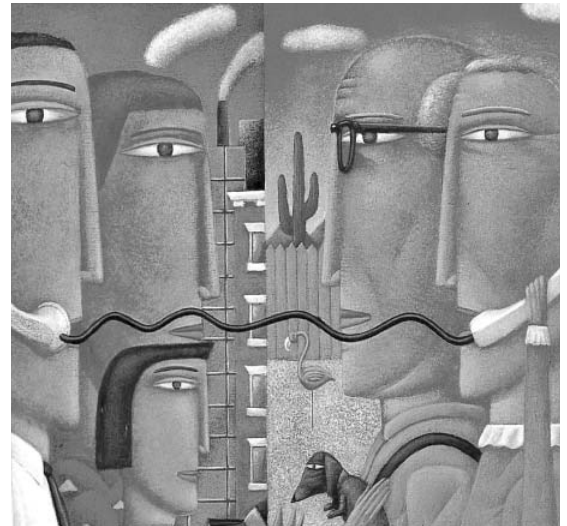
## ‘공부의 때’ 를 놓친 성인들을 위한 곳, 학점은행제

- 성인들의 학위 취득과 계속학습,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능하다

백은순 |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운영실장, esbaik@kedi.re.kr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학업에 대한 열망으로 여러 방향으로 알아본 결과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 생각했습니다. 40이 넘는 늦은 나이에 방송고를 진학하여 고등학교 학력을 갖춘 뒤 직장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자동차 관련 자격증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취득하게 된 대학학위는 그 외국의 어느 학위보다도 내겐 훌륭한 학위였고, 이를 발판으로 대학원진학도 희망할 수 있었으며 현재 ○○대학교 공과대학원 기계공학과에도 진학하였습니다.

-2004년 학위취득자의 학점은행제 수기-



### 공부는 제 나이에 해야 하는가?

어렸을 때 흔히 들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공부에는 다 때가 있으니, 제때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숙제를 하지 않고 나가 놀면 집안 어른 및 이웃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아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며, 공부란 다 때가 있는 법이라서 제때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나무람을 하곤 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들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현재에도 지배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은 인생을 공부하는 시기, 공부 후의 시기로 나누고 있음을 상징한다. 공부는 공부하는 시기에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결혼을 하고, 일을 하는 시기이지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가정이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농경시대나 산업시대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을 하다 다시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일을 하는 등 공부와 공부 이후의 시기를 엄격히 구분할 수 없는 현대에는 공부 이후의 시기에도 학습을 게을리 할 수 없고, 또 공부하는 시기를 놓쳤다고 하여 그 이후에 다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시대도 아니다.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또는 학습을 하기 싫어서 적기에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생동안 다시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회는 폐쇄 사회이며, 발전을 스스로 제한하는 사회이다. 평균수명이 80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에서 10대 후반으로 대학입학을 한정하고 있는 사회는 전 국민의 학습역량을 제한하는 사회에 불과하다. 학습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도 계속하여 제2, 제3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리요”가 아니라 “가다가 중지하면 간 것만큼 이익”이고, “시작이 반임을 인정하고 이를 북돋워주는” 교육체제가 필요

한 것이다.

### 공부는 학교에서만 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학교에서 일정기간 공부를 하도록 하는 공교육체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이후 공교육 제도가 도입되었고,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에 비교해 볼 때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해방 이전에 학교는 보편화된 교육기관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학습을 하였으며, 교육이 교육기관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학교를 통한 교육은 교육부문의 전문화에 기여하였고, 전문화가 가져오는 효율성을 증진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가 교육에 효율적인 장소라고 하여 모든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식당이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당만큼 전문화되지는 않지만 각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이들만의 노하우도 인정받아야 하듯이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여러 학습 활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다양성이 중시되는 현대에 있어서 공교육 체제로 대표되는 학교뿐 아니라 직장생활에서 쌓은 경험, 학교 밖 활동을 통한 지식 습득, 가정에서의 학습 활동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다양한 학습 활동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이를 인정해주는 체제의 정립은 각 국가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예를 들어 문화센터, 직장, 학원, 복지관 등에서 받고 있는 교육 또한 더 나아가 독서를 통해 깨달은 지식,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 얻은 지식, 인터넷을 통해 얻은 지식, 친구와의 대답이나 삶의 경험을 통한 지식이 반드시 학교를 통해 얻은 지식보다 열악하지 않다는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근대에 학교가 도입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인식해 온 지식의 창고로서의 삶의 다양한 장소에서의 경험을 근대 학교 도입 후 잠시 망각하고 있다가 다시 살려낸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출처를 학교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무형식, 비형식 학습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내용 및 방법이 문제이지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 제도 도입 후 암암리에 형성된 학교만이 교육의 장소라는 좁은 의미의 교육관은 학교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기관을 인정하는 교육체제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

### 학점은행제 : 교육 시기를 이미 놓친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이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령기가 지난 성인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간혹 40~50대가 지난 성인이 대학에 입학하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이수하고 수능시험을 치러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은 어지간한 결심과 능력이 아니면 힘든 일이다. 더욱이 이들 성인들이 그동안에 특정 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다른 대학을 잠깐 다닌 일이 있더라도 하는 경력을 인정받기는 더욱 어렵다. 대학은 이들 성인들이 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별다른 학점인정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성인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게 되면 굳이 대학에 가지 않고 대학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특히 특정 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전에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중퇴했다든지, 아니면 독학학위제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시험에 합격한 과목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수한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 이를 누적시켜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이다.



### 학점은행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 및 대학교, 시간제 등록제, 원격대학, 전문 대학의 심화과정 및 특별과정, 독학학위제, 문하생 학력인정제, 국가 및 국가 기술 자격 제도 등 고등교육 단계의 많은 제도 및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각 제도 이용자들의 학습 결과를 인정하는 네트워크형 포괄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간제 등록제 제도는 정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외에 제도 문호를 개방하여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하여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독학학위제에서 1~3단계의 시험에 통과하였거나 면제과정을 이수하였지만 4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습자의 학습결과 인정을 학점은행제에서 해주고 있다.

전문대의 전공심화과정, 특별과정의 경우에도 학습자들의 학습결과가 아무리 가치 있다 할지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 그런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결과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는 많은 학습결과 인정 측면에서 전문대의 전공심화과정, 특별과정,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고 있고, 독학학위제의 결과, 자격취득에 의한 결과를 인정해 주고, 이전대학에서의 학습결과를 연계하여 인정해 주는 포괄적, 개방적 학습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여타 제도 및 기관과의 연계 이외에도 학교 이외의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이라고 판단되면, 그 학습결과를 인정해 주고 있다. 즉, 학교 이외의 기관의 학습을 학교와 등가치적으로 인정하여 교육이 학교 교육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점은행제의 학점원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학습자는 이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학점을 누적시킬 수 있다.



[그림 1] 학점은행제 인정 학점원

### 현재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성인들이 많은가?

학점은행제도는 1998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2004년 현재 9만여 명의 학습자가 등록하고 있다. 도입된 지 불과 6년 동안에 9만여 명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에 등록했다는 것은 제2의 고등교육 기회를 얻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학점은행제 총 학위 취득자 중에서 25세 이상의 대학 학령기를 지난 성인학습자의 비율은 60.2%이다. 학사학위의 경우 30대가 35.9%, 40대가 22.9%, 50세 이상이 7.8%를 차지하고 있어 성인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의 비율이 약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25세 이상 성인 학습자의 비율이 1990년대에 이미 30%에서 6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은 더 이상 소수자로서 눈치보는 학습자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정규 대학에서의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학점은행제인 것이다.

〈표 1〉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연령별 현황

(2004. 4. 1, 단위: 명)

구분	학사	전문학사	계
20세 이하	2 (0.0%)	4 (0.0%)	6 (0.0%)
21세~24세	744(10.5%)	8,001(53.6%)	8,745(39.8%)
25세~29세	1,607(22.8%)	4,073(27.3%)	5,680(25.8%)
30세~39세	2,537(35.9%)	2,290(15.3%)	4,827(22.0%)
40세~49세	1,620(22.9%)	452 (3.0%)	2,072(9.4%)
50세 이상	550 (7.8%)	99 (0.7%)	649(3.0%)
계	7,060(100.0%)	14,919(100.0%)	21,979(100.0%)

자료 : 학점은행제 내부 자료

### 정규 학교 외 어느 곳에서 학습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학점은행제는 정규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학습한 결과를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이때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육내용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동등 이상의 질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각 기관의 교육여건과 교육내용의 질은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인증되며, 평가 인정받은 기관은 각 학습과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과목을 운영하고 있음을 공포하고, 학습자를 모집하고, 일정 성적 이상의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습자가 이를 누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수는 전국적으로 400개 기관이 넘는다. 학습자들은 이들 여러 기관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 등록하여 학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학점은행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다.

### 이전에 학습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점은행제에 등록한 학습자들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공부하는 방

〈표 2〉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과목 현황

(2004. 4. 1, 단위: 개)

교육훈련기관 유형		교육훈련기관	학습과목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교	108	4,616
	전문대학	79	1,900
	소 계	187	6,516
대학 부설 전자계산원		2	149
전문대학 전공심화		24	599
전문대학 특별과정		6	262
학원		86	1,535
기술인력양성기관		76	2,956
정부관련기관		20	253
언론관련기관		4	66
고등기술학교		3	153
특수학교		3	72
평생교육시설		6	292
중요무형문화재		17	197
원격교육		6	42
총계		440	13,092

자료 : 학점은행제 내부 자료

법이외에도 이전에 학습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학습자들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 정규학교에서 이전에 학습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몇 년 전에 공부했든지 그 시기에 상관없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단지 그 당시에 이수한 학점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학점을 80학점까지 인정받고 나머지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대학 졸업학력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35학점을 이수하여 다른 전공의 학위를 더 취득할 수도 있다.





학습자들의 경험과 관련하여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들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이나 기타 국가 자격 취득 결과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점은행제는 성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성인 학습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면 직장에서의 경험 등 다양한 성인들의 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 있는가?

학점은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득하고 있었고,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자아 성취감, 만족감, 자신감 등을 얻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학위의 취득은 단순하게 대학 수준의 공부를 이수하였다는 증명서가 아니라 어깨를 펴고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징표로 작용한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만족도를 자긍심, 전반적인 만족도, 목표 달성의 3가지 문항으로 나누어 5,000명의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조사한 결과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41.3%로 가장 많고, 부정적 인식을 하는 비율이 17.3%인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 비율이 41.2%로서 학습자들은 학점은행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어려운 역경에서 학위를 취득한 성인학습자의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위를 이용하여 편입 및 대학원 진학을 함으로써 주류 학력시장 구조로의 진입을 꾀하고 있다. 최근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중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편입을 하는 비율은 대략 학위 취득자의 25% 정도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방법으로는 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있고, 이들이 학점은행제

학위를 종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학습하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학습자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점을 자격시험 취득에 이용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격시험 제도는 학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일정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산업기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이나 대학 2학년 이상 수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이 요구되고,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35학점 이상 취득이 요구되는 바,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넷째,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학위를 직업 세계에서의 승진, 취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직장 내 호봉 산정이나 승진의 경우, 대학 학위 취득자와 고졸 취득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점은행제에서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호봉승급, 승진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취업 부문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어왔는지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들에 대한 정확한 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그러나 교육훈련기관 종사자들에 따르면, 취업 시장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대졸자로 한정짓는 경우가 많아 고졸자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데 학점은행제를 통해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한다. 또한 피부미용, 요리, 경호의 전 등 직업세계와 관련을 맺는 학과가 많고, 직업 세계의 요구에 의하여 표준교육과정이 신설되기 때문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다섯번째로, 학점은행제는 대학 진학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였다. 초등 및 중등단계의 교육의 보편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대학 진학 희망률이 95% 이상을 상회하는 우리나라에서 학점은행제는 교육적 소외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0]

# 평생학습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평생동안 할 수 있는 학습체제다

## -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방안

정영식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실 nurunso@kedi.re.kr

EU에서는 평생학습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지식사회의 도래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유럽 만들기에 주목하여 지식경제를 이끌고 갈 지식 근로자 양성과 시민사회를 이끌고 갈 적극적 시민 양성의 양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OECD는 혁신주도경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교육혁신체제(EIS: Educ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가의 평생교육정책은 평생교육 전담 기구의 기능 강화, 평생교육 관련 부서의 위상 정립, 평생교육 정책의 통합 및 조정 등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정책은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훈련 및 시간과 경비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의 정보와 접근성 부재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1〉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

국가	비율	남	여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덴마크	56	54	59	36	59	75
핀란드	55	50	59	36	52	79
미국	51	47	55	24	46	69
노르웨이	48	49	48	26	47	67
독일	42	45	39	16	39	60
스위스	42	42	42	20	44	55
체코	27	33	22	18	36	49
이탈리아	22	26	18	9	37	52
헝가리	18	17	19	6	17	49
<b>한국</b>	<b>17.2</b>	<b>19.4</b>	<b>15.2</b>	<b>7.5</b>	<b>16.8</b>	<b>39.6</b>
포르투갈	13	14	12	8	39	55
평균	35.56					

자료: OECD(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통계청(2000), 한국사회통계조사 재구성.

우리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개방형 평생학습체제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학습국가(Learning Korea)' 정책이 필요하다. 개방형 평생학



습체제는 개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기업교육 등을 통합적·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연한 교육 구조를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자립과 상생, 창조와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개개인이 가정과 지역 그리고 일터에서 보람을 창조하고, 참여와 창조를 실감하는 평생학습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 또한, 학습국가는 학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국가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를 말하며, 균형과 발전을 양대 축으로 하여, 개인의 고용 가능성 증진 및 자아실현, 지역 학습 역량 제고 및 사회 통합을 통한 지역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

###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는 무엇인가?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신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간의 생활공간 전체가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IT 기반의 미래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개념을 교육 분야로 확장시킨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한 방식으로 전 생애동안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에듀토피아(edutopia)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면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학습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e-learning)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체제를 의미한다.

#### 1. 비전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는 '5A'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직업 능력 개발을 넘어서 '삶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life)'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현행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정부 차원의 통합적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 A는 'Accessible'이다. 누구나 배우기 쉽고 편리하게 교육



[그림1]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의 비전

내용에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나 제도가 연계·통합되어 단일 창구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A는 'Adoptable'이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과히 'melting pot'이라는 표현이 절로 떠오르게 된다. 그만큼 다양한 연령, 성, 직업, 학습 동기, 학습 능력,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습자가 공존한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방법 역시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세 번째 A는 'Anytime'이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없애고자 배우기를 원하고, 학습 자료를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닝을 통해 가능하다. 즉, 학습 콘텐츠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 학습자가 접속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학습이 가능하다.

네 번째 A는 'Anywhere'이다. 이것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평생학습 관련 자원을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하고, 이를 통

해 어느 곳에서든지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흔히 PDA나 노트북,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mobile) 장치에 콘텐츠를 저장하여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다.

다섯 번째 A는 'Anyone'이다.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에서는 학습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재교육 기회를 원하는 성인 학습자, 직장인, 장애인, 해외 체류자, 장기 입원 환자, 수감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평생학습체제를 말한다.

## 2. 특징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연계성을 갖는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와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등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이나 학습 프로그램, 학습 자료, 학습 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습자의 선행된 학습 경험일지라도 축적·관리된 정보를 통해 상호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은닉성을 갖는다.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학습자는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자에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인가'가 아니라 '어느 프로그램이 최고인가'이다. 즉, 학습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특정한 장소에서만 학습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운영 주체가 달라도 관련기관의 협조에 따라 학습자가 가장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적합성을 갖는다.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통해 학습자에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학습자 중심의 유

비쿼터스 학습환경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바로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능화된 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학습자의 선행된 학습에 대한 성향과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하고, 그것을 통해 최적의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는 왜 필요한가?

현행 평생학습체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성인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 교대나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학습을 위한 시간상 제약이 따르고, 중·소 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이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 또한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사립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관리체제가 미비하여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제약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 방송통신교육 등 원격 학습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개인지도체제 미비로 학습 효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성인이 학습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담과 컨설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학습 설계 지원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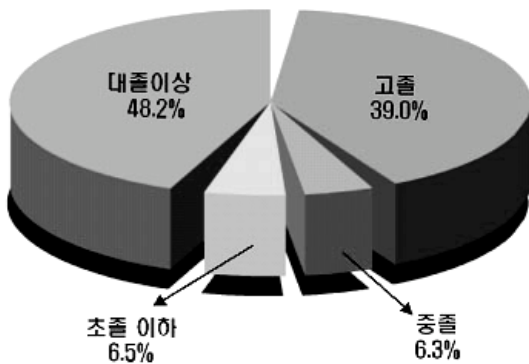
둘째, 평생학습 정책의 중복과 관리가 부재하다. 평생교육법을 비롯해 관계 법령이 42개나 되고, 그에 따른 정부의 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학습자와 학습 기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경쟁적으로 각종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평가 분석이 미비하다. 예를 들면, 지방 평생학습지원·추진의 3대 기구인 평생교육협의회,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의 소속 및 지도 감독권이 교육감으로 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 및 예·결산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일반자치단체에 유보하고 있어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과 오프



라인 교육을 통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합적인 학점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학습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재하며, 직업훈련개발 프로그램이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복 훈련 및 시간과 경비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많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취약하여 산업체 시설이나 대학 등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비하며, 재직자 학력 보안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산업체 부설 학교, 학점인정, 성인학습과정 등 지원체제가 부족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자에게 평생 학습 기회도 많이 가는 풍요의 선순환, 빈곤의 악순환 되풀이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림2] 학력별 평생교육 참여율



[그림2] 자료 : 통계청(2001),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아울러, 학력 보완형 성인교육이 미약하다. 독학사제도, 문하생학력인정제,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사내 대학 등 대안적 고등교육 채널은 많으나 검정고시 이외에 성인의 학력 보완 기회는 부족하여 성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문턱은 높기만 하다.

〈표2〉 중등교육과정 잠재 수요자 수

단위: 명

전체 인구 (15세 이상, A)	중학교 잠재 수요자		고등학교 교육 잠재수요자			합계 (D=B+C)	
	초졸	중졸	계(B)	중졸	고졸		계(C)
36,344,665	4,016,532	224,374	4,240,906 (11.7%)	3,689,228	290,015	3,979,243 (11.0%)	8,220,149 (22.6%)

자료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는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관련 기관간의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와 평가·인증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에게 알맞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1. 연계화

연계화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학습자가 전생애·통생애에 걸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의 투명화와 내실화를 기반으로 한 각 기관 간의 연계·통합이 필요하며, 평생학습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평생학습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생학습연계체제는 학교 기관, 언론 기관, 직장교육시설, 도서관, 문화관, 학원, 직업 훈련원, 원격 대학, 시민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기관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교육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하여 인력이나 시설, 정보, 프로그램 등을 교류하고, 나아가 교수활동, 학습활동, 지원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이다.

아울러, 820만 교육 소외계층을 위하여 현행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같은 방송중학교 또는 사이버 중학교 등을 설립·운영하여 방송중학

교(초등 과정 포함), 방송교, 방통대·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연계되는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학제 라인업을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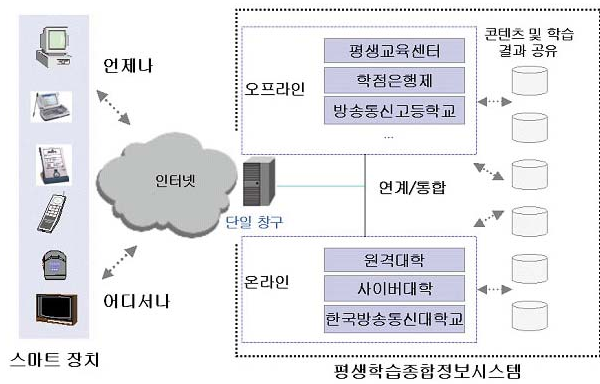
### 2. 정보화

정보화는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재소자, 장애인, 중도탈락생, 해외거주자 등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습자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및 학습 결과는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과 같은 국제 수준의 콘텐츠 표준화 기술을 통해 각 기관의 시스템이 서로 다를지라도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 3. 지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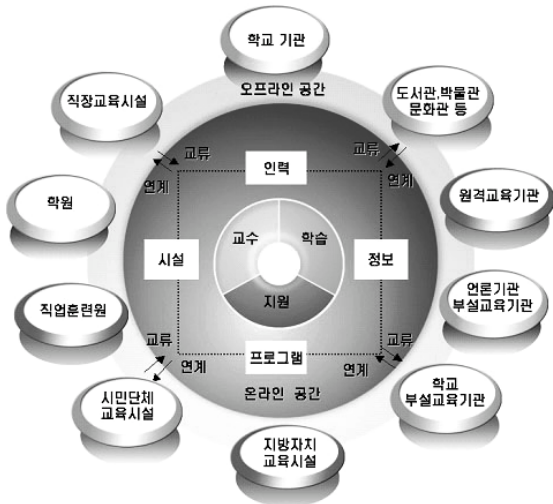
지능화는 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대한 평생학습인증체제를 구축하

[그림4]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의 개념도



여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평가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학습체제(ITS: Intelligent Tutoring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인증체제는 영국의 ‘국가자격체제(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와 같이 학교, 대학, 산업훈련, 일반 성인 교육을 관통하여 능력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수업을 받은 교육기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정하는 제도이다. 모든 학습 결과를 국가자격체제와 학제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표준화된 척도에 따라 자신의 경험이나 학습을 누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여 자격과 학력 간의 호환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능형학습체제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적용하여 컴퓨터가 인간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 주는 교수 방법으로서, 평생학습인증체제를 통해 축적된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 모델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10]



[그림3] 평생학습연계체제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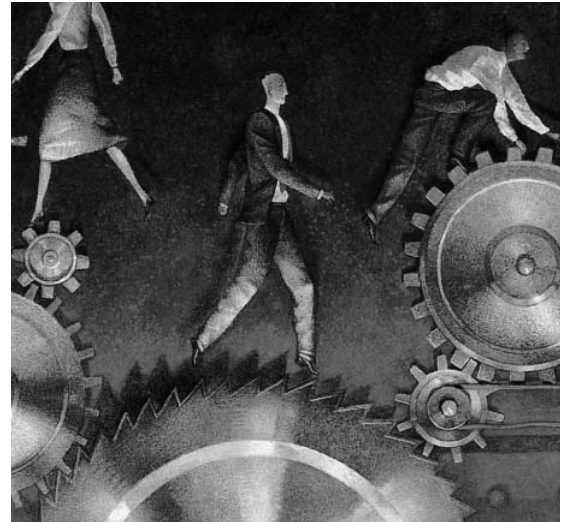
# 평생학습, 중앙 아닌 '지역' 차원에서 시작돼야 한다

- 지역사회수준에서의 평생학습실태와 개선방안

김남선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연구소장, namshun@daegu.ac.kr

평생학습은 이제 우리의 생활이며 중요한 삶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일정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기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은 대부분 지역차원에서 전개되는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평생교육학습프로그램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 익숙해 있어 평생학습도 중앙정부, 즉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모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시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의 자주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지역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지역 역량(Empowerment)을 최대화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수준에서의 평생학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교육청 등에서 평생학습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러한 지역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지역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생학습실태의 분석을 통한 평생학습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지역수준에서의 평생학습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왜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이 중요한가

지역사회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므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한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왜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이 요구되고 나아가 평생학습이 중요한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알게 모르게 수행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는 주민들간의 생산, 분배 및 소비의 기능을 수행한다.

생산, 분배 및 소비의 기능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분배하여 주민 각자의 욕구에 따라 소비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단위의 생산, 분배 및 소비체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모든 것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는 주민들 간의 상부상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부상조의 기능은 개인 또는 소집단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개인과 가정은 질병, 사망, 실업 및 사고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때 그 지역사회에서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이러한 기능을 정부, 민간지원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차적으로 그 사회의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게 된다.

셋째, 지역사회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통제기능은 지역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그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모든 지역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도덕, 규범 및 규칙 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도덕, 규범 및 규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강제력이 결여될 경우에는 그 사회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고 더욱 심하면 사회해체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 감에 따라 이러한 사회통제기능은 일정한 국가기관(예, 경찰서)이 이것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제도만으로 통제가 불가능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사회통제를 위해서는 그 사회의 가치규범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통합의 기능은 지역사회가 전체사회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보완적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전체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유지 및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가 상호 연계되어 결속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일반 대중사회보다 구성원들간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점차 사회의식이 광역화되게 됨으로써 결국 전체사회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의 지역사회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적합한 자세가 요구된다. 즉 생산, 분배 및 소비의 기능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지식이 요구되며, 상부상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통제의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의식, 즉 민주시민의식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회통합의 기능이 잘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신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급속히 변하는 지역사회속성을 감안한다면 자연발생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학습프로그램에 의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익혀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체계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단위 평생학습실태

이와 같이 지역사회가 잘 형성되어야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평생교육이 지역사회현장에서는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지역사회를 편의상 시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단위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시도단위에서 평생교육관련 분야의 내용과 투자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지방자치단체중심의 평생교육현황

##### 1) 광역시 평생교육실태현황

우리나라 7개의 광역시 중에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의 평생





교육 사업의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의 국단위 수준에서 전개하고 있는 각종 평생교육관련 내용과 그 예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관련 사업내용

우리나라 광역시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1>과 같다. 각 지자체에는 많은 국들이 있으나, 이 중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여성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자치행정국이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경제통상국과 유사한 국이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기획관리실과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관광국에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 체육 프로그램, 문화관련 시설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복지국에서는 주로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여성 교육, 노인교육, 청소년교육을 일부 담당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환경국에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지방의제21' 사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체험활동을 위한 각종 시설을 지원하고 있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업무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즉 문화관광국, 여성복지국, 환경국, 자치행정국이 주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정도가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용촉진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광역시의 평생교육관련 사업내용

주요 추진국	평생교육관련 업무
문화관광체육국(인천)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체육국(대전)	충효교실, 예술의 전당, 도서관, 미술관,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체육국(대구)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각종 문화시설 지원
문화관광국(광주)	각종 문화시설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문화국(서울)	각종 문화시설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여성복지보건국(인천)	여성광장, 자원봉사,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보건복지여성국(대전)	건강관리 프로그램, 노인복지, 여성교육, 장애인복지
보건복지여성국(대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여성교육,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노인복지
복지여성국(광주)	노인복지, 공부방, 여성교육, 사회복지단체지원
복지여성국(서울)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관 지원, 여성교육
환경녹지국(인천)	각종 공원, 생태숲, 인천의제21 사업, 환경교육
환경국(대전)	대천의제21 사업, 환경단체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생태공원조성, 각종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확충
환경녹지국(대구)	도시 근린공원 조성, 환경교육
환경녹지국(광주)	푸른광주 추진 운영
환경국(서울)	각종 공원지원, 체험활동프로그램 지원
자치행정국(인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행정국(대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민정보화 교육
행정관리국(대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치행정국(광주)	시민단체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경제과학국(대전)	녹색체험마을조성, 농업인력교육
경제산업국(대구)	소비자교육, 근로자교육, 고용촉진훈련
경제통상국(광주)	직장체험프로그램
산업국(서울)	근로자 교육 및 복지 지원, 직업훈련
기획관리실(인천)	정보화교육,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정보화담당관실(대구)	시민정보화 교육
항만공항물류국(인천)	해양수산체험학습관
건설교육국(인천)	생활안전체험 교육
소방방재본부(서울)	소방안전교육

(2) 평생교육사업의 예산 분석

광역시의 평생교육사업을 전개하는 데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광역시의 평생교육관련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서울							
용도	교육훈련	문화예술	복지	생활체육	자원봉사	학교지원	합계
시설비	0	34,873	28,338	18,080	0	25,350	106,641
운영비	15,188	800	150	3,021	0	16,034	35,193
합계	15,188	35,673	28,488	21,101	0	41,384	141,834
비율	10.7	25.1	20.1	14.8	0.0	29.1	100.0
인천							
용도	교육훈련	문화예술	복지	생활체육	자원봉사	학교지원	합계
부지비	0	0	0	0	0	25,507	25,507
시설비	0	285,875	0	109,415	0	12,035	407,325
운영비	0	6,022	2,230	0	0	299,697	307,949
합계	0	291,897	2,230	109,415	0	337,239	740,781
비율	0.0	39.4	0.3	14.8	0.0	45.5	100.0
대전							
용도	교육훈련	문화예술	복지	생활체육	자원봉사	학교지원	합계
시설비	0	8,358	133	3	0	0	8,494
운영비	527	268	522	0	95	1,835	3,247
합계	527	8,626	655	3	95	1,835	11,741
비율	30.3	73.5	5.5	0.0	0.08	15.6	100.0
대구							
용도	교육훈련	문화예술	복지	생활체육	자원봉사	학교지원	합계
시설비	0	5,717	0	3,033	0	0	8,750
운영비	425	11,095	935	381	0	1,638	14,474
합계	425	16,812	935	3,414	0	1,638	23,224
비율	1.8	72.3	4.0	14.7	0.0	7.0	100.0
광주							
용도	교육훈련	문화예술	복지	생활체육	자원봉사	학교지원	합계
시설비	0	150	6,350	5,688	0	0	12,188
운영비	1,871	1,873	3,388	1,141	20	925	15,218
합계	1,871	1,923	9,738	6,829	20	925	27,406
비율	28.7	7.4	35.5	24.9	0.07	3.4	100.0

평생교육관련 각 영역에 따른 광역시의 평생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각 광역시마다 몇 가지 동일한 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동일한 점은 평생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며, 문화예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분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 생활체육분야, 복지분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한 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학교지원에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인천과 서울 같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학교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학교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역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교육훈련은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가 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고용촉진훈련과 직무교육과 관련된 사업이었으며, 문화 예술분야는 서울, 인천은 상대적으로 광주, 대구, 대전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는 운영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었다. 생활체육 분야는 대부분 관련 시설을 건립하고 확충하는 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학교지원 분야는 서울과 인천은 시설비로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광주, 대구, 대전의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운영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분류한 근로자, 노인, 여성, 일반시민, 장애인, 청소년 중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근로자, 여성, 노인, 장애인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평생교육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적인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능력개발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도단위의 평생교육 추진실태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도단위 분석대상은 경기도,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 해 평생교육실태와 예산 등을 살펴보았다.

### (1) 평생교육 관련사업내용

분석대상인 3개 도의 평생교육관련 사업내용은 앞서 분석한 광역시의 사업내용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사한 점은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환경국, 자치행정국의 사업내용이며, 차이점이 있다면 도인 경우에는 농림수산국이 설치되어 있어 농어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광역시보다 크다는 점이다.

### (2) 주요 평생교육사업의 예산

도의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남

〈표 3〉 도단위의 평생교육 사업내용

주요 추진국	평생교육관련 업무
문화관광국(충남)	각종 문화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문화원
문화관광국(경남)	각종문화시설 설립 및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및 시설 지원
문화관광국(경기)	박물관, 문화원, 미술관 등 문화시설 지원,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영어마을 추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복지환경국(충남)	노인·장애인 복지 및 교육, 직무교육
여성정책관실(충남)	여성직업교육, 여성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보건복지여성국(경남)	환경교육, 여성교육, 자원봉사활동지원, 노인복지, 복지관지원
보건복지국(경기)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관 및 시설 지원
여성정책국(경기)	여성교육, 노인교육 및 복지, 청소년 수련시설 및 기관, 프로그램 지원
환경녹지교통국(경남)	진해생태공원
환경국(경기)	환경교육센터 지원, 푸른 경기 21 지원, 생태공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치행정국(충남)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지원, 직무교육, 문화복지시설 확충
자치행정국(경남)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행정국(경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지원, NGO 단체지원
기획관리실(충남)	정보화교육,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전자도서관
기획관리실(경남)	도립대학, 정보화교육, 사회단체 지원
농림수산국(충남)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민 교육, 어촌체험마을
농수산국(경남)	농민교육, 여성농민교육
농정국(경기)	농민교육, 여성농민교육, 녹색농촌체험마을, 양축농가교육, 어촌 체험마을, 어촌민속전시관, 입업후계자 양성
소방안전본부(충남)	이동형 안전체험관 운영
소방안전본부(경기)	이동안전체험 교실 운영
경제통상국(경남)	근로자교육, 고용촉진훈련
경제투자관리실(경기)	고용촉진훈련, 근로자교육 및 복지시설 지원, 도립직업전문학교, 국립과학관, 외국근로자 지원

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영역별로 평생교육관련 사업예산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학교지원에 대한 예산액이 상당한데 이는 경기도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을 경기도청이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이며,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생활체육관련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시설비, 문화예술관련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비에 비하면 운영비는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창 평생교육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복지분야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었으며, 교육훈련 운영비도 예산액에 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도단위 평생교육관련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경기도							
용도	교육훈련	문화예술	복지	생활체육	자원봉사	학교지원	합계
시설비	5,948	47,189	66,655	92,223	0	250,115	461,680
운영비	14,911	4,366	12,509	7,049	208	17,500	56,543
합계	20,409	51,555	79,164	99,272	208	267,615	518,223
비율	3.9	10.0	15.3	19.1	0.04	51.6	100.0
충청남도							
용도	교육훈련	문화예술	복지	생활체육	자원봉사	학교지원	합계
시설비	0	1,747	0	222	0	900	2,869
운영비	3,143	477	5,864	20	27	6,208	15,738
합계	3,143	2,223	5,864	242	27	7,108	18,607
비율	16.9	11.9	31.5	1.3	0.1	38.2	100.0
경상남도							
용도	교육훈련	문화예술	복지	생활체육	자원봉사	학교지원	합계
시설비	0	48,053	7,246	100	0	6,252	61,651
운영비	12,299	2,489	4,268	0	775	482	20,313
합계	12,299	50,542	11,514	100	775	6,734	91,964
비율	15.0	61.7	14.1	0.0	0.9	8.2	100.0



평생교육관련 사업예산이 대상별로 지원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금액인 2천억 원을 제외하면, 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비, 근로자의 교육훈련 운영비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다음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 근로자, 노인 순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이 근로자,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순으로 조사되었다.

### 3) 시도별 평생교육관련 예산비율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발전의 한 단면은 단연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공적인 영역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전통적으로 교육청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차츰 교육서비스가 시민의 만족도 증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앞서 분석된 시·도의 평생교육관련 사업내용과 예산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자치단체간의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다음<표 5>와 같다. <표 5>에서 시도별 평생교육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분석해보면, 인천의 평생교육관련 예산은 주로 문화예술 분야의 시설비와 학교지원을 위한 시설비가 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인천이 지금평생교육시설 확충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신주거지 개발로 인하여 학교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서울과 대구가 예산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은 비슷한 비율로 평생교육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 관련예산을 각 지역의 인구수로 나누면, 주민 1인당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산출된다. 충남지역이 낮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광역시보다는 도가 주민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생교육관련 예산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즉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sup>1)</sup>, 지역의 평생교육기반 시설 및 주민의 인식, 자치단체장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서 지역적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시도별 평생교육예산 비율 및 주민 1인당 예산

(단위: 백만원)

시도	2004 사업비 예산	평생교육 관련예산	비율(%)	인구수(명)	주민 1인당예산(원)
서울	4,030,993	141,834	3.5	10,276,968	13,801
인천	26,305,100	740,781	32.1	2,603,012	284,586
대구	1,106,137	23,224	2.0	2,547,968	9,114
대전	1,560,566	11,741	0.7	1,438,778	8,160
광주	3,709,268	27,406	0.7	1,400,683	19,566
경기	9,267,213	518,223	0.6	10,206,851	50,772
경남	1,953,206	81,964	0.4	3,139,017	26,111
충남	3,638,700	18,607	0.5	1,930,132	9,640
평균					

\*주 : 시도별 인구는 통계청(2003)의 주민등록인구로 계산하였으며, 2004년 사업비 예산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를 의미함.

###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추진실태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 조직과 기능, 업무 현황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추진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 관련 조직 및 기능

시·도 교육청은 지역단위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지역교육의 기본지표

1) <표> 시도의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원)

시도	재정자립도	시도	재정자립도
서울	95.5	울산	69.6
인천	75.6	부산	75.6
대구	73.2	광주	59.8
대전	74.4		
경기	78.8	전남	21.1
강원	28.9	경북	29.4
충북	31.3	경남	38.3
충남	30.5	제주	34.7
전북	25.9	총합계	57.2

를 설정하여 학교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초·중등학교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시설을 이용한 성인 평생교육, 각종시설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 사설학원 및 강습소 등의 평생교육 일부를 관장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교육청의 중요한 행정 서비스 및 교육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6개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조직을 조사한 결과대구광역시와 '과학평생교육과,' 경상남도과 인천광역시는 '평생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 모두 '평생교육체육과'로 구성되어 있다. 평

생교육 관련 주무부서의 경우 '평생교육팀,' '평생교육담당,' '사회교육담당,' '평생교육체육과'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대부분 평생교육진흥, 체육, 보건, 급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 직원 수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조직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조직

시·도	조직	주무부서	담당자	담당자 직책(명)
서울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기획팀, 평생교육진흥팀	11	사무관(2), 6급(4), 장학사(1), 7급(3)
부산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5	사무관(1), 장학사(1), 행정주사(1), 사서주사(1), 행정주사보(1)
대구	과학평생교육과	사회교육담당	3	사무관(1), 6급(1), 7급(1)
인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4	6급(1), 7급(1), 8급(2)
광주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4	지방교육행정사무관(1), 지방교육행정주사(1), 지방교육행정주사보(1), 기능직(1)
대전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2	5급(1), 7급(1)
울산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4	5급(1), 6급(1), 9급(1), 기능직(1)
경기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7	과장(1), 5급(1), 6급(1), 장학사(1), 7급(2)
강원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4	행정직사무관(1), 장학사(1), 행정직(6급(1), 행정직(7급(1)
충북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3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충남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3	5급(1), 6급(1), 7급(1)
전북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1	교육행정 7급(1)
전남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4	5급(1), 6급(1), 7급(2)
경북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3	5급(1), 6급(1), 7급(1)
경남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5	장학관(1), 장학사(3), 7급(1)
제주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4	교육연구관(1), 6급(1), 8급(1), 기능직(1)



〈표 7〉 2003년도 시·도별 지방교육비 세출 예산 중 평생교육 관련예산

(단위: 천원, %)

시도	총예산	문화 및 평생교육예산	문화 및 평생교육 예산비율
총계	25,854,105,733	95,897,004	0.37
서울	4,157,079,239	18,756,825	0.45
부산	1,826,742,613	7,829,933	0.43
대구	1,238,169,927	4,711,128	0.38
인천	1,231,347,831	5,907,259	0.48
광주	777,240,098	2,551,983	0.33
대전	779,159,708	1,817,307	0.23
울산	655,333,556	1,140,155	0.17
경기	4,716,220,592	19,624,253	0.42
강원	1,114,786,000	4,931,914	0.44
충북	974,621,647	1,776,569	0.18
충남	1,285,476,770	3,169,134	0.25
전북	1,425,432,763	4,049,406	0.28
전남	1,589,480,000	7,705,515	0.48
경북	1,805,542,000	7,003,377	0.39
경남	1,922,860,989	3,732,639	0.19
제주	354,612,000	1,189,607	0.34
합계	51,708,211,466	191,794,008	191,794,00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3), 교육통계연보

사실상 평생학습은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는 지역사회프로그램이다

〈표 7〉에서와 같이 지방영역에서의 평생교육관련 예산비율은 인천, 전남, 서울, 강원, 부산, 경기, 경북, 대구, 제주, 광주, 전북, 충남, 대전, 경남, 충북 및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수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관련 예산은 지자체의 재정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여부에 따라 그 예산규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역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앞의 지역차원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살펴본 비와 같이 지역차원에서의 평생교육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을 지역수준에서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차원에서의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힘들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평생교육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차원에서 평생교육이 보다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법적인 근거하에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평생교육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보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통합된 평생교육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교육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 때문에 지역수준에서도 매우 혼돈스럽게 평생교육이 전개되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수준에서 통합된 평생학습이 전개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평생교육 실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수준에서의 평생학습은 단순한 경험중심의 비전문성으로 전개되고 있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의 평생학습 분위기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평생학습체계가 제대로 전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의 예산 중 평생교육관련 예산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수준에서의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 의회 및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기에 그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가 요구된다.

다섯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전개가 요구된다. 평생학습은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에 근거하고 있기에 그러한 욕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지역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재의 도서관 중심의 일부 공간 및 인원활용에서 벗어나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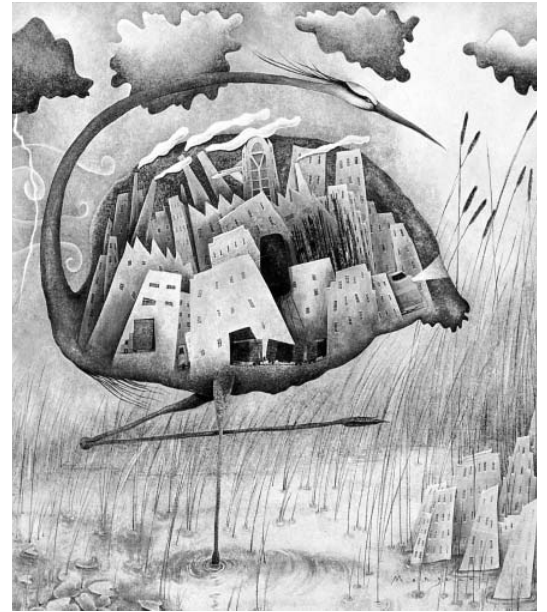




# 독일의 평생교육

권미연 | 베를린 통신원, miyun65@hanmail.net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가장 포괄적인 명칭은 우리말로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성인교육이라는 개념이 내용적으로 계속교육(Weiterbildung), 평생배움(Lebenslanges Lernen) 등과 연결된다. 그러나 성인교육이 일반적인 국민교육(Volksbildung)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교교육과 분리되어 학교교육을 받을 나이를 넘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다른 내용의 교육으로 정착되는 것은 20세기로 들어선 다음부터이다. 1920년대부터 새롭게 구성된 노동계층에서 성인은 말 그대로 성인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성인교육은 과거의 계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교육과 달리, 노동 및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는 바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학교교육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의 삶을 위해,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나이까지의 청소년에게 법적 권한을 가지고 강제하는 일반교육이라면, 이제 성인교육은 강제 없이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이루어지며, 자기 분야에서 일정하게 성숙한 역량과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확립된다.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교육개혁 속에서 '계속교육'은 1차적인 학교교육 및 직업양성교육을 마친 후에 조직되는 재교육으로 정의되었고, 따라서 일반 교육기관과 다시 연결되었다. 따라서 계속교육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과 함께 일반교육의 4번째 지주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계속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지속적인 과제로 인식되면서 일시적, 보정(補正)적, 임시적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보완적인, 평생에 걸친 교육으로 지칭되고, 이에 따라 성인교육은 바야흐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계속교육 및 평생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은 1차적으로는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노동력을 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노동력으로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것은 우선 개인이 처한 노동현장의 요구에 따른 재교육 또는 보완·보충교육으로 드러난다. 다른 한편에서 계속교육 및 평생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은 노동 및 산업현장의 요구로부터 나오는 재교육을 넘어서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한 잠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으로 나타나며 사회의 복지정책과 연결된다.

## 독일의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 1. 독일 성인교육 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

먼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 기관을 설명하기 전에 이론적 연구기관으로서 독일 성인

교육 연구소를 설명하기로 한다. 독일 성인교육 연구소는 독일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연구기관이다. 동 연구소는 연방교육부와 주교육부가 재정을 50대 50으로 출연하여 후원하는 라이프니츠 학술공동체(Wissenschaftsgemeinschaft Goffreid Wilhelm Leibniz e.V. 약칭 WGL) 소속의 독립 연구소이다. 동 연구소는 성인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학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로서 실천 지향적인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 개혁적 구상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과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성인교육의 연계망 구축, 국제활동 등의 업무를 기본으로 성인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정책담당연구자, 기획자, 교육자)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03년 7월부터 연구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프로그램으로 개편 조직되었고 그것은 재교육영역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여기서는 각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 (1) 성인학습(Lernen Erwachsener)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주된 과제는 성인교육에서 모범사례를 개발하여 교육적 혁신을 자극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 세부 프로젝트로는 저학력 여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전략(COCO), 여성을 위한 컴퓨터교육, 학습네트워크 후원, 저학력자들에게 대한 재교육동기부여, 평생배움영역의 패넬(표본집단) 추출 등이다.

#### (2) 재교육 이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주된 과제는 재교육에서 개개인에 대한 교육 욕구에 대한 자료의 수집, 분류, 평가를 통해 재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학습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여기서는 혁신적인 재교육 개념 및 교수법적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한다.

#### (3) 재교육의 조직변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과제는 재교육조직에 대한 법적 토대 및 기술 및 매체 개발이 연구되고 그 결과를 해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성인교육의 조직적 연관(예를 들어 질적 경영, 조직발전, 마케팅, 경제성 등)이 밝혀져서 이론과 실재에 매개된다.

#### (4) 재교육의 구조변경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과제는 재교육 체계를 그 토대에서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국제학술적 전문 공공성에 다가가게 만들고, 재교육 체계에 대한 지식과 이론적 토대를 매개하는 것이다.

#### (5) 유럽 재교육 콜레크(Kolleg)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과제는 유럽 석사과정 성인교육을 유럽소재 파트너 대학들과의 협력 속에서 전개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에서 재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공통적인 프로그램이 연구된다.

## 2. 국민대학(Volkshochschule)

### (1) 국민대학의 연혁

국민대학은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인교육기관이다. 역사적으로 국민대학은 다양한 발전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다. 19세기 중엽과 19세기 말엽의 노동자 및 수공업자 교육연맹을 기원으로 하는 공공강좌단체 및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대학 확산운동은 국민대학 형성의 선행시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덴마크의 그룬트비히(Grundvig)가 주창한 '고향국민대학운동'도 독일의 국민대학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전사(前史)를 바탕으로 하여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독일 최초의 국민대학이 생겼고, 1919년 제국헌법 18조를 통해 국민대학을 포함하여 시민(또는 국민)들을 교육제도를 통해 후원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세기 동안 국민대학은 전 독일에서 통일적인 성인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으며, 아울러 국민대학은 앞 절에서 밝힌 독일 성인교육연구소에서 제공되는 이론적 연구가 실



제로 운용되고 실험되는 성인교육의 현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국민대학은 독일 전역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sup>1)</sup> 또한 국민대학은 각 주 교육부 산하의 공립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은 교육부 예산에 편성되는 공공기금과 국민대학 강좌 참가자의 납입금으로 운영된다.

국민대학은 현재 재교육 시장의 주도적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대학의 강좌에는 해마다 약 900만의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약 1,000개(교육관 수 2,431)의 국민대학이 누구나 자기에 맞는 교육강좌를 자기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2) 국민대학의 강좌 내용과 강좌형식

국민대학의 계속교육은 첫째 개인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 및 개발, 건강한 삶의 영위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대학은 교육 영역에서 구현되는 문화복지 정책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하겠다. 둘째 국민대학의 계속교육은 직업적·사회적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시민들이 안고 있는 교육에서의 약점을 해소하고 직업에서의 직급 및 임금 상승 및 개인들의 직업적인 전환을 후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대학은 노동 현장에서의 요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재교육 기관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민대학의 강좌는 정치·사회·환경 영역, 문화·창의성 영역, 보건·건강 영역, 어학 영역, 노동·직업 영역, 초등교육과정 및 중등교육과정 영역으로 나누어져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배움의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대학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또한 국민대학의 강좌는 모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간

과 야간에 걸쳐 다양한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 강좌의 횟수도 주1회에서부터 주5회까지, 또 하루 1시간에서 하루 4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휴가기간이나 방학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강화강좌도 있다. 또한 학습의 형식은 교실 수업과 학습 여행, 강연, 체험학습, 견학, 현장학습(예를 들어 회사나 사무실 견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카페와 자습센터가 운영되며, 멀티미디어 학습과 원거리 학습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 주는 국민대학의 교육수준의 질을 보장하고 국민대학이 정기적으로 자기평가를 할 것, 교사진을 재교육할 것, 국민대학의 성과에 대한 비교 보고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대학의 교사진의 재교육을 위한 강좌는 일반적으로 해당 도시 소재 대학의 재교육기관에서 여러 재교육 및 계속 교육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운영된다.

### (3) 국민대학에서 주관하는 시험과 자격증명

국민대학은 노동시장의 점증하는 자격증 취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강좌를 제공한다. 그에 따라 국민대학은 다양한 시험을 주관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국민대학은 다양한 강좌를 통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하우스트스쿨레, 레알스쿨레, 김나지움 졸업시험을 치르기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강좌참가자에게 학교자격시험을 주관하고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한다. 또한 독일로 새로이 이주해오는 이주민이나 유학생들에게 독일어 어학강좌를 제공하고 다양한 독일어 어학능력시험을 주관한다. 나아가 국민대학은 대학 및 국내외의 다른 시설과의 협력 속에서 승인된 언어시험을 주관한다. 또한 컴퓨터 관련 영역에서 자격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민대학을 통해 유럽컴퓨터전문가 패스포트(European Computer

1) 2002년 현재 독일국민대학연맹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국민대학수는 바덴-뷔르템베르크(554), 바이에른(1067), 베를린(12), 브란덴부르크(36), 브레멘(8), 함부르크(8), 헤센(66),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33), 니더작센(8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146), 라인란트팔츠(117), 잘란트(35), 작센(34) 작센-안할트(34), 슐레스비히-홀슈타인(173), 튀링엔(24)에 이른다. (2431개). 베를린 주는 학교법 123조 1항에서 각 구(區, Bezirk)별로 하나의 국민대학을 운영한다는 것과 구들이 국민대학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Passport Xpert)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대학에서는 산업·상업 관련 자격증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국민대학의 시험관련 강좌는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며, 연간 10만 명의 시민들이 졸업증 및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국민대학을 방문한다. 시험의 조직과 주관은 독일국민대학연맹 산하의 국민대학과 국민대학 주 연맹에 의해 지원된다. 그 때에 중요한 어학시험 영역은 독일국민대학연맹 소속기관인 계속교육 시험시스템 유한회사에서 주관한다.

#### (4) 국민대학의 수강료와 할인제도

국민대학 수강료는 베를린의 국민대학의 경우 수업시수(45분)당 1.84유로이며, 등록시 행정수수료가 2.56유로이다. 앞서 밝힌 바대로 국민대학의 운용 목적이 모든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민대학은 사회의 복지체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대학은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높은 비율의 수강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사회적 약자층과 학생은 높은 비율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활보호대상자, 학교졸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양성과정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교졸업자
- 실업자와 그 배우자
- 중등학교 학생 및 전문대학학생, 대학생
- 직업양성과정참가자
- 군인, 군단체 복무자
- 어린이 행사에 참가하는 취학의무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어린이상의 대상자들은 50%의 수강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자도 노동청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수강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80%까지 수강료 할인을 받는다.

### 3. 일반교육시설을 이용한 성인교육 및 재교육

국민대학은 국민대학 자체의 교육관 뿐 아니라, 지역 사정에 따라 일반 중등학교의 시설을 빌려 야간에 수업을 하기도 한다. 한편 국민대학 이외의 일반 교육 시설에서도 계속교육과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학교를 야간에 개방하여 이루어지는 야간학교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김나지움을 졸업하지 못한 일반인이나, 하우프트슐레 또는 레알슐레 졸업생들을 위해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인 콜레크(Kolleg)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베를린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 베를린 주에서는 제2차 교육제도의 틀에서 성인들에게 일반학교의 졸업증을 국민대학과 함께 야간학교나 콜레크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하우프트슐레 졸업자격과정(및 레알슐레 졸업자격과정)은 중등학교의 시설을 야간에 개방하거나, 기존의 국민대학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외국인 청년을 위한 하우프트슐레 졸업자격 획득을 위한 주간 강좌가 있으며 수업은 국민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일반적인 대학입학자격획득 과정은 야간김나지움과 콜레크로 나누어지는데, 야간김나지움은 일반적인 대학입학자격획득 과정으로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야간강좌로 이루어지며, 교육기간은 예비강좌를 포함하여 8학기이다.

넷째, 콜레크는 김나지움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콜레크에서 수업은 주간 이루어진다. 콜레크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강좌체계는 (인정시험을 통해 대체될 수 있는 한 학기의) 예비강좌를 포함하여 6학기 동안 지속된다.

그리고 이와 달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강좌나 음악강좌, 연주교습 등이 각 지역의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저녁 이후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이러한 강좌는 대개 각 지역의 구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역의 구청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청소년과 성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립으로 운영되는 음악학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학교보다 더 심화하여 가르치는 교육시설인데, 이 음악학교에서도 성인이 음악을 배울 수 있다. 베를린의 음악학교의 경우 주1회 45분 개인교습의 경우에 한달 수강료는 57유로에 해당하며, 국민대학과 마찬가지로의 기준에 의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4. 대학교의 계속교육 시스템

국민대학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 영역에서 계속교육 또는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대학교에서도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학생들이 전공 공부 외에 자신의 지적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강좌를 계속교육 센터에서 주관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타 대학교 학생과 일반 시민이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계속교육의 프로그램은 대개 국민대학의 프로그램보다 수강료가 비싸다.

그리고 모든 대학교는 청강생 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일반 시민에게 대학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학자격이 없는 사람도 청강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자유대학은 한 학기에 100유로(1년 180유로)의 수강료를 받고 청강생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청강생 카드를 발급 받고 청강생으로 등록을 한 사람은 강의 담당교수의 동의를 얻으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청강생 카드를 통해 청강생이 된 사람은 베를린 주와 베를린 자유대학의 문화시설을 이용하거나 문화 행사에 참가할 때, 또한 대학스포츠 강좌에

참가할 때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주관하는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에도 할인 혜택이 있다. 한편 일부의 강좌를 듣고자 하는 사람도 청강생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 강좌 당 수강료는 15.34 유로이다. 이 때문에 독일 대학에서는 세미나나 콜로키움이 아닌 일반 강좌(Vorlesung)에서 장년층 뿐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 수강생도 자주 볼 수 있다.<sup>2)</sup>

#### 노동자들의 교육휴가 청구권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교육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항상적으로 신속히 변화하는 사회적·기술적·경제적 변화는 계속교육을 요구한다. 이때 교육휴가권은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이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교육휴가청구권은 독일의 복지정책이 지닌 장점의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이 교육휴가기간 중에 노동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집중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가진다.

교육 휴가 청구의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노동자, 직업양성교육과정참가자는 노동계약 또는 양성교육 계약을 맺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면, 교육휴가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교육휴가기간 동안에 봉급이나 임금은 고용주가 계속 지불한다. 25세 이하의 노동자는 연간 10일간의 교육휴가를 가지며, 25세 이상의 노동자는 2년 연속 기간 중에 10일간의 교육휴가 기간을 가진다. 그리고 직업양성교육과정참가자의 교육휴가청구는 정치 교육 강좌를 수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반면 노동자들은 정치 교육 강좌뿐 아니라, 직업적인

2) 나아가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도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경우에 다시 대학생이 될 수 있고, 이들이 소위 노년대학생(Seniorenstuden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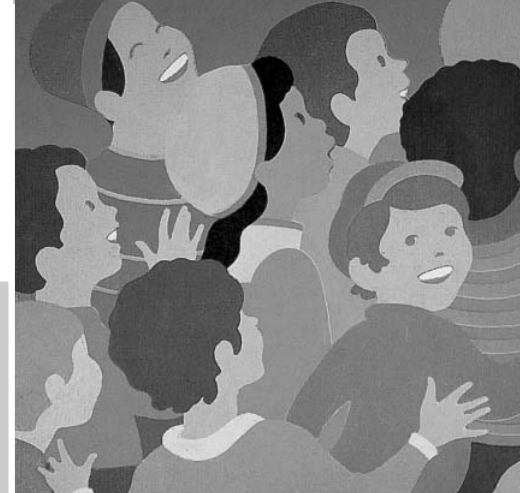
재교육 강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의 동의에 의해 교육휴가기간의 교육은 직업적인 계속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휴가일은 2년 연속기간 중의 10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교육휴가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최소한 6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고용주는 단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고용인의 교육휴가계획을 거부할 수 없다.

한 사회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게 된다. 평생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재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욕구뿐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직업적인 재교육 또는 계속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은 국가의 책임 아래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증대하는 문화적 욕구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평생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은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평생교육제도는 독일의 복지제도의 주요한 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독일의 사회 복지제도가(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제도가 축소되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평생교육제도도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론과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는 예상되는 성인교육의 수요를 앞서서 연구하여 그것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실제적 교육 현장에서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형식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평생교육이 국민대학이라는 준 공교육기관을 통해 전국 규모에서 통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공교육기관과 그 시설도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이라고 보인다. [20]

이러한 관점에서 각 대학은 대학 자체의 설립  
이념 및 교육목표에 기초하여 고등학교에서의 학습달성도  
시험, 면접, 소논문, 추천, 혹은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어드미션·오피스(Admission Office) 입시 등을 채용하는 등  
대학입시를 다양하게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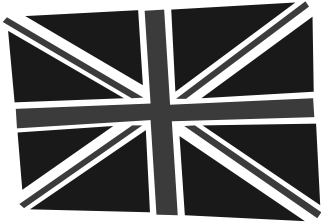
# World Education





## 영국교육에서 가장 잡음이 심한 곳, ‘고교내신’

최봉섭 | 비커리서치 대표, choi@arcu.com



이 코스워크라는 것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고교내신’과 흡사하다. 영국의 대입사정 평가는 다른 변수 없이 대입평가시험에 의존한다. 코스워크는 단시간의 주어진 시간에 필기시험으로 지원자의 적성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일종의 ‘숙제’나 ‘프로젝트’처럼 장시간에 걸쳐 작성한다.

### 영국의 고교내신, 코스워크

교사라는 전문가의 판단을 정부가 규제하고자 할 경우, ‘쫓고 쫓기는 게임’이 시작되고, 그 게임의 비용은 비약적으로 불어난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이 교육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되면 ‘편법’과 ‘위법’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진다.

지난 10여 년 간 영국의 대입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정치 사회적 변수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의 평가제도는 위와 같은 딜레마를 낳고 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잡음’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 지난 10월 11일자 영국의 대부분의 신문들은 현 여왕의 둘째손자, 해리왕자의 대입평가시험 부정행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학교가 그런 주장을 부정하고, 시험기관이 해명하고,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하고,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증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진부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었으나, 이렇게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국민의 관심을 끈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은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왕위 계승 서열 제3위라는 왕자이고, 그것을 발생시킨 학교가 영국사회 평등화의 암적 존재로 여겨지는 ‘Eton college’라는 것, 그리고, 이 부정행위를 주장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해리왕자의 교사였고, 더구나 그 교사는 해리왕자와 ‘교사와 학생’의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느 때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정행위의 주장은 법원으로 갈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 주장을 한 교사 Sarah Forsy는 부정행위 그 자체를 제소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튼 칼리지의 ‘부당해고’를 재판해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사의 주장에 의하면, 2년 전 이튼 칼리지에서 ‘아트’ 교사로 근무할 당시, 해리왕자는 자신의 학생이었으며, 해리왕자가 대입평가시험의 일부를 차지하는 코스워크(Course work)를 할 때, 아트 학과장으로부터 해리왕자를 도와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압력에 의해 해리왕자 자신이 해야만 하는 코스워크의 대부분을 교사인 자신이 해야만 했고, 왕자의 보디가드가 없는 ‘막간’을 이용해 ‘교사와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코스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을 녹음했다.





그 이후, 그녀는 학과장과의 사이에 원만한 직업인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학교는 그녀를 해고했다. 그녀는 이 해고의 이유가 해리왕자의 부정행위가 들추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코스워크라는 것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고교내신'과 흡사하다. 영국의 대입사정 평가는 다른 변수 없이 대입평가시험에 의존한다.<sup>1)</sup> 코스워크는 '단시간의 주어진 시간에 필기시험으로 지원자의 적성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일종의 '숙제'나 '프로젝트처럼 장시간에 걸쳐 작성한다.

영어와 같은 경우, 문학비평이 되기도 하고, 역사의 경우,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 수험생 자신이 리서치를 하고 자신의 주관으로 역사의 사건을 평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 작품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코스워크가 대입학력평가시험에 차지하는 비중은, 시험을 실시하는 어워드 보디<sup>2)</sup>에 따라 다르고, 학과목, 그리고 학교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코스워크를 이해하기 위해 영국의 대입학력 평가시험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해보기로 한다.

영국의 고등학교과정은 2년 과정으로, 통상 3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대학의 학과에 따라 요구하는 과목이 다르기에, 지원자는 고교 1학년에 입학함과 동시에 대학의 어느 학과에 지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수학이나 외국어를 싫어할 경우, 그것을 요구하는 대학의 학과를 피하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은 1학년말 시험(AS)과 2학년말 시험(A2)으로 두 번 나뉘어 있다. 수험생은 1학년 말 시험이 끝나고 그 성적을 가지고 여섯 개의 대학에 지원을 한다.

대학에서는 1학년말 시험의 결과를 보고, 2학년말 시험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면 입학



런던대 Institute of Education

1) 대학들이 대입사정 평가수단으로 이용하는 다른 자료들로서 중학교 졸업시험 성적, 담임교사의 소견서, 면접 등이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평가사정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 또는 지원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근년에 와서 정원과 지원자의 확대에 의해 이러한 자료들에 의존하여 지원자의 적성을 세밀히 판단하는 경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 한국의 수능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 한 곳에서 관리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대학의 신디케이트로서 구성된 법인체가 각 지역에 있고, 90년대 통합되어 런던대학을 중심으로 한 Edexcel,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한 OCR, 그리고 영국 북부지방을 관장하는 AQA가 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그 지역 대학의 시험 신디케이트가 관장하는 시험에 응시했지만, 현재는 이 세 개의 어워드 보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을 허락한다는 '가입학' 허가를 한다. 1학년 말에 좋은 점수를 얻은 지원자는 6개의 대학에서 모두 '가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낮은 점수를 가지고 6개 모두 상위권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 '가입학 허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도전권', '중위권', '안전권' 등 세 부류의 대학에 나누어 지원한다. 이 단계에서 6개의 대학에서 모두 '가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원자는 2개의 대학으로 선택의 폭을 좁혀야 한다. 그리고 2학년 말 시험(A2)의 결과를 통보 받음과 함께 지원자는 당락을 알 수 있다.

이 시험은 학습과정의 모듈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통상 한 과목은 2년 동안 18 모듈로 되어 있다. 이 18모듈은 2년으로 나누기에, 한 학년에 9모듈씩 학습하게 된다. 한 학년은 3학기로 되어 있기에 한 학기에 3모듈을 학습하는 셈이다. 3개의 과목을 공부하기에 학 학기에 9모듈, 즉 일주일에 9단위의 수업을 듣는 셈이다.

시험은 총 9단위×3 과목이기에 27개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 개의 시험은 90분에서 120분이고, 이 시험은 6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이러한 시험의 구성은 기본적인 틀이고, 학과목과 어워딩 보드에 따라 모듈을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필기시험 대신에 '코스워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시험에 임하는 지원자는 통상 6주간에 걸쳐 10번에서 20번 정도의 필기시험을 치게 된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학과목은 대부분 코스워크로 대체되기에 필기시험은 거의 없다.

### 코스워크, 가장 문제 많다

필기시험과 코스워크의 비율은 어워딩 보드나 과목, 그리고 학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나, 런던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Edexcel 어

워딩 보드가 실시하는 역사 과목 시험을 예로 들면, 9모듈 중에 필기 시험은 3모듈이고 나머지 6개 모듈은 필기시험으로 하든 코스워크로 하든 학교의 선택에 맡긴다. 따라서 학교가 최대한 코스워크를 선택할 경우 코스워크가 수능시험의 역사과목에 차지하는 비율은 66%가 된다.

코스워크의 평가는 학생의 학과목 교사 또는 학과목 연구주임이 한다. 그리고 어워딩 보드가 파견한 외부 채점자가 학교의 교사가 채점한 답안지 중에 일정량의 표본을 뽑아서 재채점을 하고, 여기서 점수를 너무 높게 주었다든가 또는 너무 낮게 주었다든가 할 경우, 그 학교의 시험 답안지 모두를 반려해서 재채점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반려가 반복되면, 어워딩 보드는 그 학교의 교사에게 더 이상 채점을 맡기지 않는다.

필기시험의 채점은 어워딩 보드가 고용한(주로) 고교 교사들로 구성되며, 7월 중순 시험이 끝난 직후 2주간 고용되는 채점관은 약 5만 명이다. 학교의 교사나 학생이 채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재채점 비용은 학교나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 과목당 수험료는 약 12만원이다. 매년 채점의 결과에 불복하고 재채점을 요구하는 수험자는 약 5~10% 정도이고, 이 중 약 30%는 상향조정되어 되돌아온다. 상향조정이 되어 올 경우, 재채점 비용은 환불된다. 하지만 재채점에서 점수가 깎여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점수에 변동이 없거나 깎이는 경우는 환불되지 않는다. 재채점의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제도는 없다.

현재 영국의 대입평가시험에서 가장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 '코스워크' 부분이다. 이러한 잡음의 양상은 천태만상이다. 앞에서 예를 든 해리왕자의 경우처럼(했는지 아닌지는 접어두고라도, 그 교사의 주장처럼) 교사가 직접 학생의 코스워크를 대신해 주



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교사가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언질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학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고, 과외교사를 고용해 도와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코스워크를 노리고 수백 가지의 '표본 답안지'를 제공해 주는 인터넷상의 회사도 생기고 있다(영국의 교사들은 이러한 인터넷 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인터넷 회사의 경우에는,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학생이 모범 답안지처럼 주제별로 그 회사의 데이터뱅크에 올려두고, 다운받은 횟수에 비례해서 모범 답안지를 올린 사람에게 지불하는 시스템도 구축한 회사도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미국식 영어에서 가려내는 교사도 있는가 하면, 한 술 더 떠서 이를 '이용'하는 교사들의 지혜도 보인다. "이번 에세이는 너무 훌륭하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부정행위의 결과인지, 너의 노력의 결과인지 판단할 수 없어 채점을 보류한다. 연말의 시험의 답안지와 비교해서 판단하겠다. 만약 연말의 시험 답안지에서 이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점은 모두 몰수하며, 교칙에 따라 정학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교사의 피드백이 있었던 경우도 있다. 물론 이 학생은 학점 취득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 과목을 필사적으로 공부했다는 후담이다.

지금 영국에서는 이러한 외부의 도움을 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그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부모라면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정도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교사가 가려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사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이다. 하지만 영국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학교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좀 더 들추어보면 그곳에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라는 구도가 나타나고, 사립학교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자녀만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영국의 사립학교는 학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연간 수업료가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학교들은 공립학교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교사 한 명당 학생수도 공립학교교사에 비해 약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학교들은 교사들의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만 점수파기가 용이한(적어도 점수 취득에 교사가 근접하게 관여할 수 있는) 코스워크를 선택한다.



런던대학교 본관



공립학교의 학생은 코스워크를 선택하고 싶어도 학교나 교사가 그것을 지도할 의무가 없고, 학교의 도움 없이 학생이 독단적으로 우겨서 선택할 경우, 자칫하다간 실패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택을 꺼리게 된다.

또한 공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 교사에 비해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코스워크를 지도할 시간이 사립학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번거로운 코스워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이 따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선택할 동기가 약하다.

사립학교의 교사는 코스워크를 선택하여,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코스워크 에세이 작성 요령이라든가,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는 요점을 짚어준다든가, 또는 최소한 교사는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쓸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하고 일정에 따라 점검해 가면서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학생 한 명, 한 명, 염두에 두고 지도하고 관리해 간다는 것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런 사립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자 할 경우, 만약 학생이 학교의 그러한 개입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는 그것을 가려낼 방법이 없다.

이 외에도 고교의 교사가 대입평가사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대학 지원서에 '교사의 소견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다. 이 소견서에는 중학교 졸업시험성적과 함께 지난 2년간의 학력 발달상황이 어떠했으며, 학교 졸업시, 대입학력평가시험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주고, 학생의 상벌 관계, 가정환경의 특수성, 지원자의 잠재성, 교사의 의견 등을 기록한다. 현재 이러한 소견서는 90년대처럼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서는 학년말 시험의 결과 중 약 40% 정도는 교사의 예측이 빗나가고 있으며, 교사의 평가 역시 '인플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 동안, 대입평가시험의 고득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 일부 명문대학에서는 대입평가시험이 변별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본고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교육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 그리고 의과대학의 경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는 지원자를 정원의 2배수까지 선별해서 대학이 자비를 들여 3일간 합숙을 통해 지원자의 적성을 판단한다. 여기에는 학과목 교수 뿐만 아니라 심리학 교수까지 동원이 된다.

대학이 어떤 식으로 신입생을 선별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재량에 달려 있다. 때때로 정치가나 언론들은 대학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간섭 할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치가나 신문기자의 주장보다는 교육의 전문가인 교수의 판단을 신뢰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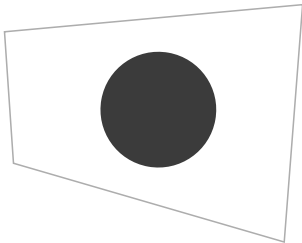
그리고 한국의 교육부는 대학이 적절하지 못한 입학사정을 실시할 경우, 재정지원을 줄인다고 하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지만, 영국의 경우, 대학재정 분배권은 '전국 대학협의회'인 HEFCE에 주어져 있어 교육부가 나서서 어떤 특정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10]



최근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개혁

## 최근 일본은 대입제도를 다양화 시키고 있다

윤종혁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장, jonghyeok@kedi.re.kr



그런데 대학입시제도는 학교생활에 '여유와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을 개척하는 능력'을 육성한다는 초등·중등교육의 개선방향을 존중하면서,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활동을 적확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미국의 점령정책 속에서 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미국식 제도를 모델로 해서 대폭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학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고등학교에서의 성적, 즉 내신서를 중시하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후 교육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학 진학 희망자가 격증하고 사립대학도 그 대열에 참가하여 입학시험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진학적성검사와 내신서는 그 비중이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마침내 실시한 지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진학적성검사제도는 폐지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 사회는 입시개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시 대두하였고, 이에 두 가지 방향으로 입시개혁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입학시험을 공동화하는 방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신서를 중시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느 것 하나도 대학 측에서 채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도 못 가서 실패하고 말았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 이번에는 국립대학 사이에서 입학시험을 전국 공동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1979년에 대학입시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공통제1차 학력시험'이라는 명칭의 학력시험(현재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전신)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공통제1차 학력시험의 '제1차'가 의미하는 것은 '제2차'가 전제되어 있음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학입시센터에 학력평가를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자유로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각 대학은 독자적으로 제2차 학력시험으로서 독자적인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문부성은 '공통제1차 학력시험'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사립대학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공통제1차 학력시험제도'가 발족한 당시에는 사립대학들이 이 제도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립대학도 일부분의 입학정원에 대해서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제1차 시험으로 활용하고, 혹은 이 시험만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어쨌든 국립·사립대학은 모두 일류·명문대학일수록 공통시험보다는 독자적인 입학시험을 고집하고, 이를 통해서 고도한 학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下村哲夫, 「育改革21世紀・日本教育讀本」, 東京: 育開開發究所, 2001.
- 日本文部省, 「我國教育施策」, 2000.
- 日本文部科學省, 「文部科學白書」, 2002.
- <http://www.mext.go.jp>



### 1990년대의 대학입시개혁 - 중앙교육심의회 개혁안

일본의 입학자 선발제도는 입시중심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점차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입학자 선발제도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학력 중시의 사고 방식이며, 일류대학일수록 입학시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입학자 선발방법은 객관타당성, 실용성, 공평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은 학력평가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능력보다도 학생 본인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바탕하여 언제나 현재 시점의 학력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는 논리의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중시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는 학력 이외의 조건을 가미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사립대학 중에서는 다양한 입학자 선발방법을 사용하는 대학들이 있다. 게이오(慶應)대학이나 와세다(早稻田)대학과 같은 일류대학에도 부속학교를 병설하고 있는데, 일단 부속소학교 혹은 중학교에 입학하면 그 뒤로는 거의 자동적으로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간토(關東)지역에만 약 70여 개 정도 있다. 이는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교육시스템으로서 사립대학은 이와 같이 특권적인 입학 과정을 통해서 대학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사립대학의 경우 일반입시를 통해서 치열한 학력시험에 합격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학력시험도 없이 추천입학으로 진학하는 자도 있으며, 부속학교에서 진학한 자도 있을 정도로 입시제도의 다양화가 정착해가고 있다.

반면에 국립대학은 학력시험 이외의 입시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국립대학이 사립대학과 차

이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국립대학도 입학자의 선발방법 다양화 정책에 참여하여 사회인 입학제도, 해외 귀국자 자녀에 대한 특별선발시험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계층과 집단에 대한 입시배려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대학입시개혁에서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일본의 입시 경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자녀화(少子女化)가 진행되면서 대학·고등학교의 경쟁적인 입학 수용력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의 학생 수용능력은 2009년에 100%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률은 이미 2002년 현재 98%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정 일류대학·고등학교를 둘러싼 입시경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에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가운데 '생활을 개척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학자 선발제도의 개선과 학력 중심 사회의 편견을 시정하는 방안을 통해서 입시경쟁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문부성은 선발방법의 다양화, 평가척도의 다양화, 수험기회의 복수화, 추천 입학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학자 선발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 입학자 선발제도는 대체로 학력시험체제에 편중하고 있어서 학생 스스로 배우고 사고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본 문부성은 다음과 같은 5대 기본방향에 따라서 입시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 선발방법의 다양화, 평가척도의 다원화
2. 초등·중등교육의 개선 방향을 준중하는 차원으로 입학자 선발 제도의 개선



3. 영향력있는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출신수범하는 입시제도 개선
4. 입학자 선발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 정비와 관련 시책의 추진
5. 고등교육 전체를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

일본 문부성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대학센터시험과 대학별 본고사 등 학력시험에 치중하는 입학자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선발방법을 다양화하고 평가 척도를 다원화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각종 조사보고서, 소논문, 면접, 실기검사, 추천문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다각적인 평가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경험과 학습성과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모색하고 있다. 일반 성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일정한 직업체험·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가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고등학교 혹은 종합학과 졸업생들을 배려하여 특별선발제도와 추천입학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학교를 지정하여 동일계열의 진학 희망자에 대한 추천입학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문화·스포츠 활동 혹은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학생을 입학 사정에 높이 평가하는 방안도 장려하고 있으며, 해외 귀국자 자녀에 대한 특별선발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학입학선발제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지역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입학정원의 일부를 할당하여 지역을 지정하여 추천입학을 실시하는 방안도 실천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입학선발과정에서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동일 대학의 동일 학부·학과에 대해 복수의 선발기준을 모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영향력 있

는 특정 대학의 입시선발제도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청해 여타 대학의 입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수립했다.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4월 입학제도 이외에도 9월 추계입학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9월추계입학은 해외 귀국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일반 성인 이외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력선발고사 이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하게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입시제도는 학교생활에 '여유와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을 개척하는 능력'을 육성한다는 초등·중등교육의 개선방향을 존중하면서,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활동을 적확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내신조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신조사서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중앙교육심의회는 고등학교의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이수과목 지정제도를 통하여 학력선발시험에 따르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사고력과 종합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학력시험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개별 교과에 대한 학력시험체제도 개선하여 영어의 듣기 평가, 이과의 관찰·실험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1989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대학입시센터시험제도는 사립대학까지 이를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을 통해서 각 대학별 본고사를 점차 감축시키고, 나아가서는 대학별 본고사를 통하여 접수별 당락을 결정하는 현행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예술대학과 같이 실기검사를 중시하는 대학은 센터시



험의 결과를 복수년도에 걸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와 함께 동일대학에 있어서 전·후기 분할모집방안을 활성화하여 후기 일정의 모집인원 비율도 적정선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획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한 입시행정과 선발제도를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입학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여유가 있는 입시일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시선발이 끝나는 시기를 4월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개선하고 대학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2000년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최종 보고 - 대학입시의 다양화를 통한 개혁

2000년부터 오부치(小淵) 내각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교육개혁국민회의는 2년간 국민 여론을 수렴한 끝에 2000년 12월 22일 최종보고를 제출하였다. 이는 2002년 이후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의의 제안에 전폭 수용되어 집약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 개혁은 그 이전에 10년 이상 실험적으로 추진해 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새로운 대학입시 개혁은 주로 입시 출제의 기억력 편중을 개편하여 대학입시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시에 이는 그 이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입시 개혁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대학입학시험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문제의 해결 방법을 추출하는 능력, 그리고 추리력 혹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등 다

양한 자질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는 고등학교의 교육력 혹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대학은 대학 자체의 설립 이념 및 교육목표에 기초하여 고등학교에서의 학습달성도 시험, 면접, 소논문, 추천, 혹은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어드미션·오피스(Admission Office) 입시 등을 채용하는 등 대학입시를 다양하게 추진한다.

둘째, 국제화를 추진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의 학생에게 사회체험 등의 시간을 부여하는 관점에서 대학의 9월 입학은 많은 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학 입시에서 과도적으로 몇몇 대학에서 수행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9월 입학제도를 일본의 교육상황에 맞게 수용하는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을 입학할 당시의 입학 정원 규제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에게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잠정입학제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학입학시험에서 합격선에 근접한 일정 비율의 수험생을 잠정적으로 입학시켜서, 1년간 면학 성과를 지켜본 후에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수용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입시개혁은 그 이전에 수행해 온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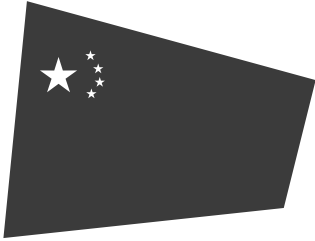
대학입시의 다양화 방식을 긍정적으로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을 실시하는 이러한 구상은 우리의 대학입시 개혁과 관련해서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1]





## 중국의 대학입시제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유경희 | 북경희문고등학교 교사, liujingji@hanmail.net



1978년도부터 실시해 온 통일고사는 과거제도와 당시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당시에는 대학 입시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고,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이 소질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통일고사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중국의 대학 학생모집제도는 통일고사를 통한 통일모집과 대학별 자주적인 모집 두 가지 선발제도를 교차적으로 실시하다가 개혁개방을 실시한 후 20여 년간 통일고사로 학생을 모집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통일고사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의 실시는 그동안 국가적 기틀을 바로잡고 인재를 선발·배출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고 특히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통일고사로 학생을 모집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 폐단을 보여주었는바 초·중등교육이 지식만 중시하고, 능력신장을 소외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어 개인의 소질을 길러주는 교육의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대학의 인재선발 자주권을 침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005년 9월부터 초·중등학교의 신교육과정의 전면 실시됨에 따라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였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대학입시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향후 중국 대학입시제도의 개혁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국의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중국은 수나라 때부터 과거제도의 형식으로 인재를 선발하였다. 청나라 말 과거제도는 폐지되고 1920년대부터 대학에서 자주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되고 계획경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는 각 고등교육기관의 연도별 학생모집 지표를 하달하고, 전국 범위에서의 통일고사를 실시하여 학생을 모집·선발하였다.

1958년 교육혁명기에 들어서면서 “학생모집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지역과 대학의 실정에 맞는 학생모집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던 제도를 개혁하여 학교에서 단독모집 또는 연합하여 모집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학생모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 시, 자치구 및 대학이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집대상의 연령을 30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공인, 농민, 공농간부, 제대군인 및 혁명에 참가한 경력이 만 10년 이상의 재직간부의 연령은 35세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취하여 일반학생에 대한 합격사정을 하기 전에 사전 모집하는 전형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이들 중 경력이 긴 우수한 간부에 대하여 무시험 추천제를 통한 입학제도를 실시하였다. 중등전문학교의 졸업생은 주관부서 또는 현지 교육행정부문의 허



가를 거쳐 직접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을 실시하면서 교육황폐기를 맞이하였고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연속 4년간 학생모집이 중단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 북경대학, 청화대학이 노동자, 농민, 군인을 상대로 하여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신입생 선발규정은 2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노동자, 농민, 해방군 사병만이 입학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당해연도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대학에 지원하는 자의 학력조건에 대한 규정은 “중학교 졸업 이상자에 상당하는 실제적인 문화수준을 갖추고 있는 정도”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폐지되고 “지원하여 입학신청을 하고, 대중의 추천을 거쳐, 지도자의 비준과 학교의 재심”을 거쳐 입학이 허가되었다.

1977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고등교육도 복구기를 맞이하여 1977년 8월부터 대중의 추천에 의한 학생모집제도를 개혁하여 고등학교 또는 동등 학력을 구비한 학생을 모집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생모집 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지원 후 통일시험을 실시하며, 1차시험(모집 수의 3~5배로 정함)에 합격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모집하고 성, 시, 자치구에서 비준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역사적인 고찰로 보면 중국의 학생모집제도는 당시의 정치와 경제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중국의 현행 대학입시제도

중국의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개혁개방이후 20여 년간 국가통일고사를 실시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기본골격을 유지한 것이다. 대학 시험은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실시되고 문과 시험과목이 국어, 영

어, 수학, 정치, 역사, 지리 등이고, 이과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정치, 물리, 화학, 생물 등 과목이었다. 시험날짜는 매년 7월 7일부터 2~3일간이며, 지역할당제를 실시하여 각 대학이 각 성별 정원을 정하여 갖지 않은 커트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경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점수가 북경호적을 가진 지역의 수험생과 산동호적을 가진 지역의 수험생과 많은 차이가 난다는 의미이다. 북경과 상해 등 도시지역은 기타 지역보다 점수가 낮아도 해당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중국과 외국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입시내용에 대한 개혁을 하기 시작하여 1998년 하반기부터 시험과목을 3+X(3은 국어, 영어, 수학을 말하는 것이고 X는 종합과목을 말하는 것인데 문과종합은 정치, 역사, 지리 3개 과목이고, 이과종합은 물리, 화학, 생물 3개 과목이다)로 줄였는데 학생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개성과 특기를 중시하며, 어느 과목에 편중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2000년 1월부터 북경, 안휘성 등 지역에서 일년에 시험을 두 번씩 보는 등의 형식으로 시험횟수를 조절하였고, 2년 후에는 상해, 천진, 내몽고 등 지역도 일년에 시험을 두 번 보도록 시험횟수를 조절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는 입시날짜를 7월 7일에서 6월 7일로 앞당겼는데 이는 무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환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금년에 교육부는 북경대학 인민대학 등 28개 대학에 신입생의 5%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학이 자주적으로 모집하는 자주권을 부여하였고 북경 외 9개 성에서는 각 지방에서 출제한 시험지로 통일고사 시간에 시험을 보게 하였다.

###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

1978년도부터 실시해 온 국가 통일고사 입시제도는 과거제도와



당시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당시에는 대학입시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고, 고등교육이 대중화단계로 들어서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이 소질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통일고사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시험성적 위주의 입시제도는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 교육의 지옥으로 만들고 소질교육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에서 오랜 기간 실시해오고 있는 통일고사 성적에 의한 대학 신입생 선발제도는 그동안 공평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입시교육을 하도록 부추기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입시교육은 지식테스트에만 편중하여 학습과정을 소홀히 하고, 학습결과만 중시하는 현상을 초래하며,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개발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여, 초·중등교육이 소수인, 즉 대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신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현행 입시제도가 신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둘째, 지역할당제와 각 지역 대학 합격 점수의 차이는 교육평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할당제로 인하여 북경, 상해 등 합격선이 낮은 대도시 지역, 정원이 많이 할당(북경, 상해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학이 많이 집중된 것도 본 지역 학생들이 수혜자로

되는 여건 제공)되는 지역의 수험생이 수혜자가 되고 입학 합격선이 높은 지역의 수험생들이 피해자로 되어 일부 학생들의 교육평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중국교육부를 상대로 2001년 산둥성의 몇 학생들이 북경지역의 합격선이 산둥지역보다 낮은 것이 헌법상의 교육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사례는 이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셋째,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총점수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여러 지방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여러 가지 부정행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2004년 시험 도중 부정행위 사건이 산둥성에서 70여 건, 산서성에서 25건 적발되었다. 하남성 보양3중에서 단체로 부정행위를 한 사건이 적발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sup>1)</sup>

시험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높은 점수를 취득하여 대학입학허가서를 편취하는 행위는 대학이 우수한 인재 선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기준 미달인 학생이 입학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학생선발 관련 부정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규정상 합격선에서 20점이 낮은 학생들 중에서 대학이 자주적으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 중국 대학의 학생선발 자주권이다. 교육부에서 금년부터 일부대학에 학부신입생 5%에 대한 자주권을 부여하여 대학의 자주권을 많이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대

1) 하남보양3중 부정행위 사건이란 수험생들이 문제를 베껴서 감독교사와 현장감독 직원을 통하여 경계선 밖으로 갖고 나가게 한 것, 수험생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문제를 시험장소 밖으로 전달한 것, 교사나 학생이 디지털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서 카메라를 밖으로 전달한 것 등 수단을 이용한 것인데 밖에서 대기하던 전문교사가 답안을 작성한 후 컴퓨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시험장소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현장 감독직원을 통하여 답안 메모지를 시험장소로 전달하는 등의 형식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법적 제재를 받은 사건을 말한다.



학의 선발에 있어서의 자율적 권한이 확대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로 인해 학생선발 관련 부정사건을 빈번히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합격선 내의 자주권과 5%의 신입생 선발자주권을 부여받은 일부 대학들에서 이 부분의 학생선발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여 학생 선발담당자들의 부정사건이 야기되었다. 금년에 북경 항공항천 대학에서 한 수험생에게 10만원으로 입학허가서를 교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서안과기대에서는 2만원으로, 서안재경대학에서도 3만원을 대학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허가를 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여 전국민들의 주목을 끌었고 분개를 자아냈는데 이는 대학자주권행사에 대한 관련부서의 감독이 시급함을 설명해 준다.

### 중국 입시제도의 개혁동향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계하는 입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기존의 통일고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아니면 외국의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전환기에 처해있는 중국에서 과거제도처럼 통일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 자주권이 커지면 여러 가지 비리와 부패행위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서이다. 그러나 신교육과정<sup>2)</sup>이 실시되고 초·중등교육이 소질교육을 추진하면서 이와 상반되는 입시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정부에서도 입시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외국의 입시제도 경험을 참고하고 중국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개혁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1) 통일고사를 위주로 하지만 점수를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하지 않는 종합적 학생선발제도를 구축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입시 개혁이 우수한 인재선발에 유리하게 하고, 소질교육 추진에 유리하게 하며, 대학 학생선발 자주권 확대에 유리하게 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시험내용을 학생들의 지식에 대한 이해, 응용, 분석, 문제

2) 신교육과정은 소질교육을 목표로 하여 만든 교육과정인데, 학습과정을 중시하고, 능력과 소질개발을 중시한다. 신교육과정에 의하면 국가교육과정, 지방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성, 선택성을 부여하며, 봉사활동과 사회공익활동 및 종합실천활동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결 능력을 점검하는 종합평가의 내용으로 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며, 입학고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정성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다. 초·중등학교는 소질교육의 요구를 반영하며, 고등학생의 사정과 평가에 재학기간의 연구형 학습, 사회봉사활동 및 생활기록을 여실히 반영하여 대학 학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2) 통일고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선택성 고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선택성 고사란 대학자체에서 출제하여 시험을 보는 것을 말한다. 시험과목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3+X」에 대한 과목 설치방안을 개선하여 X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음악, 체육을 포함하여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으로 하며, X에 대한 선택권을 대학에 부여하여 대학에서 본교의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설정하게 하며, 수험생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한다. 종합능력 테스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출제성향을 추구한다.

3) 여건이 구비된 대학과 몇 개의 대학이 연합하여 단독으로 출제하고,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4) 추천생제도를 계속 실시한다. 전국 통일고사를 위주로 하고, 단독고사, 추천, 위탁양성등의 다양한 형식의 시험 선발제도를 구축한다. 이러한 차등정책은 중국 전역에 걸쳐 경제·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한 교육평등권을 구현함과 아울러 후진지역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5) 여러 차례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에서는 각성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학생선발, 시험 차수, 시간 등도 각 성·시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자주권을 부여한다.

6) 정보통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대학이 원격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학생선발을 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채점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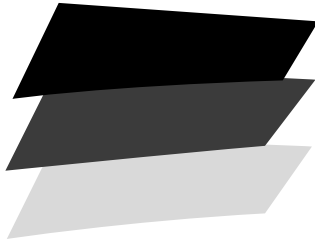
7) 고등학생이 소속학교를 통해 신청과 입학허가통보를 받는 방법을 개선하여, 지역사회를 통한 대학입학관련 신청 업무를 실시하여, 교육행정부서에서 관련업무를 조직하고, 학생들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본교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입시만 중시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이다.

8) 시험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험과 선발업무 관련 부정행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하여 교육의 공정성, 공평성이 구현되도록 한다. 필요시 이와 관련된 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함과 아울러 법 위반한 행위와 개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한다. [10]



## 독일의 교수 임용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김종기 | 베를린 통산원, ki1325@hanmail.net



하빌리타치온(교수자격취득과정)은 독일의 교수임용과정의 특색이자, 독일대학에서 교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전통적인 하빌리타치온은 더 이상 독일 대학의 학문적 깊이의 상징이 아니라, 독일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대학교육 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니어교수 제도(Juniorprofessur) 도입 및 교수자격취득과정(Habilitation) 폐지, 대학등록금 징수제 도입과 엘리트 대학교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 사안이 모두 정치적·사회적 견해의 차이에 따라 치열한 찬반 논쟁과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실력 대결로 치닫는 형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중 독일의 교수 임용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독일의 교수 임용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 독일의 교수 임용제도의 특색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의 교수 임용제도는 우리나라 및 영미식 제도와 다르다. 독일에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이라 불리는 교수자격취득과정을 거쳐 교수자격취득 논문이 통과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학의 교수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이 하빌리타치온 제도는 독일의 특색 있는 교수임용 제도로서 독일 대학에 하빌리타치온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이다. 독일에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을 거쳐 하빌리타치온까지 어렵고 오랜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하빌리타치온은 그 자체로 독일 대학교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독일의 대학교원은 정규직 대학교수와 사강사(Privatdozent)가 있고, 비정규직 교수로 객원 외 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Lehrbeauftragte, Hochschuldozent)<sup>1)</sup>가 있다. 신진연구자가 교수자격취득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면, 사강사 자격을 획득한다. 사강사는 우리나라의 시간강사와 달리 교수자격취득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교수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수자격취득 논문 외에 여러 연구 업적 및 공개강연, 구두시험, 그리고 교육활동경력이다. 이렇게 하여 교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에서 사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사강사 기간 중에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는 사람이 교

1) 이 시간강사라는 직책이 한국의 시간강사라는 직책과 비슷하며, 이 시간강사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하빌리타치온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학강사(Hochschuldozent)라는 명칭은 직급이 아닌 일반적 의미로 쓰일 때는 포괄적으로 사강사(Privatdozent)를 지칭하기도 한다.



수로 초빙을 받는다. 이 사강사 중에서 일정기간 계약제로 임용되는 교수가 C2 교수이다. 그리고 C3 교수와 C4 교수가 흔히 말하는 독일 대학의 교수라고 할 수 있다. C3 교수부터는 계약제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이며, C4 교수는 한국의 정교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한국과 다른 특징으로서 지적해 둘 만한 것은 초빙될 교수는 그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주의 대학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연구자가 어느 대학에서 하빌리타치온을 하였으면, 원칙적으로 그는 같은 대학에 임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 대학법 57조 1항에는 교수는 장관(Staatminister)에 의해 초빙되며, 이때 장관은 대학에서 추천한 순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같은 대학의 구성원을 초빙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C3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C3 교수에서 C4 교수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의 초빙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 하빌리타치온 제도를 둘러싼 공방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수자격취득과정(Habilitation)은 독일의 교수 임용과정의 특색이자, 독일대학에서 교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전통적인 하빌리타치온은 더 이상 독일 대학의 학문적 깊이의 상징이 아니라, 독일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하빌리타치온 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를 간단히 요약해보자.

먼저 반대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하빌리타치온 과정을 마치는 연구자들의 평균 연령이 39.5세에 달해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도표 1 참조). 따라서 그들이 교수로 초빙을 받지 못하면 대학교 이외에서 적당한 일을 찾기가 힘들다.
2. 연구자들은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남거나 또는 연구 기관에서 자리를 얻는다는 보장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여야 한다.
3. 교수자격 취득을 위해 한 지도교수 밑에서 학문적으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비자립적으로 의존적인 기간을 보내야 한다.
4. 후진 연구자의 종속적인 지위가 학문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시기에 그들의 생산성을 저해시킨다.
5. 하빌리타치온을 하는 연구자들이 지도교수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효과적으로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택하고, 학문적으로 실질적이며, 성과가 있는 주제를 선택하기를 기피할 경향이 높다.
6. 논문 심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소속 및 같은 학부의 동료들이 참가하고 외부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하여, 내부지향적이 되어 연구 주제가 국제적 연구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7. 하빌리타치온 과정의 연구자들은 대개 자기 고유의 작업을 위한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작업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8. 대개의 학문영역에서는 연구결과의 획득과 공유가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데, 단일 주제로 이루어지는 하빌리타치온은 학문적으로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다.
9. 하빌리타치온 과정의 연구자들이 법적인 제한 및 연구와 연관된



제한으로 인해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하빌리타치온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자격을 얻고자 외국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아진다.

한편 찬성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하빌리타치온은 연구와 가르침에서 미래의 대학교수들에 대해 요구되는 것을 준비하는 2차 과정으로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그것을 폐지할 근거가 없으며, 필요한 개혁은 하빌리타치온 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 하빌리타치온은 후진 연구자가 학문적인 근본 토대를 확립하고 학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틀이다.
3. 하빌리타치온 과정의 연구자가 지도교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높은 수준의 학문적 자격 부여를 보장한다.
4. 한 주제 영역에서 여러 해에 걸친 연구는 연구자를 높은 질적 수준으로 이끈다. 동시에 박사과정에서 하빌리타치온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확대된 주제 영역은 해당 연구자들을 전문 분야에서 더욱 포괄적인 연구자로 만든다.
5. 이론을 구상하는 영역(정신과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및 자연과학의 일부)은 포괄적인 문헌과 자료 작업이 요구되므로, 단일 주제로 이루어지는 하빌리타치온이 연속적 작업에 가장 적합하다. 경험 실험적 영역(사회학 일부, 자연과학, 공학, 의학)에서는 지식의 지속 기간이 짧고 항상 새로운 연구 성과가 발표되므로, 오히려 축적된 하빌리타치온을 통해 국제적 흐름을 쫓아갈 수 있다.
6. 학부 및 학과의 책임 하에서 하빌리타치온 절차를 통한 학문적

작업의 정형적인 종결은 후보자들의 학문적 활동의 탁월함과 교수로 초빙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된다.

7. 하빌리타치온을 통해 인정된 연구와 교수능력 및 출신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의 교수직에 응모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최고의 학문적 기준과 학문적 실질에 맞지 않는 이해의 개입을 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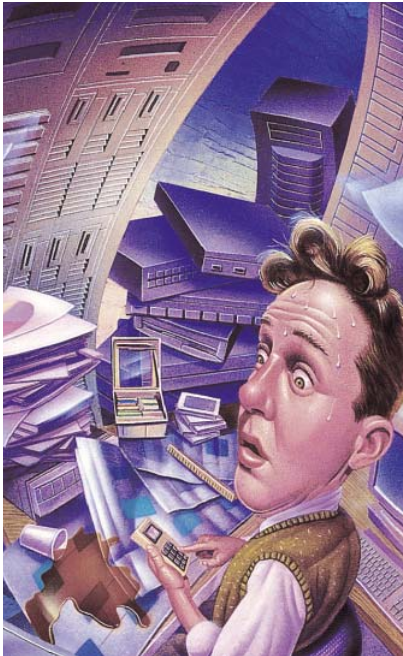
이상에서 요약해 본 하빌리타치온의 개혁 또는 폐지를 둘러싼 논쟁들은 아주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 그런데 한 연구서에 따르면 1993년부터 1998까지 하빌리타치온 과정을 마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27.5%가 하빌리타치온을 대학 교수가 되는 데 필요한 핵심적 학문 활동이라고 평가하며, 37.2%는 중요하지만 다른 학문 활동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35.3%는 의식(義式)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하였다. 나이가 같은 연구서의 조사에서는 하빌리타치온의 폐지(41.1%)나 내용적 개혁(33.9%)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였고, 하빌리타치온이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소수(21.1%)였다 (도표 2 참조)<sup>2)</sup>

그런 와중에 2001년 상반기에 연방교육부장관 에델가르트 불만 (Edelgard Bulmahn)은 주니어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하빌리타치온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교수임용제도를 둘러싼 개혁 논쟁을 가열시켰다.

당시 그녀는 독일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미래에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체계의 문제를 뿌리에서부터 점검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아울러 앞서 제시된 바

2) E. Berning 외 2인, Das Habilitationswesen an der Universitäten in Bayern Praxis Perspektiven, Bayerisches Staatinstitut für Hochschulforschung und Hochschulplanung, München, 2001, 52, 54쪽 참조.





와 같이 하빌리타치온에 반대하는 견해의 입장에서, 그 대안으로 주니어교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다른 한편 교수의 급여 체계를 연령에 따른 호봉 체계에서 연구 업적에 따른 성과급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이가 같은 대학의 구성원이 같은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오던 전통을 완화하여 연구자들이 출신 대학에서 (주니어 교수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주니어교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젊은 연구자들이 20대와 30대의 창조적 시기에 자립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녀는 이를 통해 독일의 대학체계가 젊은 연구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되어야 하며, 나이가 독일 대학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연구인력을 독일로 다시 끌어오고, 더 나이가 외국의 연구자들도 이끌어 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계획된 주니어교수 제도의 핵심 내용

이렇게 불만은 주니어교수 제도의 도입을 역설하면서, 2002년 2월 23일 대학교육기본법 (Hochschulrahmengesetz, 대학교육대강법) 5차 수정법령 47조를 통해 주니어교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동 법령은 주니어교수 제도는 대학교육직무법 개혁의 핵심이며, 주니어교수직은 연구자가 정년보장 교수로 초빙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과 아울러 기존의 학술조교(Wissenschaftliche Assistent), 고등연구조교(Oberassistent), 협력연구원(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고등기술조교(Oberingenieure), 대학강사(Hochschuldozent)직이 폐지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 법령의 다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주니어교수는 3년 계약으로 임용되며, 1회에 걸쳐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년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주니어교수로 임용된 연구자들은 학문적 성과나 능력에 따라 정교수로 초빙 받을 수 있고, 하빌리타치온 과정 연구자와 달리 이미 교수이므로 교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강사와 비정규직 교수직은 폐지되지 않으며, 주니어 교수 임용과정 연한을 마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서 아직 정규교수로 초빙되지 않은 연구자들이 사강사 또는 비정규직 교수의 직함을 받는다.

이전의 학술조교나, 협력연구원은 대개 하빌리타치온 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이 지도교수 밑에서 얻는 직책이었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연구 영역이 없었다. 이와 달리 주니어



교수는 실질적으로 자립적인 대학 교원으로서 고유의 연구 영역과 과제를 가지며, 스스로 연구 과제를 준비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주니어 교수는 호봉 등급으로는 C1 교수에 해당하며, 교육의무는 6년 간의 과정 동안 한 학기 4주일에서 6주일로 계속 증가한다. 임기 말에 주니어교수는 정규교수에 근접하는 양의 교육 활동을 한다. 그리고 주니어교수는 개별 전공 과목 교수로 임용되지 않고, 전공영역권으로 임용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정규교수로의 임용은 주니어교수를 거친 연구자들로 이루어지며, 이와 아울러 교수자격취득 과정이었던 전통적인 하빌리타치온 제도는 폐지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을 옮기거나 최소한 2년 간 동안 추후 임용되는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근무할 것이 요구된다. 이 과정만 거치면 연구자들은 박사 학위를 받은 모교에서 주니어 교수 임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이 주니어교수 제도의 핵심 내용이며, 그 속의 근본 취지는 젊은 연구자들이 이른 나이에 대학에 취직하여, 스스로가 총괄하는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젊은 연구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에는 더 많은 학문적 역동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연방 정부는 각 주들이 주니어교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후원하며, 2002년부터 준비프로그램을 착수하고, 2005년까지 전체 3억 6천 마르크의 예산을 배정할 것을 확정하였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향후의 전망

기민련 및 기사련이 정권을 잡고 있는 주 가운데서 바이에른, 작센, 튀링엔 주는 연방교육부가 대학교육기본법을 통해 주니어교수 제도를 명문화하고, 향후 모든 대학에서 주니어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부터 하빌리타치온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자, 즉각 헌법소원을 내었다. 소원의 핵심 내용은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운용은 각 주의 권한인데, 연방정부가 각 주의 자신의 권한을 넘어 하빌리타치온 제도의 폐지를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2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교육기본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주니어교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연방이 대학교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각 주에 넘겨야 된다고 명시한 기본법(헌법) 75조 (1)항 1a 절에 위배되며 따라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 작센, 튀링엔 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를 통해 연방교육부가 독일의 전통적인 교수 임용제도인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 제도를 장기적으로 대체하고 아울러 젊은 후진 학자의 대학 임용 문

---

한국과 다른 것은, 초빙될 교수는 그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을 넓히고자 시도한 주니어교수 제도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연방은 단지 독일 대학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척도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sup>3)</sup>로 적시하였다. 헌법 소원을 낸 세 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환호를 하였고, 반면 연방교육부장관 불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주니어교수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연방과 주의 책임 및 권한의 한계에 관한 판결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규를 각 주 법 속에 마련하여 주니어교수 제도를 관철할 것을 천명하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젊은 학자들이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그 사이 이미 베를린을 비롯한 몇 주에서는 이미 주니어교수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 다른 주들은 주니어교수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65개의 대학교에서 약 1,000명의 주니어 교수들이 시범 사례로 임용되어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젊은 연구자들이 독일에서 이제 더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에서 독일로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장 현재 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니어 교수들의 지위조차 아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또 많은 젊은 연구자들은 다시 안정적인 하빌리타치온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한 바이에른, 튀링엔, 작센 주도 주니어교수 제도가 교수 임용에 필요한 학문 경력의 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지 그들 주는 하빌리타치온 제도의 폐지에 반

대하며, 두 가능성을 모두 허용하고자 할 뿐이다. 그러나 하빌리타치온 제도에 반대하는 편에서는 두 제도의 병행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으며, 하빌리타치온이 존속하는 한, 주니어교수인 연구자조차 불안정성을 벗어나기 위해 하빌리타치온을 하게 될 경향이 짙고,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니어교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주니어교수가 되었던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켐페르트(Claudia Kemper)는 훔볼트 대학교에서 초빙을 받아 벌써 C4 교수가 되었다. 그녀는 2000년에 주니어교수직을 제의받았을 때 즉각 수락하였고, 개인적으로는 하빌리타치온 제도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하빌리타치온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준비과정을 제외하고) 교수자격논문을 집필하는 데에만 1년의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또한 국제권에서는 그것이 독일어로 쓰여져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읽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기민련/기사련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 반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큰 유감을 표시하였다. 녹색당의 교육 정책 대변인 그리체 베티(Grietze Bettin)은 주니어교수 제도는 독일의 대학 체계를 “현대적이고 국제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였다”라고 말하면서, “주니어교수 제도라는 성공적인 모델이 기민련/기사련의 형식적인 반대로 속행되지 못한다면 독일에서 연구와 교수의 미래는 위협에 처할 것이다. 주니어교수 제도 모델은 각 주에 대해 교수자격 부여 과정을 줄이는 제안으로 기능할 것이며, 그때에 각 주들은 세계적인 학문공동체에서는 독일의 소국주의가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번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또 다른 측면에서 1999년 연방 교육부가 대학교육기본법을 통해 전국 대학에서 첫째 학위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 것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미 기민련/기사련이 정권을 잡은 주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해 둔 상태이다.



물론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 주니어교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연방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주 법 속에서 주니어교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간이 갈수록 주니어교수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나고 그 비율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인 하빌리타치 온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것이 주니어교수제로 대체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주니어교수제로의 완전한 이행이 가능할 지의 여부도 미리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 하빌리타치 온 제도 자체를 고수하고자 하는 측의 견해가 단순히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니어교수 제도가 학문에서도 성과급 위주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에게 아직은 익숙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하빌리타치 온과 주니어교수제를 둘러싼 논쟁은 독일 대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논쟁의 핵심에 서 있다. [20]

〈표 1〉 하빌리타치 온을 마치는 평균연령(누계, 출전: 주 2와 동일)

	33세 까지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5세 이상	평균 연령
독문학	3,8			19,2	34,6	42,3	57,7		61,5	76,9	84,6		88,4	100	40,6
역사학	3,6	10,7	17,8	32,0	42,7	50,4	71,8	78,9	96,7					100	38,7
영문학					12,5	25,0	50,0	75,0	87,5					100	38,9
법 학	24,2	36,3	40,4	55,5	70,6	76,7	85,8	91,9		94,9				100	36,2
경제학	36,6	58,5	65,8	80,4	87,7	90,1	95,0	97,0		99,0				100	35,2
심리학			19,0	23,7	42,7	61,7	66,4	80,7	85,4		94,9	100			40,5
수 학	32,0	48,0	64,0	72,0	88,0		92,0	96,0	100						34,9
물리학	10,7	17,8	26,7	46,3	60,6	74,9	82,0	83,8	89,1	90,9		94,5		100	37,4
생물학	4,8	8,0	17,7	25,8	41,9	62,9	80,6	85,4	90,2	93,4	95,0	96,6	98,2	100	38,1
기계공학					33,3	66,6								100	40,7
전자공학							20,0	40,0						100	43,8
농업학		20,0	26,6	39,9	53,2	59,9	73,3	93,3					100		39,6
평균(%)	12,7	21,7	30,0	42,4	56,3	67,2	78,3	83,3	87,0	93,2	93,8	96,0	96,9	100	39,5



〈표 2〉하빌리타치온 제도 운용에 관한 설문조사(설문대상자 326명, 출전: 주 2와 동일)

학과 및 학부	변화없이 유지	폐지	실제적 내용개혁
독문학	19,2	23,1	50,0
역사학	41,4	27,6	24,1
영문학	25,0	37,5	12,5
법 학	33,3	12,1	33,3
경제학	24,4	34,1	36,6
심리학	4,8	66,7	19,0
수 학	23,1	53,8	19,2
물리학	12,3	47,4	33,3
생물학	9,7	62,9	25,8
기계공학	33,3	-	66,7
전자공학	-	40,0	20,0
농업학	20,0	20,0	40,0
무응답(28명)		8,6	
응답자(298명) (%)	21,1	45,0	33,9
합 계(%)	63=19,3%	134 =41,1%	101 =30,9%

〈표 3〉 하빌리타치온 현황 (출전: 독일연방통계청)

연도	2001	2002	2003
연방주			
Baden-Württemberg	352	407	340
Bayern	349	369	389
Berlin	209	218	187
Brandenburg	21	28	29
Bremen	34	22	30
Hamburg	66	79	77
Hessen	157	169	144
Mecklenburg-Vorpommern	36	30	39
Niedersachsen	206	183	142
Nordrhein-Westfalen	436	432	426
Rheinland-Pfalz	76	82	74
Saarland	29	36	31
Sachsen	75	90	111
Sachsen-Anhalt	47	54	62
Schleswig-Holstein	63	65	66
Thuringen	43	38	62
Deutschland	2,199	2,302	2,209
여성 및 외국인 수			
여 성	379	498	487
외국인	108	95	102
평균연령	40,1	40,0	40,3

# 학습장애아 교육, 일반 학생과 똑같이 다루려는 미국의 책무성 시스템에 대하여

- 미국의 학습장애아를 위한 고부담 책무성 평가

정택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실장, thchung@kedi.re.kr



미국이 학습장애아 교육의 책무성을 특히 강조하게 된 것은 1983년도 미국 국무성이 발표한 '국가의 위기: 교육개혁의 긴급성(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을 발표한 이후부터이다. 이 보고서에서 당시 미국 문부성 장관은 미국의 어린이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성취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사회와 국민의 미래가 평범성의 강조 때문에 위협받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습시간의 확대, 교과서와 기타 학습자료의 개량, 보다 많은 숙제의 부과, 학생성취에 대한 기대수준 향상, 교사를 위한 기준, 봉급, 보상, 유인가의 향상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후 전국의 학교에서 교육의 기준을 높이고, 수행(Performance) 정도와 성취 결과를 측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때부터 정책입안자와 관료들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더 많은 돈을 지원하는 한편, 그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7년에 제정된 학습장애아 교육법은 주정부 교육부가 학습장애아 교육의 결과를 보고할 것(책무성)을 요구하였으며, 2001년에 발표된 NCLB법은 매년 미국의 3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진보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학습장애아에 대한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주 정부 교육부 장관 연합회는 학습장애아 등 모든 학생이 학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 하에, 학습장애아들의 교육을 일반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 연합회는 학습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에 대한 책무성 체제의 필요성과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를 재구조화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즉, 교육개혁의 기본 노선은 일반 학생은 물론 특히 학습장애아를 위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결과의 평가가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1990년대까지 특수교육서비스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이용할 자료(교육결과)에 대한 의견일치가 없었고, 교육결과 평가의 실재를 이끌어갈 개념적 모형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위치한 NCEO(National Center on Educational Outcomes)는 교육결과 평가를 이끌어갈 '교육결과 및 지표 모형을 개발하였다. NCEO는 주정부와 학교구가 교육결과 및 지표 체제에 대한 자체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글에서는 NCEO의 책무성 시스템과 이 책무성 모형에 의해 학교가 자체 책무성 체제를 개발하고자 할 때 따라갈 내용과 과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책무성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 가. 스테이크 홀더를 전면에 세우기

스테이크 홀더란 교육결과 측정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 사람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사, 장학관, 관련 서비스 제공자, 학부모, 지역사회 기관의 대표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주요 스테이크 홀더들이다. 기준과 바람직한 결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테이크 홀더를 전면에 포함시킴으로서 평가과정에 투자하고픈 생각과 참여하고 싶은 욕망을 증진시킬 수 있다.

#### 나. 결과를 측정하고 설명·보고하려는 이유의 결정

스테이크 홀더들이 교육결과를 측정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교수-학습 개선, 정책적 책무성, 대중정보(정보공개), 정책형성 등이다. 교육 결과에 관한 자료는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선에 유용하다. 실제로 교수-학습의 실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과의 지식은 교수들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변화를 고려하는 데 중요하다. 두 번째로 결과에 관한 지식은 바람직한 목적이 충족되고 있음을 교육당국에 증명하는 행위인 교육 책무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검사가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학생들이 얼마만한 수준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료가 주 교육 당국과 학교 구에 제공토록 한다. 검사 점수는 입법가나 정책입안자들이 교육에 투자한 자금으로부터 돈을 들인 만큼의 가치를 얻고 있는지 어떤지를 결정할 때 이용된다. 세 번째, 교육결과에 대한 자료는 학교교육의 결과에 관한 대중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국가 청소년들이 수학, 읽기, 과학 등 여러 과목에서 어떤 수준에 있는가에 관한 보고사항을 신문을 통해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관한 자료는 정책형성에 아주 유용하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자원할당과 교수-학습 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결과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을 반복해서 지적한다.

#### 다. 용어정의

NCEO는 교육결과(Outcome)를 개인과 학교교육경험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의한다. 교육결과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으며,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 의도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결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 결과(예, 읽기 학습)와 부정적 결과(예, 학교탈락)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도된 결과(예, 학생이 생산적인 시민이 되는 것)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예, 학생이 체포되는 것) 모두에 관심을 보인다.

지표는 비교하기 위해 교육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한다. 지표는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였는지 어떤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방법을 제공한다. 지표는 '검사점수', '활동에의 참여 수준', '학생 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각'과 같이 수 또는 어떤 형태의 표현을 말한다.

#### 라. 결과 및 지표의 개념적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가정 검토

어떤 결과 및 지표 체제든 많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 NCEO와 교육 결과의 평가에 관한 많은 토론과 논쟁에 참여한 많은 스테이크 홀더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 결과 모형은 개인 학생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과 모든 수준에서 필요하고,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여야만 한다.
- 결과 모형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의도된 결과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민감해야만 한다.
- 결과의 모형은 직접적인 결과는 물론 간접적 결과도 포함해야 한다.
-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결과에 대한 지표는 일반아동을 위한

- 지표와 통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동일해야만 한다.
- 지표는 학생의 성, 문화, 종족, 기타 여러 특성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만 한다.
- 종합적인 지표 체계는 국가 수준, 주 수준, 지역 수준의 모든 정책 결정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 종합적인 지표 체계는 결과지표와 상황적 특성, 과정 특성, 투입지표 간의 증명된 기능적 관계에 기초하여야만 한다.
- 종합적인 지표 체계는 융통적이고 역동적이며 비판과 코멘트에 반응해야 한다. 또한 확인된 요구와 교육적 투입, 상황, 과정, 결과 측정에서의 미래 발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만 한다.

**마. 결과 또는 산출 평가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의 해결**

결과 중심 책무성 체제를 설정하기 전에 많은 중요한 이슈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책무성 시스템의 개발에서 많은 혼란과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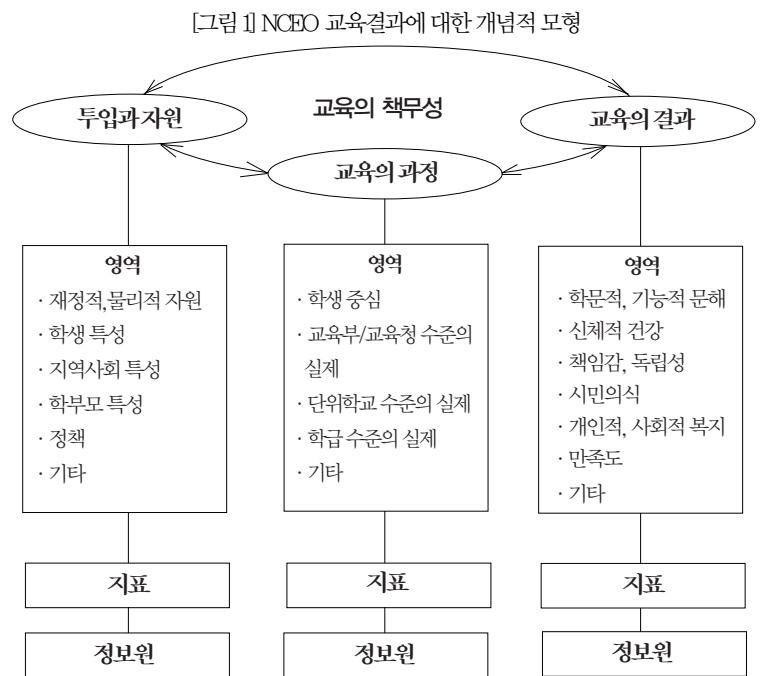
**결과 모형의 개발**

학교교육의 결과 또는 산출을 측정하기 위한 접근법에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접근법의 선택, 결과영역의 정의, 결과와 지표의 구체화 과정을 포함한다.

**가. 접근법의 선택**

NCEO는 교육 책무성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였다. NCEO는 6개의 결과 카테고리들을 확인했는데, 학문적·기능적 교양, 육체적 건강, 책임성과 독립성, 시민의식, 개인적·사회적 행복, 만족 감등이 그것이었다. 이 개념적 체제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투입과 자원이 학교, 학교구, 주마다 서로 다르고, 투입과 자원이 교육기회를 한

정하고, 교육의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투입, 과정, 결과간의 상호 교환적 관계를 조명한다. 이 그림에서 조명되는 프레임 워크는 현재 여러 주와 학교구에서 결과 평가의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결과영역 정의**

위의 그림에 보이는 교육결과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학문적·기능적 교양: 학교에서 획득한 정보를 사회에서 기능을 다하고, 목적을 성취하고, 지식을 개발하는데 이용하기
- 육체적 건강: 육체적 건강에 관련된 건전한 행동, 태도, 지식
- 책임성과 독립성: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능력을 반영하는 행동
- 시민의식: 좋은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





- 개인적 · 사회적 복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건전한 행동, 태도, 정신적 적응에 관한 지식
- 만족감: 교육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다. 지표구체화

교육결과 측정을 시도하기 전에 지표를 확인해야만 한다. NCEO 프레임 워크는 5개의 발달 수준(3세, 6세, 4학년, 8학년, 학교완성 학년)의 지표를 상술하고 있다. <표1>은 학교완성 학년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위해 확인된 지표를 열거하고 있다. 학교인사는 각 결과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에 관해서 의견일치에 이르기 위하여 자신의 학교구에서 합의 구축 과정에 종사하여야만 한다.

<표 1> 책임감 및 독립성 영역의 지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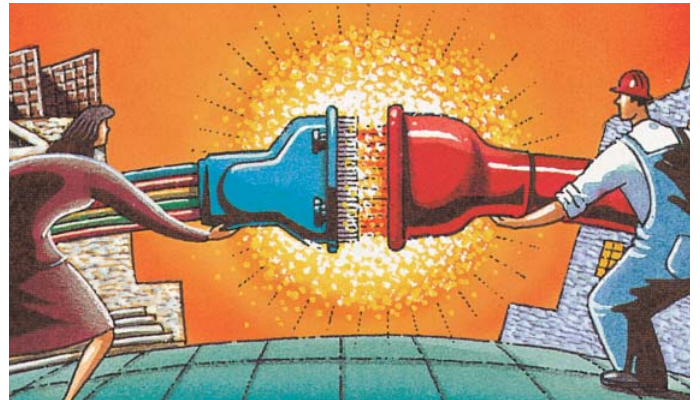
(지표-예시) 책임감과 독립성 영역 지표들-특수교육 분야

- 학생들은 나이에 적합한 독립성을 보여준다
  - 친숙하고 편안한 상황에서는 보호자로부터 잘 떨어진다
  - 활동하는 데 있어 진취적이고 끝까지 잘 따라간다
  - 어른의 관여 없이도 스스로 활동에 집중한다
  - 가족들을 포함한 타인들에게 관심을 보여준다
  -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여 받는다
  - 가족, 집단, 혹은 개인적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다

자료수집과 보고 체제 수립

가. 자료원 확인

결과 중심 책무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원천과 결과가 만족될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표 2>는 책임감 및 독립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의 예시이다. 자료



수집의 기본전제는 현존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자료수집 도구와 절차를 개발하는 것은 설계, 개발, 현장검증, 수정, 표집, 훈련, 자료수집, 자료기입, 오류체크, 분석 등의 과정을 세심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자료수집 절차와 방법을 요구하는 결과 중심 책무성 체제는 아마도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나. 정보보고 및 활용 방법 결정

교육결과에 관한 정보(책무성 체제)는 의도된 청중에게 유의미한 방법으로 보고되어야만 한다. 청중의 멤버(예, 행정가, 학교위원회 멤버)에게 진술된 책무성 체제의 목적(예, 프로그램 개선, 대중정보, 정책형성 등)에 일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 중심 책무성 체제 설치

결과와 지표 체제는 하룻밤 사이에 설치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과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책무성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고려하기 전에 개인적 또는 프로그램적 유익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시스템의 성공을 담보할 교사, 학부모, 행정가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한다. 두개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인센티브는 공개적 비

교과 기준 또는 목적 충족의 실패에 대한 제재이다. 공개적 비교는 공식적으로 학교, 학교구, 주를 나란히 전시하는 것이다. 제재는 인증의 철수, 학교 전보, 자금지원의 감축과 같은 부정적 기법을 포함한다. 비교와 제재는 둘 다 책무성 시스템의 고부담적 활용이다.

**학습장애아 교육도 일반 학생처럼 다루려는 미국의 책무성**

아이오와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 교육 당국이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표준(Standards)을 구체화하였다. (아이오와주에서의 표준은 학교구 수준에서 구체화된다.) 각 주에서는 표준이라고 부르는 것을 교육결과(Outcomes)라고 부른다. 내용 표준(Content standard)은 학생들이 숙달할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의 진술을 말하고, 수행표준(Performance standards)은 숙달 수준의 상세화를 말한다. 2001년도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50개 주에서 105개의 별개의 주 수준 평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33개의 주가 한 개 이상의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아이오와와 네브래스카주만이 주 수준의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105개의 책무성 목적으로 운영되는 평가 프로그램

중 50개의 프로그램이 표준 참조 시스템이고 23개는 디플로마 검사이며, 24개는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규준 참조검사이고, 5개는 규준 참조검사와 표준 참조검사의 결합 형태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미국 NCEO가 개발한 학교 책무성 모형은 우리나라의 특수학교는 물론 일반 모든 학교의 책무성 체제 개발에 좋은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다. 책무성 체제는 투입 중심 책무성, 과정 중심 책무성, 결과 중심 책무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교육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상급기관 등에 보고, 설명, 보고,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학습장애아 교육까지 일일이 챙겨서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 못지 않게 그 책무성을 다하려는 미국의 책무성 시스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10]

〈표 2〉 책임감 및 독립성에 관한 가능한 정보원 예시

(정보원-예시) 책임감과 독립성에 대한 가능한 정보원
- 교사들의 관찰
- 학부모 회의 기록
- 학부모 설문 조사 혹은 인터뷰
- 학생들 성취에 대한 기록
- 학생 설문 조사 혹은 인터뷰
- 학교 혹은 교육청의 기록
- 건물 내 분실물 신고 기록
- 학교 내 학생 상담 기록
- 협동학습 집단에 대한 교사의 관찰
- 개인 용모에 대한 교사의 관찰
- 책임감과 독립성에 대한 표준화 검사 결과
- 개방형 시험
- 운전을 할 수 있다

## 『교육개발』은 한국교육의 명쾌한 해답서입니다

불투명한 오늘의 한국교육, 세계의 교육현장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냈고 『교육개발』은 그 사례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염려는 『교육개발』을 읽는 중에 사라질 것입니다.



- 구독방법 : 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전화나 팩스를 통해 가능
- 연 회비 : 1계좌당 25,000원 (격월간)
- 입금계좌 : 369-01-010147(농협) / 296-22-00296-3(외환은행) -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의처 : (우)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팀  
Tel. 02-3460-0235 · Fax. 02-3460-0151 · E-mail : keditor@kedi.re.kr

# 평생학습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교육학회, 중앙일보와 공동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평생 학습대상'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이 상은 평생학습을 통한 능력 중심의 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 시상 부문: 개인, 교육기관,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4개 부문
  - 평생학습을 통해 성공한 개인 또는 학습문화 정착에 기여한 학습동아리
  - 지역 주민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헌신한 교육기관
  - 종업원의 평생교육을 통해 직장 내 학습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기업
  -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노력한 기초자치단체
- ◆ 시상 내용: 부문별 대상 및 우수상
  - 대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상금 500만원)
  - 우수상: 중앙일보 사장상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상금 300만원)
  - ※ 단, 기업 및 기초자치단체 부문은 상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
- ◆ 신청 요령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www.kedi.re.kr](http://www.kedi.re.kr) 참조
  - 접수마감: 2004년 11월 20일(당일 소인분 포함)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우편번호 137-791)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의6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대상'담당자앞 (전화: 02-3460-0354)

한국교육개발원  
CI(Corporate Identity) 선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한국교육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CI(Corporate Identity)를 개발·선포하였다